R 827 | 2017. 12. |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1/2차년도)

Current Situation of Rural Social Cohesion an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Year 1 of 2)

www.krei.re.kr

박대식 | 안 석 | 임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박대식 | 선임연구위원 | 연구 총괄, 제1~3장, 제5~7장 집필

안 석 | 부연구위원 | 제4장, 제5장 집필

임지은 | 전문연구원 | 제3장, 제5장 집필

연구보고 R827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1/2차년도)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17. 12.

발행인 | 김창길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 | 크리커뮤니케이션
02-2273-1775 cree1775@hanmail.net

ISBN | 979-11-6149-093-9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8000478)

머 리 말

최근 우리나라 농촌에서는 다문화가족 및 귀농·귀촌인의 증가, 소득 양극화의 심화, 도·농 간의 사회경제적 격차 확대, 가치관이나 생활양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과 배제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배제와 같은 사회문제는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회통합 관련 선행연구들은 전국 단위의 실태 파악 또는 지표(지수)화 작업에 주로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농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사회통합은 사회형평성의 제고,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 사회갈등의 해소 등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하여 새 정부에서도 약자를 포용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회통합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다루고 있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사회포용과 사회적 자본을 사회통합의 핵심 요소로 보고,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를 경제·사회문화·정치적 측면에서 심층 조사하고,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농촌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이 연구 결과가 농촌의 사회통합 증진과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과 집행에 참고가 되고, 관련 연구자들에게도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연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농촌 사회통합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 면접 설문조사를 대행한 리서치앤리서치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타 관련 기관 여러분의 협조에도 감사드린다. 또한 면접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 등에 참여해 주신 농촌주민과 관계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7.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요 약

연구 배경

○ 농촌 지역은 다문화가족 및 귀농·귀촌인의 증가 등으로 주민 구성원들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가치관·생활양식 차이, 이해관계 등으로 인한 분쟁과 갈등이 증가하고 있음.

○ 사회통합 약화 징표인 자살률 또한 도시에 비해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고용, 건강, 주거, 사회참여 등의 부문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최근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관련 연구나 조사, 의제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를 직접 조사·연구한 선행연구는 없음.

○ 따라서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농촌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세부목적은 ① 농촌 사회통합 실태를 주요 영역별로 파악하고, ② 농촌주민의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며, ③ 농촌 사회통합 관련 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내외의 모범사례를 조사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④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연구 방법

○ 연구 문제를 다음 다섯 가지로 설정함.

- ①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는 주요 영역별(경제, 사회·문화, 정치)로 차별성을 나타내는가?’

- ② ‘농촌주민의 사회통합 인식 수준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③ ‘농촌주민의 사회통합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④ ‘우리나라의 농촌 사회통합 관련 정책들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농촌 사회통합 관련 국내외의 모범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가?’
- ⑤ ‘농촌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FGI), 해외 출장조사, 협동연구, 전문가 의견수렴 등임.

○ 농촌 사회통합 실태와 관련 정책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문헌자료와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함. 또한 보다 상세히 농촌 사회통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응답자 810명), 조사 결과를 회귀분석하여 농촌주민의 사회통합인식 영향요인을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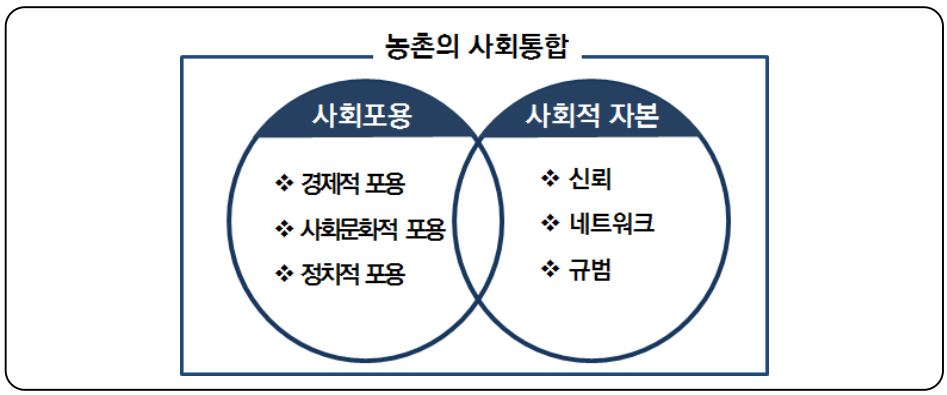
- 설문조사 내용은 경제활동 및 소득, 사회적 소통, 사회갈등, 사회적 자본과 사회 참여, 사회포용,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경험 및 향후 이용의사, 문화·여가, 정치 참여, 복지 및 삶의 질 만족도, 사회통합 인식 및 정부 건의사항, 응답자의 기본적 특성 등으로 구성됨.
- SPSS 20.0을 사용하여 설문조사 결과의 빈도 및 평균 분석, 교차표 분석, 평균차 검증(t-test, F검증),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함.

○ 3개 지역(전남 해남군 현산면, 경남 창녕군 창녕읍, 전북 진안군 마령면)에서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함. 사회통합의 정의와 구성요소, 핵심 이슈와 지표, 우선 통합이 필요한 집단이나 계층, 사회통합 저해요인, 지역 내 사회통합 성공·실패 사례, 사회통합 촉진을 위한 중앙정부·지방자치 단체·농촌주민·농촌주민조직·마을·기타 민간단체의 역할 등에 관하여 논의함.

○ 일본 고치현을 방문하여 사회통합 관련 정책 및 지역 모범사례를 조사하였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의 협동연구로 “사회통합 실태의 도·농간 비교분석”을 추진함.

○ 농촌 사회통합의 구성요인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분석틀은 다음과 같음.

〈농촌의 사회통합 구성요인〉



〈농촌 사회통합의 실태조사 분석틀(1/2차년도)〉

사회통합의 구성요소	사회통합의 영역	사회통합의 세부영역
사회포용	경제	• 소득계층 인식 및 빈곤 • 소득 양극화, 가구 경제상태 만족도 • 경제적 박탈 • 공적 연금 가입
	사회문화	• 포용 수준 • 사회갈등 • 문화·여가활동 • 사회복지
	정치	• 정치참여 • 정부의 여건·노력
사회적 자본	사회문화	• 신뢰 • 네트워크 • 규범 • 사회적 자본 종합
종합적 측면의 사회통합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

○ [경제적 측면] 농촌주민은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그 원인은 주로 일자리 및 돈벌이 기회 부족에 있다고 생각하였음. 농촌에서 소외된 계층은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중소농,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계층, 오·벽지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빈곤층 등으로 나타났고, 여성, 노인, 다문화가족, 가구소득이 낮은 응답자의 경우 경제적 박탈 수준을 높게 인식한다는 특징이 있었음.

○ [사회·문화적 측면] 범죄 경력자에 대한 포용 수준이 낮고 지역포용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음. 진보집단과 보수집단의 이념 갈등, 빈부 갈등, 고령층과 젊은층 갈등, 귀농·귀촌인과 지역 원주민 갈등, 지역개발과 환경보존의 갈등, 지자체 선거 갈등을 상대적으로 심하다고 평가하였음. 농촌은 도시에 비해 문화·여가활동 빈도가 현저히 낮았는데, 원하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이 문화·여가활동의 큰 장애요인임. 국민건강보험 가입률이나 의료시설 이용 등에 있어서 문제가 나타남. 신뢰,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 부문에서는 인식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단, 국회, 중앙정부, 시·군청과 농촌주민 간 소통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음.

○ [정치적 측면] 일부 선거의 투표율이나 정치 참여도, 군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 측면에서 과반수가 부정적으로 평가함. 사회통합 촉진에 필요한 정부의 노력으로는 지역공동체의식 조성, 지역 권력 분산, 핵심 역량 강화 등이 꼽혔음.

○ [종합적 측면] 농촌주민의 복지 및 삶의 질 만족도는 양호했으며 사회통합의 의미 가운데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사회가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음. 현재 농촌 사회통합의 수준이나 향후 사회통합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 반응보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으나, 다문화가족이나 귀농·귀촌인의 경우 일반 농촌주민에 비해 농촌 사회통합 수준을 낮게 평가함.

농촌주민의 사회통합인식 영향요인 분석

○ 농촌주민의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함. 그 결과, 사회포용 지표인 경제적 박탈, 사회갈등, 지역포용성과 사회적 자본 지표인 신뢰·네트워크 및 사회적 소통이 농촌주민의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음.

〈농촌주민의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인	Model 1		Model 2	
	Beta	t	Beta	t
성별(남자 기준)	0.10*	2.56	0.09*	2.39
나이(40대 이하 기준)				
• 50대, 60대	-0.01	-0.15	-0.03	-0.57
• 70대 이상	0.05	0.69	0.00	-0.04
교육(초졸 이하 기준)				
• 중졸	-0.09*	-2.21	-0.06	-1.49
• 고졸	0.03	0.56	0.00	-0.06
• 전문대졸 이상	-0.01	-0.17	-0.01	-0.14
소득(1,000만 원 미만 기준)				
• 1,000만 원~3,000만 원 미만	-0.02	-0.50	0.04	0.82
• 3,000만 원 이상	-0.08	-1.57	-0.02	-0.33
소득계층(하층 기준)				
• 중층	0.11**	2.88	0.04	0.92
• 상층	0.06	1.53	0.05	1.31
양극화 인식	-0.13***	-3.86	-0.07	-1.90
경제상태 만족도	0.22***	5.93	0.09*	2.24
읍·면지역(읍 기준)	-0.03	-0.96	-0.05	-1.50
결혼 상태(미혼 기준)	0.02	0.60	0.04	1.12
농가 여부(농가 기준)	-0.07*	-0.21	-0.06	-1.53
주민 유형(일반주민 기준)				
• 귀농·귀촌인	-0.07+	-1.92	-0.08*	-2.31
• 다문화가족	-0.08+	-1.68	-0.08+	-1.78
경제적 박탈			-0.11**	-2.85
사회갈등			-0.14***	-3.20
지역포용성			0.16***	4.41
신뢰·네트워크			0.15***	3.53
사회적 소통			0.10*	2.06
F	7.44***		11.30***	
R^2	0.14		0.28	

주: +는 P<.1, *는 P<.05, **는 P<.01, ***는 P<.001임.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의 문제점

○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의 경우 농업·농촌의 특성이 잘 반영되지 못했음.

○ 우리나라 농업정책에서 소농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음.

○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 농업 관련 논의·합의가 부족함.

○ 다문화가족 정책의 경우 가족 통합이나 가족 구성원의 사회적응 지원이 부족함.

○ 귀농·귀촌 관련 정책은 주민들 간의 화합을 증진하기 위한 지원이 부족함.

○ 농촌 노인 및 사회복지 관련 정책에서는 농촌주민의 노후생활 보장에 한계가 많음.

농촌의 사회통합 관련 국내외 모범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 민·관 협력 활성화 사례: 창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해남군 현산면의 민·관 협력 복지사업
→ 민·관 협력체계의 실효성 제고 필요

○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관련 사례: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 독일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 지역별로 특화된 다문화·이민자 정책 수립

○ 서비스 접근성 개선 사례: 진주시 무장애시설 인증제도와 경남의 찾아가는 산부인과, 해남교육 복지네트워크의 청소년 휴카페, 영양군종합자원봉사센터의 '짜장면 시키신 마을' 사업
→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 개선 방식의 다양화

○ 공유시설을 활용한 취약계층 포용 사례: 경기도농업기술원의 농촌마을

공동농장과 일본 고치현의 앗타카후레아이센터
→ 취약계층 포용 목적의 마을 공유시설 활용 확대

○ 지역 간 갈등을 해결하고 주민화합을 이끌어낸 사례: 가야문화권 개발, 논산시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갈등 해소 사례
→ 소통과 이해관계 조정을 통한 갈등 해결과 주민화합 도모

○ 사회적 경제와 일자리 창출 관련 사례: 사회복지법인 구리노미엔 복지농장, 서귀포귀농귀촌협동조합, 새벽 영농조합법인
→ 사회적 경제 활동을 통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 개선

○ 포용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사례: 중국의 도농 일체화 정책, 캐나다의 건강한 농촌사회를 위한 통합적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계획, 제주특별자치도의 친서민 농정시책
→ 포용성장 및 지속가능한 발전 지향

농촌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 주요 정책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경제적 측면: ① 중·소농 맞춤형 영농 지원, ② 사회적 농업의 활성화 기반 구축, ③ 농촌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추진,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농촌 사각지대 축소
- 사회·문화적 측면: ① 농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개선, ② 농촌형 무장애시설(Barrier Free) 인증제도의 단계적 추진, ③ 농촌주민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④ 면 지역 청소년·다문화가족 관련 서비스의 접근성 개선, ⑤ 귀농·귀촌인과 지역 원주민의 융화 프로그램 확대
- 정치적 측면: ① 사회갈등 조정 및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 ② 기초 자치단체의 정당공천제도 개선

ABSTRACT

Current Situation of Rural Social Cohesion an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Year 1 of 2)

Background of Research

The composition of the population in rural areas has been diversifying due to multi-cultural families, people returning from urban areas, and aging rural residents. Furthermore, rural residents are experiencing economic polarization. These changes of population composition and polarization exacerbate social conflicts and create disputes among groups and generations. Therefore, this research aimed to explore the current situation of social cohesion in rural areas and suggest policy tasks to improve social cohesion in rural areas.

Method of Research

This research employed a survey among rural residents including people who have returned to rural areas and multi-cultural families, focus group interviews, analysis of national data, overseas field survey, and investigation of existing data. The survey was conducted among 810 residents in rural areas. Three focus group interviews in which rural community representatives such as a chair of a rural women's association, a director of a welfare agency and a leader of the community participated were conducted. National data sets have been analyzed to describe the current situation of cohesion in rural areas and to compare the social cohesion level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A research team visited Kochi in Japan, to investigate exemplary cases of rural social cohesion and the related policies.

Descriptive statistics including t-test and chi-square test were conducted to elucidate the current situation of rural social cohesion. Finall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employed to identify the influential factors in the level of perceived social cohesion.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Rural social cohesion has been investigated through four aspects: economic, sociocultural, political, and general aspects. As for the economic aspect, rural residents perceived increased polarization in income due to lack of jobs and insufficient opportunities to increase income. Women, multi-cultural families, low income residents were groups who were experiencing high economic exclusion in rural areas.

In terms of the sociocultural aspect, rural residents evaluated that there were serious conflicts in rural areas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between residents and people who returned to rural areas, and between the young and the old as well as the ideological conflicts. Compared to urban counterparts, rural residents showed low participation in culture and leisure activities because of lack of related services and programs.

As to the political aspect, more than half of respondents evaluated negatively the government's efforts to solve social conflicts. As to the general aspect, rural residents responded positively to the question about the current level of rural social cohesion and the prospects of future rural social cohesion. However, multi-cultural families and people who have returned to rural areas perceived the level of social cohesion to be lower compared to rural residents.

This research also identified the influential factors that improve perceived social cohesion in rural areas. As the theory suggested, social inclusion indicators (economic exclusion, social conflicts, community inclusion) and social capital indicators (trust/network, social communication) significantly impacted the perceived social cohesion controlling socio-economic factors. Multi-cultural families and people who have returned to rural areas perceived the social cohesion level to be lower compared to rural residents controlling for socio-economic factors, which is consistent with descriptive statistics.

Reviewing current policies for rural social cohesion, we identified that social cohesion policies did not reflect the feature of rural areas. Therefore, we suggested several policies to improve rural social cohesion. First, we suggested developing policies to support small and medium size farmers, developing a basic format to support social farming, creating rural jobs for older adults, and minimizing the blind-spo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in rural areas. Second, we recommend improving rural social security councils, initiating the certification system of barrier-free community, supporting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of rural residents, improving accessibility to services for adolesce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and supporting programs that help rural residents and people who return to rural areas live in harmony. Finally, we suggested constructing local governance to deal with social conflicts and improving political parties' candidate nomination system in the local autonomy governments.

Researchers: Park Daeshik, An Sok, Lim Jieun
Research period: 2017. 1. ~ 2017. 12.
E-mail address: pds8382@krei.re.kr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 4
3. 연구의 범위와 내용 ····· 11
4.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 12

제2장 사회통합 관련 이론 검토

1. 사회통합의 개념 정의 및 차원에 관한 논의 ····· 25
2. 사회통합에 관한 이론 ····· 29
3. 본 연구의 이론적 입장 및 농촌의 사회통합에 대한 개념 정의 ··· 33

제3장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

1. 경제적 측면의 사회통합 실태 ····· 38
2. 사회·문화적 측면의 사회통합 실태 ····· 46
3. 정치적 측면의 사회통합 실태 ····· 67
4. 종합적 측면의 사회통합 실태 ····· 72
5. 실태조사 결과의 요약 ····· 76

제4장 농촌주민의 사회통합인식 영향요인 분석

1. 분석모형 ····· 81
2. 측정방법 ····· 84
3. 농촌주민의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 85
4. 소결 ····· 96

제5장 농촌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과 국내외 모범사례

1.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97
2. 농촌의 사회통합 관련 국내외 모범사례 ····· 105
3. 소결 ····· 123

제6장 농촌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1. 농촌의 사회통합 증진의 기본방향 ····· 125
2. 주요 정책 개선방안 ····· 127

제7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 139
2. 결론 ····· 143

부록

1.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에 관한 설문지 ····· 145

참고문헌 ····· 165

표 차례

제1장

<표 1-1> 농촌주민 대상 면접 설문조사 대상 지역 및 조사 완료 수 … 13
<표 1-2> 응답 농촌주민의 일반적 특성 …… 15
<표 1-3> 초점집단면접의 지역 및 대상 …… 17
<표 1-4> 농촌 사회통합 실태조사 분석틀(1/2차년도) …… 21

제3장

<표 3-1> 농촌 사회통합의 실태 지표와 측정 방법 …… 36
<표 3-2> 빈곤율(2015년) …… 39
<표 3-3> 연간 가구소득 변화 동향 …… 41
<표 3-4> 공적 연금 가입 현황 …… 46
<표 3-5>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 52
<표 3-6> 국민건강보험 가입 현황 …… 54
<표 3-7> 질병 치료 시 어려움 …… 55
<표 3-8> 대인 신뢰의식 …… 57
<표 3-9> 지역 신뢰도 …… 58
<표 3-10> 사회적 네트워크 …… 62
<표 3-11> 지역사회 규범 및 안전 …… 64
<표 3-12> 자원봉사 경험 …… 65
<표 3-13> 기부 경험 …… 65
<표 3-14> 선거 투표율 …… 67
<표 3-15> 정당 활동 정도 …… 68
<표 3-16> 우리나라 정치 현안에 대한 본인의 인지 정도 …… 68
<표 3-17> 농업 및 농촌 현안 관련 정치 참여 …… 69
<표 3-18>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 70

<표 3-19>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 정도에 대한 인식 ····· 71

제4장

<표 4-1> 다중공선성 점검 관련 통계 ····· 86
<표 4-2>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사회포용지표와 회귀분석 결과 ····· 87
<표 4-3>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 92
<표 4-4> 농촌주민의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 95

제6장

<표 6-1> 농촌 사회통합 증진의 기본방향과 주요 정책 개선방안 ·· 127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연구의 추진체계 ····· 20

제2장

<그림 2-1> 농촌의 사회통합 구성요인 ····· 33

제3장

<그림 3-1> 현재의 가구 소득계층 인식 ····· 39
<그림 3-2> 농촌사회 소득계층 양극화 ····· 42
<그림 3-3> 농촌사회 소득계층 양극화의 주된 원인 ····· 43
<그림 3-4> 농촌사회 소득계층 양극화 완화에 필요한 정책 ····· 43
<그림 3-5> 가구 경제상태 만족도 ····· 44
<그림 3-6> 경제적 박탈 실태 ····· 45
<그림 3-7> 외지 출신 구성원 이웃 포용 ····· 47
<그림 3-8> 해당 구성원들의 지역 거주 적합성 ····· 48
<그림 3-9> 집단 간 사회갈등 ····· 49
<그림 3-10> 참여 희망 문화·여가활동 ····· 53
<그림 3-11> 문화·여가활동 장애요인 ····· 53
<그림 3-12>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및 이용 의사 ····· 55
<그림 3-13> 과거에 받고 싶었으나 받지 못한 서비스 ····· 56
<그림 3-14> 집단 간 소통 ····· 59
<그림 3-15> 마을행사 추진 시 주민 간 의사소통 ····· 59
<그림 3-16> 지역사회 소속감 ····· 60
<그림 3-17> 마을공동체의식 ····· 61
<그림 3-18> 지역사회 참여 ····· 63
<그림 3-19> 사회적 자본 ····· 66

<그림 3-20> 복지 및 삶의 질 만족도 ····· 73
<그림 3-21> 사회통합의 의미 ····· 73
<그림 3-22> 농촌 사회통합의 중요 요소 ····· 74
<그림 3-23> 농촌의 사회통합 수준 평가 ····· 75
<그림 3-24> 향후 농촌의 사회통합 전망 ····· 76

제4장

<그림 4-1> 사회경제적 요인과 사회포용,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 ·· 82
<그림 4-2> 농촌주민의 사회통합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모형 ····· 83

제5장

<그림 5-1> 진주시 BF 인증 도안(Symbol) ····· 108
<그림 5-2> 경상남도 찾아가는 산부인과 ····· 109
<그림 5-3> 해남교육복지네트워크 청소년 휴카페 활동 모습 ····· 110
<그림 5-4> 마을노인들이 짜장면을 먹고 있는 모습 ····· 111
<그림 5-5>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마을 공동농장 활동 ····· 112
<그림 5-6> 고치현 쓰노정 앗타카후레아이센터 활동 ····· 114
<그림 5-7> 서귀포귀농귀촌협동조합 활동 ····· 117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우리나라 농촌은 다문화가족의 증가, 귀농·귀촌인구의 급증 등으로 인해 주민 구성원들이 다양해지고 있다. 농촌(읍·면부)의 다문화가족 수는 2015년 기준 69,759호로 읍·면부 전체 가구(3,718,448호)의 약 2% 수준이다. 농촌의 귀농·귀촌 가구 수도 2016년 기준 335,383호로 과거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1] 그리하여 농촌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이나 생활양식의 차이, 이해관계 등으로 인한 분쟁이나 갈등도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귀농·귀촌인과 지역 원주민들 간의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살률은 사회통합의 약화 징표로 인식된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국가들 중에서 1위이며, 특히 농촌(군)지역의 자살률이 도시지역의 자살률보다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명희 2017; 통계청 2013).

더구나 우리나라 농촌은 소득, 주거, 건강 등 여러 가지 부문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박대식 외 2006; 박대식·마상진 2012a). 이러한 농촌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통계자료뿐만 아니라 농촌주민 대상 의식조사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농촌사회의 "양극화는 국민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어 사회통합"(박대식·마상진 2012a: 1)과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http://kosis.kr/index/index.jsp>. 검색일: 2017. 10. 25.

사회통합은 사회형평성의 제고,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 사회갈등의 해소 등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국민대통합위원회 2014a). 그리하여 과거 우리 정부에서도 '사회통합'을 국정과제의 주요 전략으로 채택하여 여러 가지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통합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다.

'사회통합'은 새(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및 관련 위원회의 논의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5대 국정목표 중에서 사회통합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더불어 잘사는 경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이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20대 국정전략에서는 사회통합의 핵심 구성요소 또는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① 소통과 통합, ② 포용적 복지국가, ③ 균형발전, ④ 차별 없는 공정사회 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에서도 포용적 지역발전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포용적 지역발전 강화 정책 정비 및 도입', '국토 어디서나 국민의 헌법상 행복추구권이 보장되는 공간복지 실현' 부분에서 확인된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성경륭 외 2017).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사회통합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업과 농촌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정책과제는 매우 부족했다.

외국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 동향을 살펴보면, 1990년대에 들어와서 캐나다 정부는 사회통합을 다문화주의 증진을 위한 정책의제로 삼았고,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유럽연합과 각종 국제기구에서도 사회통합정책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Chan et al. 2006). 계층·세대·지역 간의 대립과 격차가 확대되고, 고용구조의 악화로 빈곤의 가능성이 증가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국가발전에 있어서 사회통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OECD 2013). 즉, 사회통합은 복지국가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관들에서 관련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해 왔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과 같은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나 대학 등에서 사회통합 관련 연구나 사회조사를 꾸준히 실시해 왔다. 그러나 사회통합 관련 선행연구들은

전국 단위의 실태 파악 또는 지표(지수)화 작업에 주로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농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 농업 및 농촌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를 직접적으로 조사·연구한 선행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과거 우리나라 농촌은 서로 신뢰하고 돕는 문화가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있던 곳이다. 이런 농촌사회의 모습은 산업화와 근대화로 인한 사회변화와 함께 크게 바뀌어왔다. 현재의 우리 농촌사회는 다문화가족 및 귀농·귀촌인의 증가, 인구의 초고령화[2],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심화, 가족 및 지역공동체의 기능 약화, 도·농 간의 사회경제적 격차 확대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과 배제(박탈)를 겪는 계층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농촌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과 배제(박탈)와 같은 사회문제는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농촌의 사회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농촌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세부적인 목적은 ①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를 주요 영역별로 파악하고, ② 농촌주민의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며, ③ 농촌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내외의 모범사례를 조사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④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 다섯 가지로 설정하였다: ①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는 주요 영역별(경제, 사회·문화, 정치)로 차별성을 나타낼 것인가?, ② 농촌주민의 사회통합 인식 수준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③ 농촌주민의 사회통합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④ 우리나

---

2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농촌(읍·면부)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1.5%이다(통계청 2017. 8. 31.).

라 농촌 사회통합 관련 정책들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농촌 사회통합 관련 국내외의 모범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가?, ⑤ 농촌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은 무엇인가?이다.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사회통합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이 사회통합 일반에 관한 것이고 농촌에 특화된 것은 별로 없다.

2.1. 사회통합 일반에 관한 연구

사회통합 일반에 관한 연구는 ① 사회통합의 측정 및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② 사회통합 지표체계 구축 및 지수화에 관한 연구, ③ 사회통합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2.1.1. 사회통합의 측정 및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임상규(2012)는 국민들이 사회갈등 및 사회통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바라는 정책적 대안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읍·면·동 행정구역 리스트' 표본프레임을 사용하여 4,001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사회통합의 구성요소를 포용, 소속감, 사회자본, 가치, 삶의 질로 보았다. 우리 사회 전반의 사회통합 수준(10점 만점 기준)을 살펴보면, '과거 5년 전'은 5.48점, '현재'는 5.97점, '향후 5년 후'는 5.99점으로 나타났다.

장용석 외(2012: 289)는 "개인주의, 국가주의, 공동체주의, 세계시민주의가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국가 간 비교를 통한 실증 분석"을 하였다. 이들은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의 5차 자료를 활용하

여 37개국 26,692명의 가치관 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의 구성요소로 신뢰, 포용성, 행복을 제시하였다.

김미곤 외(2014)는 전국 507개 조사구(지역) 내에서 3,648명을 대상으로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사회통합의 상태는 신뢰, 정체성, 자원봉사와 기부 등으로 측정하였다. 사회통합의 조건은 물질적 조건으로 경제적 조건, 삶의 기회, 각종 사회적 격차의 축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사회통합인식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여유진 외(2015)는 사회통합과 사회이동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회통합과 사회이동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전국 400개 집계구 내 4,052명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문항은 가구 및 응답자 일반사항, 일반 사회인식, 사회참여 및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 등이다. 연구 결과, 세대별로 사회통합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통합인식에는 연령, 소득계층, 주거점유형태, 고용형태 등의 귀속적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대통합위원회(2016a)는 국민이 인식하는 통합과 갈등의 수준, 주관적 인식의 변화 양상, 국민통합 저해 요인과 대응책 등을 조사하였다. 전화조사는 2,00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초점집단면접은 연령별 4개 그룹(총 32명)별로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 평가, 우리사회의 시민의식 수준 및 사회갈등관리 평가, 국민통합에 대한 인식, 사회현안 등이다.

한국행정연구원(2016)은 우리 사회의 통합 수준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및 태도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응답자 수는 8,000명으로, 동(洞)부 응답자는 6,747명, 읍·면부 응답자는 1,253명이다. 조사부문은 주관적 웰빙과 역능성, 신뢰, 사회 및 정치 참여, 사회적 소통, 관용성, 거버넌스, 공정성, 사회보장이다.

정해식 외(2016)는 우리 국민들의 사회통합 인식구조를 밝히고, 이를 사회적 갈등 인식, 박탈과 연계하여 설명하고, 사회통합 인식과 행복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조사 응답자는 3,669명(대도시 1,652명, 중소도시 1,750명, 농어촌 267명)이었다.

2.1.2. 사회통합 지표체계 구축 및 지수화에 관한 연구

노대명 외(2009)는 사회통합지수의 구성과 추이를 정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지수가 7개 영역(소득, 교육, 고용, 주거, 금융, 건강, 가족 및 연계망) 총 21개 지표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차미숙 외(2011)는 지역사회통합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지수를 산출하여 지역의 사회통합성 증진을 위한 정책적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지역사회통합지표(총 25개)를 지역사회안정 6개, 지역사회형평성 8개, 지역사회참여 6개, 지역사회 제도역량 5개로 구성하였다(객관적 지표 18개, 주관적 지표 7개).

강신욱 외(2012)는 사회통합에 대한 영역별 지수(index)를 작성하였다. 사회통합의 영역을 사회적 안정성, 사회적 결속, 사회적 형평성으로 구분하여 지표체계를 구성하고 지수화를 실시하였다. 사회적 안정성 지표는 6개로, 1인당 GDP, 기대 수명, 부양인구 비율, 자살률, 주관적 건강상태, 1인당 CO_2 배출량이다. 사회적 결속 지표는 10개로, 정치적 관심, 사회 참여, 집단 간 관계, 선거 참여, 선거 외 참여, 일반 신뢰, 기관 신뢰, 생활만족도 지표, 부패 인식, 관용이 있다. 사회적 형평성 지표는 7개로, 빈곤율, 소득 불평등, 고용률,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 실업률, 고용보호의 정도, 공공사회지출 비중이다(강신욱 외 2012).

OECD(2014)의 사회통합지표는 삶의 만족도, 관용, 제도에 대한 신뢰, 안전과 범죄, 이타적 행위로 구성되어 있다. 조병구 외(2015)는 기존의 사회통합 지표 및 지수를 보완하여 국민통합의 수준을 진단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OECD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지표를 비교해보면, 사회포용, 사회자본, 제도 기반의 모든 영역에서 1990년 이후 순위의 큰 변화 없이 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1.3. 사회통합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

노대명 외(2009)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회통합정책 수립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통합정책을 고용·소득·의료·교육·주거 보장정책으로 나누어 현황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태진 외(2010)는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정책의 필요성, 한국의 국민의식 변화와 실태,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을 "사회갈등요인의 해소, 예방, 관리를 통해 경제사회적 격차와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상태"(이태진 외 2010: 20)로 정의하고 사회통합 관련 기존 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은재호 외(2013)는 선진국과 국제기구에서 사회통합을 어떻게 정의하고, 사회통합 수준을 증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검토·분석하였다.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EU, OECD의 사회통합정책을 소개하고 국가별 비교를 실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김미곤 외(2014)는 사회통합 및 행복의 수준 및 결정요인, 사회통합과 행복 간의 관계 등을 분석하여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2.2. 농촌의 사회통합 관련 연구

박대식·마상진(2007: 83)은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를 사회적 배제론 관점에서 소득, 고용, 교육, 건강, 주거, 사회참여 부문을 중심으로"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였다.

박진도(2010: 189)는 농촌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농촌주민의 참여와 창의에 의해 농촌사회의 운명을 농촌주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내발적 발전 전략으로 수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농촌사회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으로 통합적인 발전과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주체 형성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박대식·마상진(2012b)은 ① 농촌 취약계층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② 농촌사회의 양극화와 공생발전에 관한 농촌주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③ 농촌사회의 공생발전을 위한 취약계층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송미령 외(2016)는 농촌의 취약계층을 정의하고 그들의 생활실태를 조사·분석하며, 국내외의 취약계층 지원프로그램을 검토하여, 농촌 취약계층의 생활개선을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체계의 구축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정례적 조사 설계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관련 정책을 개선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2.3. 농촌의 사회갈등에 관한 연구

2.3.1. 농업·농촌 부문의 사회갈등

김홍상·심재만(2004)은 농업 부문의 주요 갈등 사례로 한-칠레 FTA 체결 과정 갈등과 장천면 지역농협 운영개선 과정 갈등을 분석하였고, 농업 부문 갈등관리 방안을 위한 사전적 관리기제와 사후적 관리기제를 제시하였다.

김수석·마상진(2010)은 농업·농촌 부문 공공갈등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고, 농업·농촌 부문의 갈등을 관리·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①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농업·농촌의 주요 갈등을 논의하도록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것, ② 대안적 분쟁해결방안이 공공갈등 관리제도로 정착되도록 운용시스템을 확대·정비하는 것, ③ 공공갈등관리기구 전담인력과 예산 확충을 통한 실효성 제고, ④ 갈등 조정 및 해결을 위한 갈등관리 전문가와 갈등 조정자 교육 및 양성, ⑤ 공공갈등 관리제도 개선과 더불어 성공적 모범사례 창출 후 해당 시스템 확산 및 시스템 내부 행위자들의 인식과 행동양식 변화를 제시하였다.

김수석 외(2015)는 농업·농촌 분야 갈등사례 90개를 분석하여 분쟁 유형, 분쟁 성격, 분쟁 해결 방법별로 분류하였고,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을

통해 갈등 지속 및 확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제시하였다. 개별 갈등사례를 정밀 분석하고, 국내외 갈등관리 선진 사례를 제시하며, 갈등관리의 기본방향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 ①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도입 및 확대, ③ 갈등의 성격에 따라 정책당국의 적극적 해결 노력, ④ 이해당사자들로 이뤄진 민관 협치 형태의 거버넌스 운영, ⑤ 농업·농촌 분야에 적합한 갈등조정인 양성 등을 제안하였다.

2.3.2. 농촌 마을 내 사회갈등

권중섭·장우환(2011)은 갈등 개념과 관련 이론, 갈등의 원인과 관리 전략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농촌관광마을의 갈등구조를 갈등 배경, 갈등의 당사자, 갈등 원인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농촌관광마을 조성사업 관련 갈등은 그 원인이 다양하고 당사자들이 복잡하게 연관되어 단계별 진행과정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웠다. 또한 갈등의 역기능과 순기능을 모두 언급하고 있는데, 순기능으로는 갈등 당사자를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 구성원 간의 조직력이나 결속력을 증대시켜 사업의 성과를 배가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점, 갈등해소 과정을 통한 상호간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개방적 상호관계 형성과 대화 및 타협 등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마을공동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기능도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귀농인과 원주민의 갈등을 다룬 송인하(2016)의 연구에서는 귀농인을 친환경농업적 농촌성을 가진 집단으로, 원주민은 관행농업적 농촌성을 가진 집단으로 구분하여 그 갈등의 내용과 갈등 해결 방식을 연구하였다. 귀농인들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이나 영농활동에서의 가치 갈등은 겪지만 그들이 마을공동체로 편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주민의 권한을 인지하여 양보나 회피 같은 갈등 해결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주진 외(2015)는 찬반으로 나누어진 큰 공공갈등을 경험한 지역에서는 갈등 후유증이 남아 이후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정성적 기능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하며, 갈등 후 지역공동체 회복

을 위한 제도적, 절차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윤성이 외(2016)는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일상생활 갈등 사례를 추출하고 이를 갈등 환경, 갈등 행위, 갈등 결과 등의 사례 분석틀로 분석하였는데, 농촌의 경우 원주민과 이주민 간 갈등이 두드러졌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나 지원 등과 관련된 갈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4.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전국 단위의 실태 파악 또는 지표(지수)화 작업에 주로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농촌의 사회통합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농촌의 사회통합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선행연구는 전혀 없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관련 연구(예를 들면, 정해식 외 2016; 여유진 외 2015)에서는 농촌을 군 지역으로 한정하여 아주 간략하게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전체 농촌(읍·면부)에 대한 실태는 알 수가 없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 관련 연구(한국행정연구원 2016)에서는 읍·면부의 자료가 본문에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통계 결과표로만 제시되고 있다. 더구나 읍·면 지역 조사 대상자의 기본적인 특성 등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통합을 조사·연구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의 증가, 귀농·귀촌인의 급증, 사회서비스 접근성 문제(예를 들면, 서비스 대상자들이 넓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고 대중교통이 불편함), 농업의 계절적 특성, 농촌인구의 초고령화와 같은 농업 및 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한다는 점에서 관련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이 있다. 그리고 농촌주민의 관점에서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점에서도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본 연구는 기존 자료의 분석, 농촌주민 대상 설문조사, 초점집단 면접, 국내외의 모범사례 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과 같은 다양한 조사방법을 활용하여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를 조사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더구나 새 정부의 국정목표 및 국정전략과 관련하여 농촌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선행연구들과 차이점이 있다.

3. 연구의 범위와 내용

3.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 농촌의 범위는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을 말한다. 사회통합의 구성요소는 사회포용, 사회적 자본, 종합적 측면의 사회통합으로 구분하였다. 사회통합의 영역은 ① 경제적 측면, ② 사회·문화적 측면, ③ 정치적 측면으로 나누었다. 그리하여 사회포용은 경제·사회문화·정치적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사회적 자본은 사회문화 영역에 초점을 두었다. 종합적 측면의 사회통합은 복지 및 삶의 질 만족도, 사회통합의 의미, 농촌 사회통합 수준의 평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1/2차년도)는 일반 농촌주민에 초점을 두고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만, 최근 농촌사회 변화의 핵심요인이 되고 있는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은 1/2차년도(2017년) 연구에서는 일반 농촌주민과의 비교를 위한 준거집단으로 조사하여 활용하였다. 2/2차년도(2018년) 연구는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 대상 심층연구이다.

3.2. 연구의 주요 내용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연구의 범위와 내용,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를 다루었다. 제2장에서는 사회통합 관련 이론을 ① 사회통합의 개념 정의 및 차원에 관한 논의, ② 사회통합

에 관한 이론, ③ 본 연구의 이론적 입장 및 농촌의 사회통합에 대한 개념 정의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를 경제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정치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농촌주민의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농촌 사회통합 관련 국내외의 모범사례를 조사·정리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농촌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기본 방향과 정책과제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제7장에서는 연구를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하였다.

4.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4.1.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FGI), 해외 출장조사, 협동연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이다.

4.1.1. 문헌조사

문헌조사에서는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농촌진흥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과 같은 기관의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였고, 기타 국내외의 문헌이나 통계자료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외국의 관련 문헌은 기존 자료 정리,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4.1.2. 설문조사

□ 설문지 작성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에 관한 농촌주민 대상 설문지는 경제활동 및 소득, 사회적 소통, 사회갈등, 사회적 자본과 사회참여, 사회적 포용,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경험과 향후 이용 의사, 문화·여가, 정치참여, 복지 및 삶의 질 만족도, 사회통합 인식 및 정부 건의사항, 응답자의 기본적 특성 등에 관한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조사 방법 및 일정

자료 수집을 위해서 농촌주민 810명(일반 주민 608명, 다문화가족 101명, 귀농·귀촌인 101명 포함)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 설문조사는 2017년 8월 7일부터 9월 20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Research & Research)에 위탁하여 이루어졌다.

전국의 10개 시·군에서 각각 2개 읍·면(총 20개 읍·면)을 표집하였다. 그리고 4개 권역(경기·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에서 읍·면의 순 이동인구 비율[3]을 감안하여 10개 시·군의 20개 읍·면을 선정하였다<표 1-1>.

〈표 1-1〉 농촌주민 대상 면접 설문조사 대상 지역 및 조사 완료 수

권역	시·군	읍·면	조사 완료 수(명)
경기·강원권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46
		강상면	42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41
		북평면	40

[3] 순 이동인구 비율은 <(전입인구 - 전출인구)/주민등록인구×100>로 계산하였다. 읍·면의 표본 추출에 순 이동인구 비율을 감안한 것은 이 지표가 읍·면 인구의 고령화, 과소화 정도를 상당히 반영하기 때문이다.

(계속)

권역	시·군	읍·면	조사 완료 수(명)
충청권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40
		백곡면	40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40
		부적면	40
호남권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40
		운주면	40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41
		석곡면	40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40
		북평면	40
영남권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40
		북안면	40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42
		감천면	38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40
		궁류면	40
합 계			810

□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 응답 농촌주민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거주 지역은 읍 지역이 40.5%, 면 지역이 59.5%이며, 성별은 남성이 45.8%, 여성이 54.2%였다. 연령은 '70대 이상'이 34.3%로 가장 많고, 40대 이하가 25.3%, 50대가 22.6%, 60대가 17.8% 순이었다. 농가는 68.8%이었고, 가구소득은 '1,000만 원~3,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49.5%로 가장 많았다. 농촌주민 유형은 일반 주민이 75.1%, 귀농·귀촌인이 12.5%, 다문화가족(여성결혼이민자)이 12.5%이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36.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초등(소·국민)학교 졸업'이 26.4%, '전문대학 졸업 이상'이 14.9% 순이었다. 동거 가족 수(본인 포함)는 '2명'이 42.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명'이 20.6%였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81.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사별'이 14.9%였다<표 1-2>.

〈표 1-2〉 응답 농촌주민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 분		빈도	비율
거주 지역	읍	328	40.5
	면	482	59.5
성별	남성	371	45.8
	여성	439	54.2
연령	40대 이하	205	25.3
	50대	183	22.6
	60대	144	17.8
	70대 이상	278	34.3
농가 여부	농가	557	68.8
	비농가	253	31.2
가구소득	1,000만 원 미만	253	31.2
	1,000만 원~3,000만 원 미만	401	49.5
	3,000만 원 이상	156	19.3
농촌주민 유형	일반 주민	608	75.1
	귀농귀촌인	101	12.5
	다문화가족(여성 결혼이민자)	101	12.5
학력	무학	60	7.4
	초등(소·국민)학교 졸업	214	26.4
	중학교 졸업	119	14.7
	고등학교 졸업	296	36.6
	전문대학 졸업 이상	121	14.9
동거 가족 수 (본인 포함)	1명	126	15.6
	2명	344	42.5
	3명	104	12.8
	4명	167	20.6
	5명 이상	69	8.5
결혼 상태	미혼	18	2.2
	기혼	663	81.9
	사별	121	14.9
	이혼·별거	8	1.0

□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방법

설문조사 결과는 SPSS 20.0을 사용하여 빈도, 평균, 교차표 분석, 평균차 검증(t-test, F검증),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4.1.3. 초점집단면접

초점집단면접(FGI)은 전국의 3개 지역(전남 해남군 현산면, 경남 창녕군 창녕읍, 전북 진안군 마령면)에서 농촌복지 관련 공무원, 농촌복지 현장 전문가 및 실천가, 사회복지단체, 사회봉사단체, 농업인단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 지역 언론인, 귀농·귀촌인, 여성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표 1-3>.

초점집단면접에서 주로 다루어진 내용은 ① '사회통합'이란 무엇인가? 어떤 것이 사회통합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가? 사회통합의 주요 구성요소는? 사회통합의 개념 정의는?, ② 농촌의 사회통합 논의에서 핵심적 이슈나 지표는 무엇인가? 농촌의 사회통합을 경제·사회문화·정치적 영역으로 나눌 경우에 각 영역에서 특히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③ 농촌의 사회통합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통합되어야 할 집단이나 계층은 누구인가? 농촌에서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소외되거나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④ 농촌에서 사회갈등이 가장 심한 집단이나 영역은 무엇인가?, ⑤ 농촌 지역사회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⑥ 농촌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촌주민, 농촌마을, 주민조직, 기타 민간단체 등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 ⑦ 농촌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⑧ 농촌의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해당 면 또는 군의 성공사례 또는 실패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등이다.

〈표 1-3〉 초점집단면접의 지역 및 대상

지역	면접일	초점집단면접 대상자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2017. 6. 7.	농촌복지 담당 공무원: 2명 농촌복지 현장 전문가: 3명 농업인단체 회장: 2명 사회봉사단체 회장: 1명 귀촌인: 1명 여성 결혼이민자: 1명 (총 10명)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2017. 6. 15.	농업정책 담당 공무원: 1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및 간사: 2명 사회복지단체: 4명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명 (총 8명)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2017. 9. 27.	농촌복지 현장 실천가: 1명 지역신문 국장: 1명 청소년복지 관련 단체: 1명 귀농인: 1명 여성 결혼이민자: 1명 (총 5명)

4.1.4. 해외 출장조사

일본 농촌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 및 지역 모범사례를 조사하기 위하여 2017년 8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연구책임자가 일본 고치현을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4.1.5. 협동연구

전국 단위 사회통합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협동연구를 추진하였다. 사회통합 관련 기존 실태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회통합 실태의 도·농 간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협동연구는 본 연구에서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 외국의 모범사례 등에 활용하였고, 자료집(『사회통합 실태의 도·농 간 비교 분석』)으로도 발간한다.

이 자료집은 ① 서론, ② 2차 자료를 활용한 사회통합 현황, ③ 도·농 간 사회통합 인식 실태 비교, ④ 도·농 간 사회적 자본과 갈등 인식 실태 비교, ⑤ 도·농 간 박탈 실태 비교, ⑥ 도·농 간 행복 실태 비교, ⑦ 국내외 사회통합 정책과 우수 사례, ⑧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4.1.6.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농업인단체, 귀농·귀촌인, 여성 결혼이민자, 농촌복지 관련 교수, 지자체의 사회통합 관련 담당자, 관련 연구기관의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관련 연구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과 연구정보를 교류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과는 사회통합 실태조사, 사회통합 지표, 선행연구 등에 관한 연구정보를 교류하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와 관련 선행연구 등에 관한 연구정보를 교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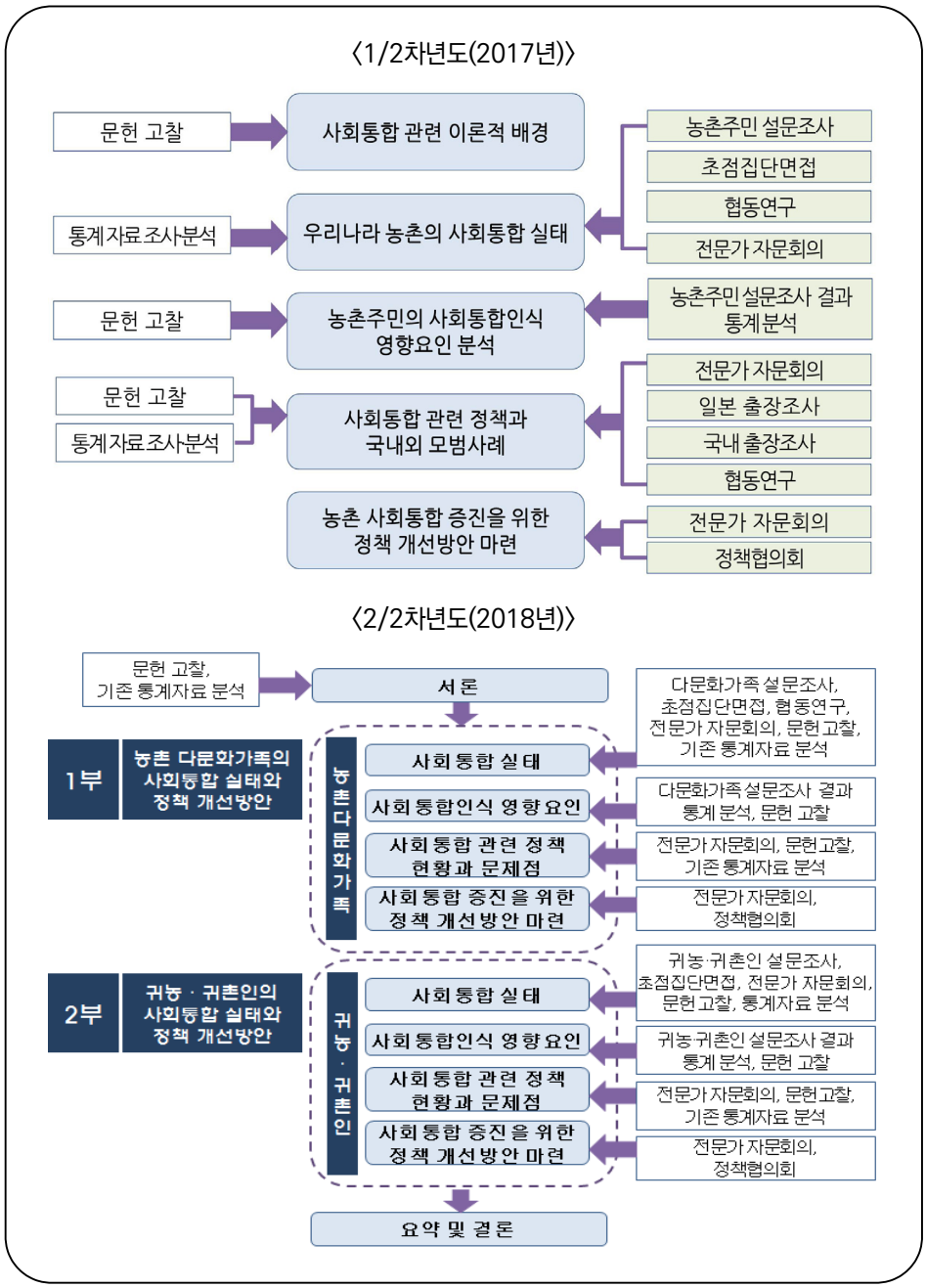
4.2. 연구 추진체계 및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분석틀

<그림 1-1>에는 본 연구의 추진체계가 도식화되어 있다. 1/2차년도(2017년)에는 사회통합 관련 이론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는 농촌주민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 협동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통계자료 조사·분석 등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그리고 농촌주민의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 사회통합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농촌 사회통합 관련 국내외 모범사례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거쳐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2/2차년도(2018년)에는 농촌의 사회 변화와 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집단인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심층연구를 실시한

다. 2/2차년도(2018년) 연구의 제1부에서는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을 다루고, 제2부에서는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을 다룰 계획이다.

<표 1-4>에는 1/2차년도(2017년) 연구에 있어서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 조사 분석틀이 사회통합의 구성요소, 사회통합의 영역, 사회통합의 세부영역, 지표, 자료수집 방법으로 나누어 제시되어 있다. 사회통합의 구성요소는 사회포용과 사회적 자본으로 구분하였다. 사회포용에 있어서 사회통합의 영역은 경제, 사회문화, 정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사회포용의 경제적 측면의 세부영역은 소득계층 인식 및 빈곤, 소득 양극화, 가구 경제상태 만족도, 경제적 박탈, 공적 연금 가입으로 구분하였다. 사회포용의 사회문화적 측면의 세부영역은 포용 수준, 사회갈등, 문화·여가활동, 사회복지로 구분하였으며, 사회포용의 정치적 측면의 세부영역은 정치 참여, 정부의 여건 및 노력으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자본에 있어서 사회통합의 영역은 사회문화 영역에 초점을 두었으며, 세부영역은 신뢰, 네트워크, 규범, 사회적 자본 종합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농촌주민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종합적 측면의 사회통합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림 1-1〉 연구의 추진체계



〈표 1-4〉 농촌 사회통합 실태조사 분석틀(1/2차년도)

사회통합의 구성요소	사회통합의 영역	사회통합의 세부영역	지표	자료수집 방법
사회포용	경제	소득계층 인식 및 빈곤	가구 소득계층 인식	본 연구의 설문조사
			빈곤율	협동연구(김태완 외 2017)
			소외·배제 계층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 및 전문가 자문회의
		소득 양극화	가구소득 양극화	본 연구의 문헌조사
			농촌사회의 소득계층 양극화	본 연구의 설문조사
			농촌사회 소득계층 양극화의 주된 원인	본 연구의 설문조사
			농촌사회 소득계층 양극화에 필요한 정책	본 연구의 설문조사
		가구 경제상태 만족도	가구 경제상태 만족도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경제적 박탈	경제적 박탈 실태	본 연구의 설문조사
		공적 연금 가입	공적 연금 가입	본 연구의 문헌조사 (한국행정연구원 2016)
	사회문화	포용 수준	개인의 포용 수준	본 연구의 설문조사
			지역의 포용 수준	본 연구의 설문조사
		사회갈등	집단 간 사회갈등	본 연구의 설문조사
			사회갈등이 가장 심한 집단이나 영역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 및 전문가 자문회의
			사회갈등 및 사회통합 저해 요인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 및 전문가 자문회의
		문화·여가활동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본 연구의 문헌조사 (농촌진흥청 2017)
			참여 희망 문화·여가활동	본 연구의 설문조사
			문화·여가활동 장애요인	본 연구의 설문조사
		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 가입 현황	본 연구의 문헌조사 (농촌진흥청 2017)
			질병 치료 시 어려움	본 연구의 문헌조사 (농촌진흥청 2017)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및 이용 의사	본 연구의 설문조사
			과거에 받고 싶었으나 받지 못한 서비스	본 연구의 설문조사
	정치	정치참여	선거 투표율	본 연구의 문헌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연도)
			정당 활동	본 연구의 문헌조사 (한국행정연구원 2016)

(계속)

사회통합의 구성요소	사회통합의 영역	사회통합의 세부영역	지표	자료수집 방법
사회포용	정치	정치참여	정치 현안 인지 정도	본 연구의 문헌조사 (한국행정연구원 2016)
			농업 및 농촌 현안 관련 정치 참여	본 연구의 설문조사
			정책 건의사항	본 연구의 설문조사
		정부의 여건·노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본 연구의 문헌조사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e-나라지표)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	본 연구의 문헌조사 (한국행정연구원 2016)
			사회통합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 및 전문가 자문회의
사회적 자본	사회문화	신뢰	대인 신뢰의식	협동연구(김태완 외 2017)
			지역 신뢰도	본 연구의 설문조사
		네트워크	집단 간 소통	본 연구의 설문조사
			마을행사 추진 시 주민 간 의사소통	본 연구의 설문조사
			지역사회 소속감	본 연구의 설문조사
			마을공동체 의식	본 연구의 설문조사
			사회적 네트워크	본 연구의 설문조사
			사회참여	본 연구의 설문조사
		규범	지역사회 규범 및 안전	본 연구의 설문조사
			자원봉사 경험	본 연구의 문헌조사 (통계청 2017)
			기부 경험	본 연구의 문헌조사 (통계청 2017)
		사회적 자본 종합	사회적 자본 종합 척도	본 연구의 설문조사
종합적 측면의 사회통합			복지 및 삶의 질 만족도	본 연구의 설문조사
			사회통합의 의미	본 연구의 설문조사
			농촌 사회통합의 중요 요소	본 연구의 설문조사
			농촌 사회통합 수준 평가	본 연구의 설문조사
			향후 농촌의 사회통합 전망	본 연구의 설문조사

4.3. 2/2차년도(2018년) 연구 추진계획

4.3.1. 연구 목적

2018년도(2/2차년도) 연구의 주요 목적은 ①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를 파악하고, ②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 영향요인을 분석하며, ③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④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4.3.2. 연구 방법

2018년도(2/2차년도)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고찰, 기존 통계자료의 조사 및 분석, 면접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 국내외 모범사례 조사, 협동연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문헌고찰을 위해 국내외의 관련 문헌을 수집하고 검토할 것이며, 면접 설문조사의 경우 다문화가족 500명, 귀농·귀촌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이다. 초점집단면접(FGI) 시 사회통합 관련 전문가, 공무원, 농업인단체, 사회복지사, 다문화가족, 귀농·귀촌인, 농촌주민, 다문화가족 및 귀농·귀촌인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회통합 관련 현황, 문제점, 정책 개선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내외 모범사례로는 다문화가족 및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관련 사례를 수집할 것이며, 기존자료 정리, 인터넷 검색, 국내외 출장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 원고 위탁도 활용할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협동연구를 실시하여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의 도·농 간 비교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전문가 의견 수렴은 연구협의회, 정책토론회 등을 활용할 것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과 연구정보를 교류할 계획이다.

제2장 사회통합 관련 이론 검토

1. 사회통합의 개념 정의 및 차원에 관한 논의

사회통합(social cohesion)[4]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사용한 사회학자는 뒤르켐(Emil Durkheim)이라고 알려져 있다(Berger-Schmitt 2000). 뒤르켐은 사회통합을 사회구성원들 간의 상호의존, 공유된 충성심(shared loyalties)과 연대(solidarity)로 파악하였다(Jenson 1998).

파슨즈(Talcott Parsons)나 머튼(Robert Merton)과 같은 기능주의(functionalism) 사회학자들은 사회통합을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사회통합은 사회적 동의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젠슨(Jenson 1998)은 사회통합을 5가지 차원(① 소속감·고립, ② 포용·배제, ③ 참여·비개입, ④ 인정·거부, ⑤ 정당성·비정당성)으로 구분하였다.

---

4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은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및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과 구별할 수 있다. 여유진 외(2014: 58)에 따르면,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 관련되는 다양한 제도와 사회적 관계에 통합되고, 접근할 수 있는 정도”를 지칭한다. 이에 반해서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은 “사회구성원들이 각각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조화롭게 살도록 하는 것”(여유진 외 2014: 64)을 의미한다.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은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국내에서도 사회통합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social cohesion을 지칭”하고 있다(여유진 외 2014: 68). 노대명 외(2009: 3)는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을 “다양한 특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로 보았다.

버나드(Bernard 1999)는 사회통합의 활동영역을 경제적 영역, 정치적 영역, 사회문화적 영역으로 나누고, 관계의 특성을 공식적(formal) 관계와 기본적(substantial) 관계로 나누어서 사회통합의 유형을 6가지로 구분하였다. 경제적 영역은 포용·배제, 평등·불평등으로 구분되며, 정치적 영역은 정당성·비정당성, 참여·수동성으로, 사회문화적 영역은 수용·거부, 소속감·고립으로 구분하였다.

라줄톤 외(Rajulton et al. 2007)는 사회통합의 영역을 경제 영역, 정치 영역, 사회문화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사회통합의 차원은 포용(inclusion), 평등(equality), 정당성(legitimacy), 참여(participation), 인식(recognition), 소속감(belonging)으로 구분하였다.

유럽사회통합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Social Cohesion 2004: 3)는 사회통합을 “격차를 최소화하고 양극화를 예방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복지를 보장하는 사회적 역량”이라고 정의하였다. 사회통합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사회·경제·문화·정치적 통합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라 보았다.

찬 외(Chan et al. 2006)는 사회통합이 2개 차원(수평적 차원과 수직적 차원)과 2개 요인(주관적 요인과 객관적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통합의 수평적 차원은 사회 안에서의 개인이나 집단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데 반해서, 수직적 차원은 국가와 시민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 사회통합의 주관적 요인은 타인을 돕거나 협조하려는 의지, 소속감이나 신뢰 등을 나타내고, 객관적 요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실제적인 참여와 협력을 나타낸다.

김미숙 외(2012: 29)는 사회통합을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 공동체에의 소속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을 의미”(김미숙 외 2012: 29)한다고 정의하였다.

한상진(2013: 45)은 사회통합을 “갈등이 적대적 분열로 질주하지 않고 포용적인 공존의 에너지로 작동하도록 인도하는 일련의 제도적 메커니즘을 뜻한다”고 보았다. 소극적 사회통합은 의도치 않았던 부산물을 관리하여 사회 안정을 유지하려는 것이며, 적극적 사회통합은 그 결과를 만들어

내는 생산과정에 대응하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한상진 2013).

김미곤 외(2014: 36)는 사회통합을 “한 사회의 공동의 목표를 향해 조화롭게 결속된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지은구·김민주(2014: 60)는 사회통합을 “구성원들의 신뢰와 연대감을 형성하고, 경제적 평등과 형평성의 강화를 통한 사회적 포용을 증진시키며, 정치사회적 참여를 위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자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이재열 외(2014)는 사회통합에 대한 개념과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에, ‘갈등관리 제도’와 ‘사회의 질’ 개념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사회통합의 개념과 논리를 제안하였다. 소극적 의미의 사회통합은 “개인이나 집단 간 균열과 갈등, 배제의 원인이 효과적으로 해소되어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적극적 의미의 사회통합은 “높은 수준의 사회의 질을 유지하는 사회”(이재열 외 2014: 130)라고 주장하였다.

전태국(2014: 313)은 사회통합을 “모든 사람들이 권리와 존엄의 평등에 기초하여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가치, 제도, 관계를 증진하는 동적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FGI)과 전문가 자문회의 등에서 농촌의 다양한 구성원과 농촌복지 및 사회통합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사회통합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파악하였다(다음 페이지의 관련 내용 참조 요망). 사회통합에 대한 개념 정의는 다양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참여, 소통, 연대, 불신 해소(신뢰) 등이 강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 전문가 자문회의 등에서 파악한 사회통합의 개념 정의〉

○ 작은 지역사회든, 마을이든, 조직이든 공동체 공통의 목표와 역할이 잘 분담되어 있는 것이 사회통합의 중요한 요소이다. 몇몇 사람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각자의 역량에 맞게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면 단위 지역의 사회봉사단체가 훌륭한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 생각한다(농촌복지 전문가).

○ 사회통합 논의에서는 공동의 가치, 정체성, 사회적 연대가 중요하다. 필요한 것들로 서로 연대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사회통합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농촌복지 현장 실천가).

○ 사회통합은 소통의 문제라고 본다. 어떤 제도를 만들 때, 예를 들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들 때도 관에서 뽑아서 하는 사례가 많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건이 관 주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나 조직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다. 지역사회에 어떤 구성원들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구성원들의 욕구가 각 곳에 전달되는 구조가 되어야만 사회통합이 될 수 있다. 어떤 위원회를 만든다면 관에서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목적으로 이런 단체를 꾸리려고 한다고 알리고 여기에 참여를 원하는 단체나 사람은 누구나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한다. 어떤 분야는 많이 참여하게 하고 다른 쪽은 그렇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회통합의 첫걸음이다(민간교육복지 실무책임자).

○ 개인 간,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소통과 이해를 기반으로 모든 것이 좋은 쪽으로 나가는 구조가 됐을 때 사회통합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장).

○ 사회통합은 서로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조정하면서 한 사회가 충돌 없이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라 본다. 사회통합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통합이 제대로 이뤄질 듯하다(농민단체장).

○ 젊은 층과 고령층이 잘 어우러져 소통이 잘 되어야 사회통합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여성단체장).

○ 불신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이뤄져야 사회통합이 될 수 있을 듯하다. 또한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지, 이러한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그 결과를 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야 사회통합이 될 듯하다(귀촌인).

○ 농촌사회의 통합이라는 것은 다시 젊은 사람들도 많아져 노인들과 함께 전체 계층이 어우러지는 모습이 재조성되어야 가능할 듯하다. 흔히 농촌을 노인들만 있는 곳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상업적인 모델이 매우 취약해서 쉽게 말해 먹고 살기 어려운 곳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해야만 살아가는 방법이나 조직적인 부분에서나 통합이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목사).

2. 사회통합에 관한 이론

2.1. 사회적 포용과 배제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은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개념이다. 젠슨(Jenson 1998)은 사회적 포용의 가장 중요한 영역은 사회적 경제임을 강조하였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잇는 연결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최근 국내외 도시 관련 연구나 실천에서 포용도시(inclusive city)라는 개념이 논의되고 있다(박인권 2015; 황선아 외 2016). 그리고 포용성장(inclusive growth)은 국제적 이슈가 되어 포용발전지수(inclusive development index)를 생산하여 발표하고 있다(World Economic Forum 2017). 그리고 새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으로 포용성장(inclusive growth)과 포용국가(inclusive state)가 강조되고 있다. 윤성주(2014: 24)는 포용성장은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기회의 균등: equalizing opportunities), 이와 같은 경제성장으로부터의 물질적·비물질적 혜택이 전 사회구성원에 걸쳐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을 강조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정우(2016: 16)는 “포용성장의 핵심 내용은 밑으로부터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복지를 확충하며, 지나치게 낮은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그는 우리나라의 성장패턴을 “부채주도, 수출주도에서 소득(임금)주도, 내수주도의 방향”(이정우 2016: 17)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성경륭 외(2017)는 포용국가의 특징으로 ① 지배구조는 국가－시장－사회의 협치, ② 정책 노선으로는 선분배－후성장, 분배-성장 선순환, ③ 정책 중점 면에서는 포용성, 효용성, 유연성, ④ 시장 구조 면에서는 독과점 해소, 대·중소기업 협력 및 비정규직 최소화, ⑤ 사회경제적 결과에 있어서는 불평등 축소, 중산층 확대, 빈곤 감소, 성장잠재력 증가, 저출산 해소, 자살률 감소 등을 강조하였다. 특히, 성경륭 외(2017: 67)는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를 한

국형 사회적 시장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사회경제적 포용성·혁신성·유연성을 증진시키는 국가를 혁신적 포용국가"라고 주장하였다.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70년대이고, 1980년대에 이르러 유럽 국가들의 주요 정책의제로 자리 잡았다(김안나 외 2008; 지은구·김민주 2014).

센(Sen 1998)은 사회적 배제가 빈곤과 관련이 깊지만 빈곤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버만(Berghman 1998)은 사회적 배제는 ① 시민통합을 증진시키는 민주적·법적 체계의 부족, ② 경제적 통합을 증진시키는 노동시장의 부족, ③ 사회통합을 증진시키는 사회복지체계의 부족, ④ 인간 상호 간의 통합을 증진시키는 가족과 지역사회체계의 부족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힐스 외(Hills et al. 2002)는 사회적 배제의 원인은 ① 개인적 행동과 도덕적 가치, ② 제도적 체계, ③ 권리의 부족이나 차별이라고 파악하였다. 사회적 배제 이론에서는 빈곤 현상의 동태적 측면, 관계적 측면, 다차원성 등이 강조된다(강신욱 외 2005).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사회구조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박탈과 결핍·불이익을 당해 사회·경제·정치 활동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침해당하는 상황"(박대식·마상진 2007: 9)을 지칭한다.

2.2.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은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의 중요한 구성요인이다. 즉, 사회적 자본은 사회통합 증진에 있어서 근본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다(Berger-Schmitt 2000).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다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적 자본은 사회 또는 공동체 내의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접근이 가능한 내재되어 있는 자원을 지칭한다.

연구자의 분야와 관심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다양한 특성이 제시되고 있

지만, 기존의 정의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사회적 자본은 인지적인(cognitive) 요인과 구조적(structural) 요인을 포함한다. 인지적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 속한 집단이나 다른 구성원에 대한 태도나 가치와 같은 보다 추상적인 특성을 의미한다. 구조적 사회적 자본은 사회 구성원을 연결하거나 협력을 촉진하는 집단의 특성을 의미한다.

학자에 따라 사회적 자본을 개인적(individual) 수준과 집단적(collective) 수준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개인적 수준의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연계(social connections)나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s)를 의미하고, 집단적 수준의 사회적 자본은 지역사회의 신뢰 정도, 집단의 응집력 등을 의미한다(Almedom 2005; Ferlander 2007; Whitley & McKenzie 2005).

사회적 자본 관련 대표적 학자들의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집단과 개인 수준 모두에서 사회적 자본을 이해한 부르디에(Bourdieu 1986)는 사회적 자본을 상호 인정의 다소 제도화된 지속가능한 관계망을 소유하는 것과 관련된 자원의 집합으로 파악하고, 사회적 자원의 구조적 요인을 강조하였다. 즉, 부르디에(Bourdieu 1986)는 네트워크를 사회적 자본의 핵심으로 파악하였다.

콜만(Coleman 1988)은 집단과 개인 수준에서 사회적 자본을 접근하였으며, 사회적 자본은 사회구조적 부분과 사회 구성원의 행동을 촉진하는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구조적 부분은 정보채널과 사회관계망과 같은 사회적 자본의 구조적 요인을 의미하며, 사회 구성원의 행동을 촉진하는 부분은 책임, 기대, 구조에 대한 신뢰, 그리고 사회적 규범으로서 인지적인 요인을 의미한다.

집단 수준의 사회적 자본의 역할과 형태에 관심을 두었던 푸트남(Putnam)은 사회적 자본을 상호수혜를 위한 협동과 협력을 촉진하는 사회조직의 특성이라고 정의하였다. 푸트남(Putnam)은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로 신뢰, 네트워크, 규범을 강조하였다(Putnam 1993).

사회적 자본에 개인 수준으로 이해한 포르테스(Portes 1998)는 사회적 자본이 사회 네트워크 또는 사회구조 안에서 구성원(membership)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팔담(Paldam 2000)은 사

회적 자본이 신뢰, 협동, 네트워크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사회적 자본을 개인 수준으로 접근하는 학자들은, 사회적 자본을 사회 네트워크나 사회적 지지와 같은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하였다(Ferlander 2007; Nyqvist et al. 2006). 개인은 네트워크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자원에 접근할 기회가 증가하며, 이로 인하여 사회적 지원, 정보 제공, 또는 구직 기회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집단적 수준에서의 사회적 자본은 집단이나 지역사회의 특성, 규범, 신뢰, 시민 참여 등으로 측정되며(Bjornstrom et al. 2013; Harpham et al. 2002; Kim & Kawachi 2006), 개인 수준의 사회 네트워크나 사회적 지지와 구분된다(Kawachi et al. 1997).

소진광(2004)은 사회적 자본의 개념요소와 표현인자로 신뢰, 참여, 연결망(네트워크), 제도 및 규범, 이타주의를 제시하였다. 홍영란 외(2007)는 사회적 자본의 영역을 시민의식·사회참여, 신뢰·관용성, 네트워크·파트너십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한상미(2007)는 사회적 자본의 영역을 네트워크, 호혜성, 신뢰로 구분하였다. 최종혁 외(2010)는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요인을 신뢰, 규범, 네트워크로 구분하였다.

이상과 같이 사회적 자본에 관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는 주로 신뢰, 네트워크, 규범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본 연구의 이론적 입장 및 농촌의 사회통합에 대한 개념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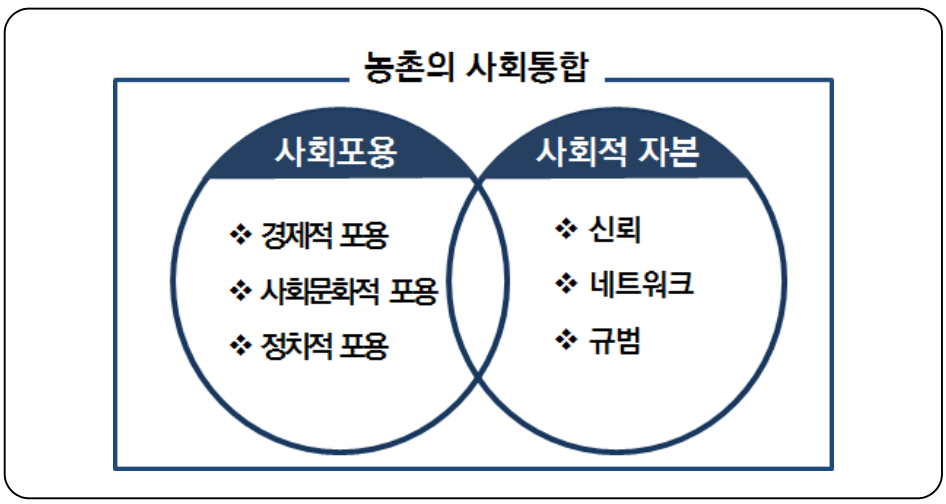
3.1. 본 연구의 이론적 입장

버거-슈미트(Berger-Schmitt 2000)는 사회통합의 두 가지 목표로 '격차, 불평등, 사회적 배제의 축소'와 '사회적 자본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그리

고 최근 우리나라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포용국가론'(성경륭 외 2017)에서는 약자를 포용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것을 지향한다. 본 연구는 농촌의 사회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농촌의 사회포용 수준을 확대하고, 사회적 자본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버거-슈미트(Berger-Schmitt 2000)와 '포용국가론'(성경륭 외 2017)의 기본적 입장을 수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의 이론적 입장은 사회적 포용(배제) 이론과 사회적 자본 이론의 결합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포용과 사회적 자본을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의 핵심 구성 요소로 파악하였다. 사회포용을 통해서 사회적 배제를 완화하고, 사회적 자본의 강화를 통해서 농촌의 사회통합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포용의 경우 경제·사회·정치적 포용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고, 사회적 자본의 경우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신뢰, 네트워크, 규범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그림 2-1>.

〈그림 2-1〉 농촌의 사회통합 구성요인



3.2. 농촌의 사회통합에 대한 본 연구의 개념 정의

버거-슈미트(Berger-Schmitt 2000), 유럽사회통합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Social Cohesion 2004), 찬 외(Chan et al. 2006), 노대명 외(2009), 여유진 외(2014) 등의 사회통합 관련 논의와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 및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등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농촌의 사회통합을 "농촌지역의 다양한 집단·계층 및 지역 간에 발생하는 갈등과 배제를 축소하여 사회포용 수준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 간에 신뢰와 연대감을 갖도록 하여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념 정의하였다.

본 연구의 농촌의 사회통합에 대한 개념 정의와 관련한 세부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집단'은 외부 유입 집단과 내부 집단으로 구별이 가능하다. 외부 유입 집단은 귀농·귀촌인 집단과 다문화가족을 이루는 여성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 이중 외국인 근로자는 농촌에 정착을 목적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이나 여성 결혼이민자와는 달리 일정 기간 고용을 목적으로 농촌에 거주하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 내부 집단의 경우 청소년과 노인, 여성과 남성, 농가와 비농가 등의 집단이 있으며, 이 외에도 농촌에는 다양한 내부 집단이 농촌에 존재한다. 이 가운데 다양한 이유로 농촌사회에서 소외 또는 배제되는 집단이 발생한다.

'계층'은 사회적 차이로 구별되는 집단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계층으로는 경제적 차이로 나타나는 경제적 빈곤층과 부유층이 있고, 이와 관련된 것으로 빈곤층의 소외 및 배제를 들 수 있다.

'지역'은 농촌 안에서의 지역적 차이를 의미한다. 농촌 특성상 다른 마을·면·읍 간의 갈등과 함께 읍과 면의 지역적 차이로 인해 갈등과 불평등이 생길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면 지역은 읍 지역에 비해서 각종 편의시설이나 사회복지서비스가 열악하다.

'지역사회 공동의 목표'는 명시적인 목표보다는 마을 혹은 지역사회의 지속과 발전을 위해서 암묵적으로 인정된 목표를 의미한다. '신뢰와 연대감'은 무형의 자산으로 사회적 자본과 연관이 높다. 사회적 자본은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신뢰, 네트워크, 규범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

제3장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영역별로 통합 실태를 나타내는 지표를 구성하였다. <표 3-1>에는 '농촌 사회통합의 실태 지표와 측정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농촌 사회통합의 영역은 경제·사회문화·정치·종합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경제적 측면의 농촌 사회통합 지표로는 가구 소득계층, 빈곤율, 소외·배제 계층, 가구소득의 양극화, 농촌사회의 소득계층 양극화 및 주된 원인, 농촌사회 소득계층 양극화 완화에 필요한 정책, 가구 경제상태 만족도, 경제적 박탈 실태, 공적 연금 가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회문화적 측면의 농촌 사회통합 지표로는 개인과 지역의 포용 수준, 집단 간 사회갈등, 사회갈등이 가장 심한 집단이나 영역, 사회갈등 또는 사회통합 저해 요인,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등의 문화·여가활동 관련 지표, 국민건강보험 가입 등의 사회복지 관련 지표, 신뢰·네트워크·규범 관련 지표, 사회적 자본 종합 척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정치적 측면의 농촌 사회통합 지표는 선거 투표율 등의 정치참여 관련 지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의 정부의 여건 및 노력 관련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종합적 측면의 농촌 사회통합 지표는 복지 및 삶의 질 만족도, 사회통합의 의미, 농촌 사회통합의 중요 요소, 농촌 사회통합 수준 평가, 향후 농촌의 사회통합 전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표 3-1〉 농촌 사회통합의 실태 지표와 측정 방법

사회통합의 영역	사회통합의 세부영역	실태 지표	측정 방법
경제적 측면의 사회통합	소득계층 인식 및 빈곤	가구 소득계층 인식	가구의 현재 소득계층(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 인식
		빈곤율	중위소득 기준 40%, 50%, 60%
		소외·배제 계층	가장 소외되거나 배제된 사람은?
	소득 양극화	가구소득 양극화	1분위 계층의 가구소득 대비 5분위 계층의 가구소득 비율
		농촌사회의 소득계층 양극화	농촌사회 소득계층 양극화 정도 인식에 관한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농촌사회 소득계층 양극화의 주된 원인	농촌사회 소득계층 양극화의 주된 원인은?
		농촌사회 소득계층 양극화에 필요한 정책	농촌사회 소득계층 양극화 완화에 필요한 정책은?
	가구 경제상태 만족도	가구 경제상태 만족도	현재의 가구 경제상태 만족도에 관한 5점 척도('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점, '대단히 만족한다' 5점)
	경제적 박탈 실태	경제적 박탈 실태	경제적 박탈 실태 관련 5개 문항의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공적 연금 가입	공적 연금 가입	가입 비율
사회문화적 측면의 사회통합	포용 수준	개인의 포용 수준	외지 출신 구성원(지체 장애인, 정신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범죄 경력자, 외국인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귀농·귀촌인)을 각각 자신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에 관한 5점 척도('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1점,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다' 5점)
		지역의 포용 수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해당 구성원(귀농·귀촌인, 외국인 이주자, 사회적 배경 상관없이, 다문화가정 자녀, 소외계층)에게도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사회갈등	집단 간 사회갈등	집단 간 사회갈등(11개 유형)이 얼마나 심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5점 척도('전혀 심하지 않다' 1점, '매우 심하다' 5점)
		사회갈등이 가장 심한 집단이나 영역	농촌에서 사회갈등이 가장 심한 집단이나 영역은?
		사회갈등 및 사회통합 저해 요인	지역사회에서 사회갈등을 일으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은?
	문화·여가활동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관람 비율 및 횟수
		참여 희망 문화·여가활동	앞으로 가장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은?
		문화·여가활동 장애요인	농촌에서 문화여가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요인은?
	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 가입	가입 비율, 미가입 시 수급 종류

(계속)

사회통합의 영역	사회통합의 세부영역	실태 지표	측정 방법
사회문화적 측면의 사회통합	사회복지	질병 치료 시 어려움	질병 치료 시 어려움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경험 및 이용 의사	이용 경험 여부, 향후 이용의사 여부
		과거에 받고 싶었으나 받지 못한 서비스	과거에 받고 싶었으나 받지 못한 서비스는?
	신뢰	대인 신뢰의식	대인 신뢰의식에 관한 3개 문항의 5점 척도
		지역 신뢰도	지역 신뢰도에 관한 3개 문항의 5점 척도
	네트워크	집단 간 소통	9개 유형의 집단 간 소통 정도에 관한 5점 척도('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점,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5점)
		마을행사 추진 시 주민 간 의사소통	마을공동사업이나 마을행사 추진 시 마을주민들 간 의사소통 정도에 관한 5점 척도('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1점, '매우 의사소통이 잘 된다' 5점)
		지역사회 소속감	4개 지역 단위에 대한 소속감 정도에 관한 5점 척도('소속감이 전혀 없다' 1점, '소속감이 강하다' 5점)
		마을공동체 의식	마을공동체의식에 관한 7개 문항의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네트워크 관련 3개 문항의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사회 참여	10개 유형의 지역 모임이나 단체 활동에 있어서 참여의 적극성 정도에 관한 5점 척도 ('과거에도 현재에도 활동한 적이 없다' 1점,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5점)
	규범	지역사회 규범 및 안전	지역사회 규범 및 안전 관련 4개 문항의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자원봉사 경험	자원봉사 경험 유무 및 영역
		기부 경험	기부 경험 유무 및 기부하지 않는 이유
	사회적 자본 종합	사회적 자본 종합 척도	10개 문항의 사회적 자본 관련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정치적 측면의 사회통합	정치참여	선거 투표율	각종 선거 투표율
		정당 활동	정당 활동 정도(5점 척도)
		정치 현안 인지 정도	우리나라 정치 현안에 대한 본인의 인지 정도 (5점 척도)
		농업 및 농촌 현안 관련 정치참여	7개 유형의 농업 및 농촌 관련 정치 현안 관련 활동 참여 정도(4점 척도)
		정책 건의사항	농촌의 사회통합 증진과 관련하여 중앙정부나 시군청 등에 건의할 상항은?
	정부의 여건노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계속)

사회통합의 영역	사회통합의 세부영역	실태 지표	측정 방법
정치적 측면의 사회통합	정부의 여건·노력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 정도에 대한 인식에 관한 5점 척도
		사회통합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	농촌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은?
종합적 측면의 사회통합		복지 및 삶의 질 만족도	10개 부문의 복지 및 삶의 질 만족도에 관한 5점 척도('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점, '매우 만족한다' 5점)
		사회통합의 의미	'사회통합'의 의미는?
		농촌 사회통합의 중요 요소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 관련 13개 요소들의 중요도에 관한 5점 척도('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 '매우 중요하다' 5점)
		농촌 사회통합 수준 평가	현재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 수준평가에 관한 10점 척도
		향후 농촌의 사회통합 전망	현재 대비 향후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 전망에 관한 5점 척도('매우 나빠질 것이다' 1점, '매우 좋아질 것이다' 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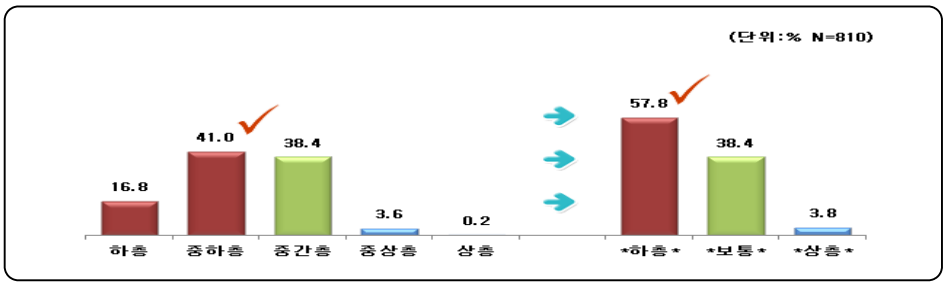
1. 경제적 측면의 사회통합 실태

1.1. 소득계층 인식 및 빈곤

1.1.1. 가구 소득계층 인식

우리나라 전체 기준에서 볼 때, 현재 귀댁이 속하는 소득계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중하층'(41.0%), '중간층'(38.4%), '하층'(16.8%)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그림 3-1>. 그런데 김태완 외(2017)가 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농촌주민의 계층 인식은 '중하층'(38.2%), '하상층' 25.3%, '중상층' 18.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현재의 가구 소득계층 인식



자료: 본 연구의 농촌주민(810명) 설문조사 결과.

사회경제적 특성별(읍·면 지역, 성별, 노인 여부, 농가 여부, 가구소득, 농촌주민 유형)로 가구 소득계층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자일수록(χ^2=8.28, DF=2, P < .01), 노인일수록(χ^2=62.88, DF=2, P < .001) 소득계층이 하층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것은 여성 및 노인 가구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1.2. 빈곤율

농촌의 빈곤율은 중위소득 40%, 50%, 60%를 기준으로 했을 때 17.4%～32.6%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더구나 농촌의 빈곤율은 도시에 비해서 2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2>.

〈표 3-2〉 빈곤율(2015년)

단위: %

구 분	농 촌			도 시			전국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가구 기준	23.9	35.9	44.9	12.5	18.6	24.5	13.5	20.1	26.3
인구 기준	17.4	25.6	32.6	8.1	12.5	18.2	8.7	13.5	19.2

주: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
자료: 김태완 외(2017).

1.1.3. 소외·배제 계층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과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농촌에서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소외되거나 배제된 사람들이나 영역'은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중소농,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계층, 오·벽지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빈곤층 등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과 청년, 외국인 노동자가 가장 소외되거나 배제되어 있으며, 문화적 측면이나 청소년 대상 돌봄이 약하다(민간교육복지 실무책임자).
- 지금 자라는 청소년에 투자를 해야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선거권 여부 때문인지는 몰라도 청소년에 대한 혜택은 없다(청소년문화단체 실무자). 청소년복지 관련 예산은 적고 노인복지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다(청소년복지 관련 기관장).
- 대농에 비해서 중소농이 가장 소외되고 배제되어 있다(농민단체장, 농촌복지 현장 전문가).
- 아동, 청소년의 경우 군 지역 내에서 갈 데가 없다. 그야말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은 PC방뿐이다. 그러니 토요일이나 휴일이 되면 아이들이 모두 대도시로 나간다. 일반 아동이나 대다수의 아동 청소년들은 놀 거리가 없다. 배제되어 있는 계층으로 다문화나 외국인 노동자 얘기도 나왔지만 아동 청소년들이 배제되는 부분이 더 많은 것이 농촌의 현실이다(목사).
-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이 가장 소외되고 배제되어 있으며, 이들이 농촌의 사회통합에 가장 걸림돌이 된다(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 면·리 지역의 주민이면서, 빈곤 가정이면서, 다문화나 조손·한부모 가정 등 특수한 형태의 가정의 교집합이 되는 집단이 제일 소외된 계층이다(농촌복지 전문가). 오·벽지의 다문화가정이 가장 소외되어 있다(여성 결혼이민자).
- 노인(특히 독거노인)이나 노약자들이 가장 소외되어 있다(귀촌인, 청소년문화단체장, 여성 결혼이민자).

- 농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로당도 어느 정도 여유가 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지, 가난한 사람들은 배척되고 소외되기 쉽다. 이런 부분을 종합하여 볼 때 빈곤층이 이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사회복지기관장).

1.2. 소득 양극화

1.2.1. 가구소득 양극화

1분위 계층의 가구소득 대비 5분위 계층의 가구소득의 비율은 농촌 거주 비농가의 경우는 2005년 7.7배에서 2016년 6.1배로 약간 감소하였다. 그러나 농가의 경우는 2005년 9.6배에서 2016년 11.3배로 크게 증가하였다. 중

〈표 3-3〉 연간 가구소득 변화 동향

단위: 천 원/연

구 분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B)	전체평균	B/A
비농가	도시	2005	12,458	23,324	32,314	42,563	67,708	35,675	5.4
		2010	14,424	28,874	39,785	52,774	84,323	44,042	5.8
		2015	18,603	35,439	48,346	62,855	99,016	52,858	5.3
		2016	17,650	35,123	48,395	63,498	100,896	53,121	5.7
	농촌	2005	7,863	18,255	26,793	36,350	60,502	29,965	7.7
		2010	13,473	28,339	37,990	49,596	73,845	40,664	5.5
		2015	17,208	34,167	46,556	59,933	93,302	50,218	5.4
		2016	15,856	34,218	46,619	61,858	96,187	50,868	6.1
농가		2005	7,272	15,555	23,822	35,902	69,967	30,503	9.6
		2010	6,620	15,973	24,738	37,803	80,074	32,120	12.1
		2015	8,602	18,209	27,557	42,464	89,513	37,215	10.4
		2016	7,871	18,234	28,256	42,795	88,937	37,197	11.3

주: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가구원 수가 2인 이상인 가구에 한해서 분석한 결과이며, 원자료는 월소득 기준이므로 결과값에 12를 곱하여 연소득으로 환산하였음.

자료: [2005년, 2010년] 박대식·마상진(2012a).
[2015년, 2016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 MDIS(http://mdis.kostat.go.kr/index.do: 2017. 9. 26.)/『가계동향조사』와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가중하여 계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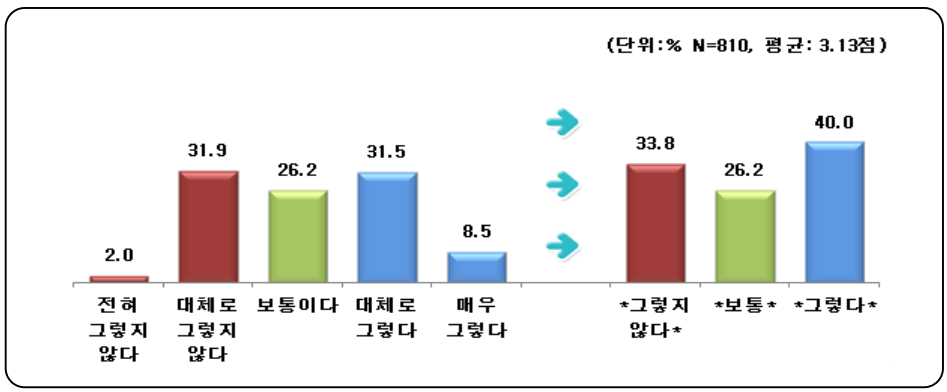
대농 위주의 규모화 정책, 고령농가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농가의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3-3>.

1.2.2. 농촌사회의 소득계층 양극화

농촌사회 소득계층이 양극화되었는지 질문한 결과, '그렇다'('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는 응답(40.0%)이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33.8%)보다 많았다<그림 3-2>.

사회경제적 특성별 농촌사회 소득계층 양극화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면 지역일수록(χ^2=11.80, DF=2, P < .01), 남자일수록(χ^2=15.20, DF=2, P < .001), 귀농·귀촌가구일수록(χ^2=9.79, DF=4, P < .05) 농촌사회가 양극화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림 3-2〉 농촌사회 소득계층 양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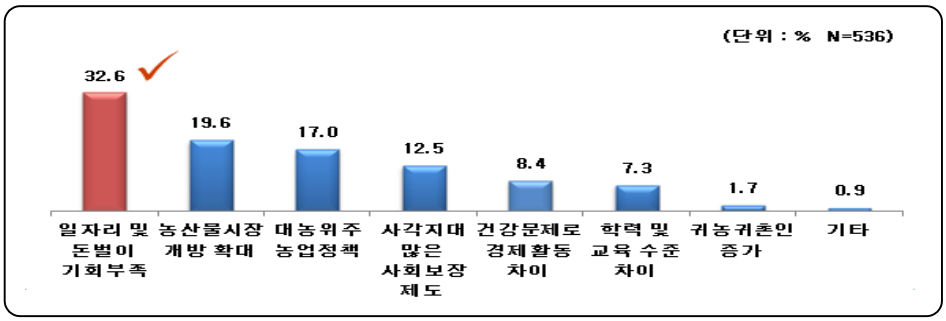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의 농촌주민(810명) 설문조사 결과.

1.2.3. 농촌사회 소득계층 양극화의 주된 원인

소득계층이 양극화되어 있다는 응답자(n=536)를 대상으로, 소득계층 양극화의 주된 원인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일자리 및 돈벌이 기회의 부족'이라는 응답이 3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농산물 시장 개방

의 확대'라는 응답이 19.6%, '대농 위주의 농업정책'이 17.0%, '사각지대 많은 사회보장제도'가 12.5%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3-3>.

〈그림 3-3〉 농촌사회 소득계층 양극화의 주된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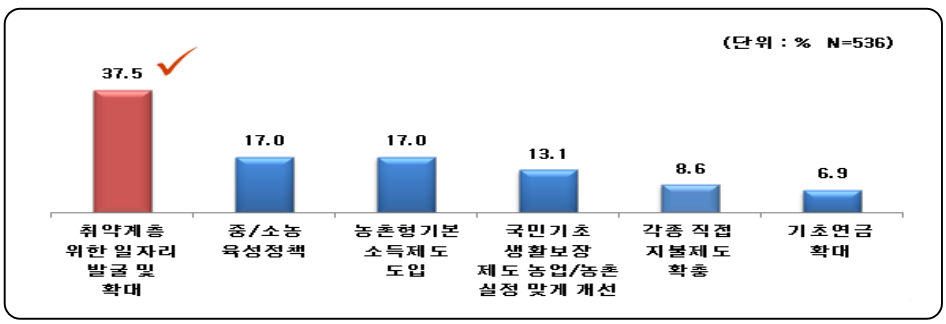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의 농촌주민(810명) 설문조사 결과.

1.2.4. 농촌사회 소득계층 양극화 완화에 필요한 정책

소득계층이 양극화되어 있다는 응답자(n=536)를 대상으로, 농촌사회의 소득계층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발굴 및 확대'라는 응답이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중·소농 육성정책'이라는 응답이 17.0%, '농촌형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이 17.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농업·농촌의 실정에 맞게 개선'이 13.1%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3-4>.

〈그림 3-4〉 농촌사회 소득계층 양극화 완화에 필요한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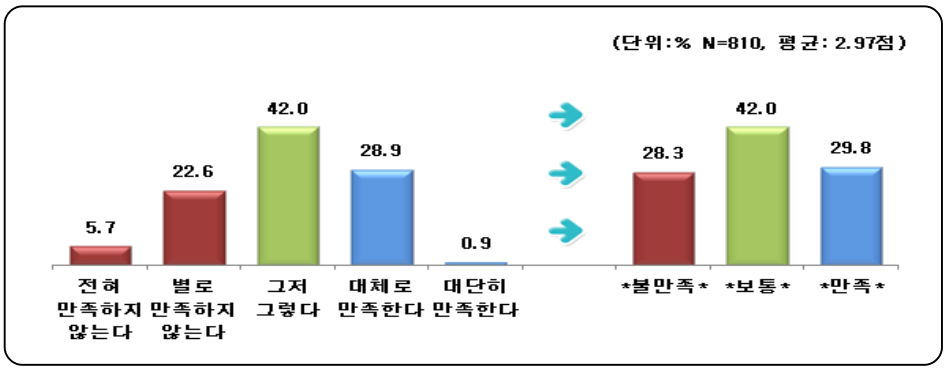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의 농촌주민(810명) 설문조사 결과.

1.3. 가구 경제상태 만족도

현재의 가구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응답(29.8%)이 불만족한다는 응답(28.3%)보다 약간 많았다<그림 3-5>.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가구 경제상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표 분석을 한 결과(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것만 제시함), 읍 지역일수록(χ^2=17.73, DF=2, P < .001)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읍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면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보다 경제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3-5〉 가구 경제상태 만족도



자료: 본 연구의 농촌주민(810명)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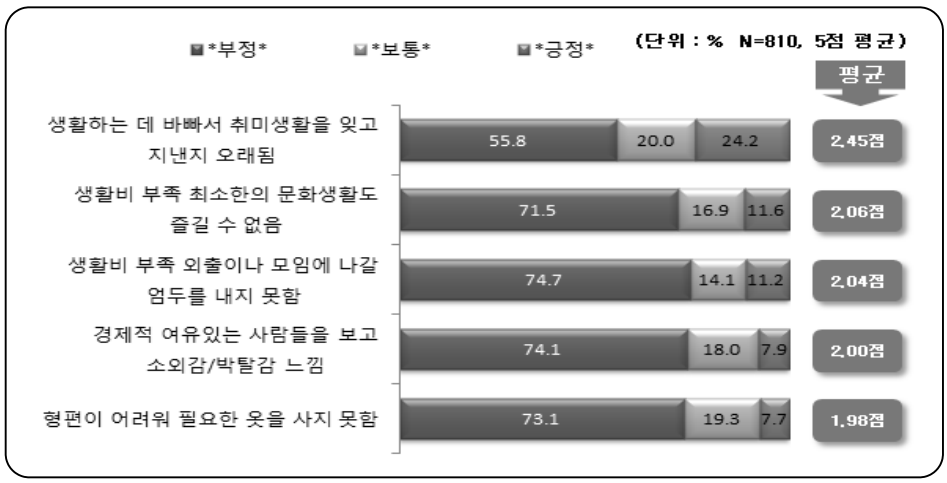
1.4. 경제적 박탈 실태

경제적 박탈(배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은 '생활하는 데 바빠서 취미생활을 잊고 지낸 지 오래되었다'(24.2%), '생활비가 부족하여 원하는 최소한의 문화생활도 즐길 수가 없다'(11.6%), '생활비가 부족하여 외출이나 모임에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한다'(11.2%) 순으로 많았다. '생활하는 데 바빠서 취미생활을 잊고 지낸 지 오래되었다'는 응답자가 1/4 정도나 될 정도로 경제적 박탈이 상당히 심각함을 알 수 있

다<그림 3-6>. 김태완 외(2017)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 관련 기존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농촌주민 중에서 '집세가 밀렸거나 또는 그 이유로 집을 옮긴 적이 있다'는 사람이 6.3%, '공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는 사람이 5.2%,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는 사람이 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경제적 박탈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5가지 경제적 박탈 문항을 더하여(25점 만점)[5] 평균 차 검증(t 또는 F 검증)을 하였다. 여성일수록(t= -3.89, P < .001), 노인일수록(t= -3.07, P < .001), 다문화가족일수록(F=7.35, P < .001), 가구소득이 낮을수록(F=16.71, P < .001) 경제적 박탈 인식 수준이 높았다. 이것은 여성, 노인,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3-6〉 경제적 박탈 실태



자료: 본 연구의 농촌주민(810명) 설문조사 결과.

5 척도의 신뢰도계수(α 값)는 0.90이다.

1.5. 공적 연금 가입

농촌주민의 공적 연금 가입 비율은 61.6%으로 나타나 1/3 이상(38.4%)이 공적 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4>. 도시의 공적 연금 가입 비율은 61.2%으로 나타나 1/3 이상(38.8%)이 공적 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음이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농촌(91.0%)이 도시(95.1%)보다 다소 낮았다.

〈표 3-4〉 공적 연금 가입 현황

단위: %

구분	가입								미가입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	보훈연금	기초연금	
전체	61.2	94.4	2.8	0.4	0.3	0.1	0.1	1.7	38.8
도시(동부)	61.2	95.1	2.7	0.5	0.2	0.1	0.1	1.2	38.8
농촌(읍면부)	61.6	91.0	3.1	-	0.6	0.3	0.3	4.6	38.4

자료: 한국행정연구원(2016).

2. 사회·문화적 측면의 사회통합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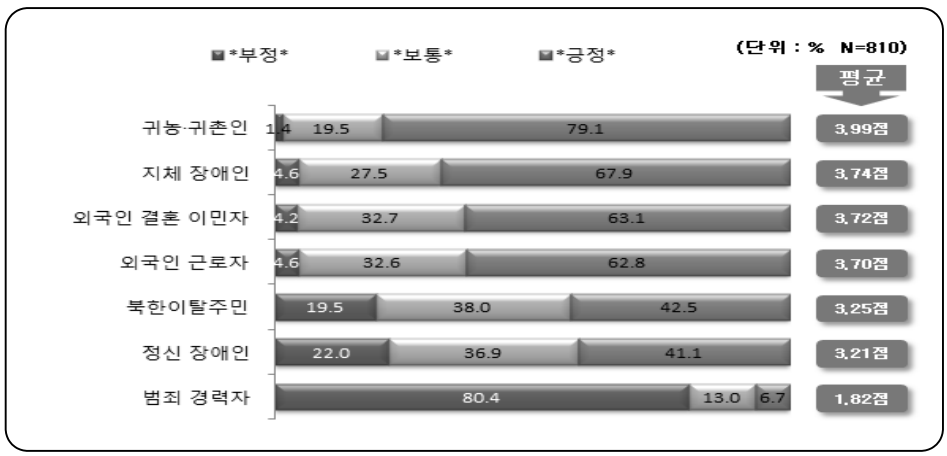
2.1. 포용 수준

2.1.1. 개인의 포용 수준

외지 출신의 구성원들을 자신의 이웃으로 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5점 만점에 3점 이상으로 나타나 사회적 포용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귀농·귀촌인'이

3.99점, ‘지체 장애인’이 3.74점, ‘외국인 결혼 이민자’가 3.72점, ‘외국인 근로자’가 3.70점으로 다른 항목보다 긍정적인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범죄 경력자’는 1.82점으로 다른 구성원들보다 이들에 대한 포용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3-7>.

〈그림 3-7〉 외지 출신 구성원 이웃 포용



자료: 본 연구의 농촌주민(810명)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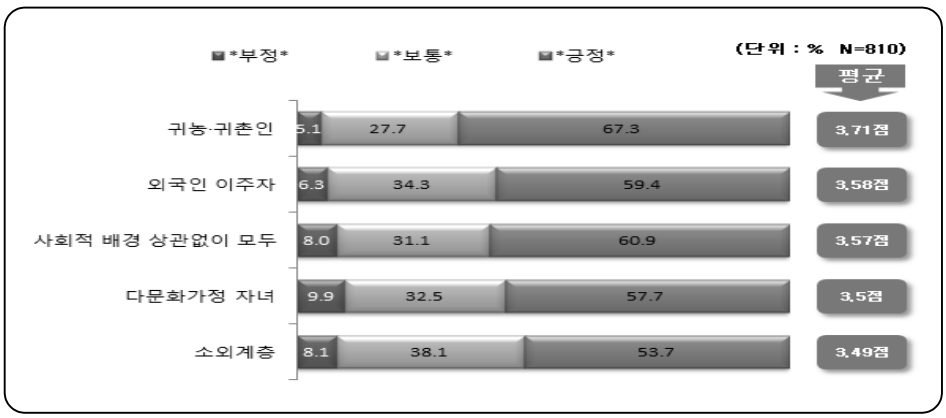
2.1.2. 지역의 포용 수준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해당 구성원들(귀농·귀촌인, 외국인 이주자, 사회적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층, 다문화가정 자녀, 소외계층)에게도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5점 만점에 3.5점 내외로 나타나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해당 구성원들의 거주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귀농·귀촌인’이 3.71점, ‘외국인 이주자’가 3.58점, ‘사회적 배경 상관없이 모든 주민층’이 3.57점, ‘다문화가정 자녀’가 3.50점, ‘소외계층’이 3.49점으로 나타났다<그림 3-8>.

지역의 포용 수준 인식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5개 지역포용 관련 문항을 더하여(25점 만점)[6] 평균 차 검증(t 검증)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다문화가정(t=-2.08, P < .05)이 일반 주민보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포용수준을 낮게 인식하였다. 귀농·귀촌인과 일반주민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림 3-8〉 해당 구성원들의 지역 거주 적합성



자료: 본 연구의 농촌주민(810명) 설문조사 결과.

2.2. 사회갈등

2.2.1. 집단 간 사회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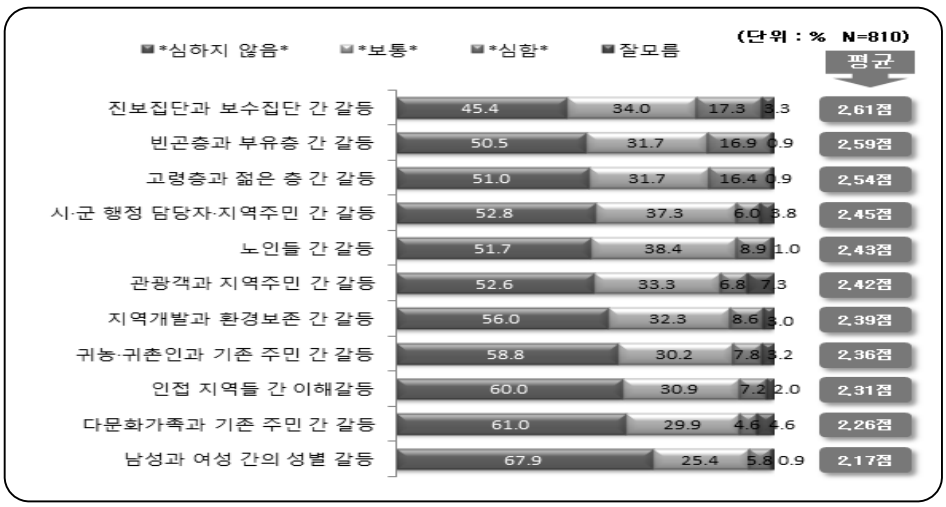
집단 간 사회갈등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5점 만점에 평균 3점 이하로 나타나 집단 간 갈등이 심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체로 많았다. 사회갈등이 심하다는 응답('대체로 심하다' + '매우 심하다')은 '진보집단과 보수집단 간 갈등'(17.3%), '빈곤층과 부유층 간 갈등'(16.9%), '고령층과 젊은 층 간 갈등'(16.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3-9>. 김태완 외(2017)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 관련 기존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6 척도의 신뢰도계수(α 값)는 0.86이다.

따르면, 각 부문에 있어서 사회갈등이 심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대체로 농촌주민보다 도시주민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집단 간 사회갈등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11개의 집단 간 사회갈등 문항을 더하여(55점 만점)[7] 평균 차 검증(t 또는 F 검증)을 실시하였다. 노인이 아닐수록(t=3.89, P < .001), 비농가일수록(t=-2.30, P < .01), 가구소득이 높을수록(F=3.24, P < .05) 집단 간 사회갈등 인식 수준이 높았다.

〈그림 3-9〉 집단 간 사회갈등



자료: 본 연구의 농촌주민(810명) 설문조사 결과.

2.2.2. 사회갈등이 가장 심한 집단이나 영역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과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농촌에서 사회갈등이 가장 심한 집단이나 영역'은 ① 귀농·귀촌인과 지역 원주민 간의 갈등, ② 지역개발과 환경보존 간의 갈등, ③ 지자체 선거 영향으로 인한

7 척도의 신뢰도계수(α 값)는 0.87이다.

갈등, ④ 노인들 간의 갈등 등으로 나타났다.

- 지역에서 귀농귀촌인과 지역 원주민 간의 갈등이 많이 나타난다. 특히 땅 문제 관련 갈등이 많다. 묘 이장 문제, 토지 측량 문제, 도로 침범 문제, 매매나 토지개발 과정에서도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귀촌인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귀촌인과 지역 원주민은 생활양식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농민단체장). 귀농인의 경우 정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주민들과 화합을 하려고 하는 데 반해 귀촌인은 화합하려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화합이 안 된다고 본다(사회복지기관장). 귀농인들이 아는 척, 잘난 척을 할 경우에 기존 지역 주민이 텃세를 부리는 경우가 있다. 보통은 젊은 사람이 농사를 지으러 지역에 온다고 하면 일손이 되기도 하니 지역주민들이 좋아하는데, 도시에서 퇴직해서 돈 좀 있고 농촌에서 집 짓고 아는 척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아웃시키고 외면한다(귀농인).
- 케이블카 건립 문제로 지역 여론이 갈라져 있어서 사회통합에 문제가 많다. 환경 단체와 귀농인 등은 반대하는 입장이 많고, 지역 원주민들은 지역경제가 너무 낙후되어 있으니 뭐라도 해서 변화를 이뤄보자는 입장이다(지역신문사 편집국장).
- 지자체 선거의 영향으로 인한 농촌주민 간의 사회갈등이 심각하다. 광역자치단체장 이상만 선거가 있으면 된다고 본다. 그나마 광역은 좀 나은데 지자체는 혈연 및 지연 구성이 잘 되어 있어서 그 관계를 못 떠나기 때문에 지자체 선거가 없어져야 하는 것이 통합을 위한 일순위 과제이다(군청 농업정책 담당 공무원 및 농촌복지 현장 실천가). 지역이 좁아서 한 다리만 거치면 다 아는 사람이고 익명성이 없다보니 지자체 선거로 인한 사회갈등이 심각하다(귀농인).
- 노-노 간의 갈등도 상당하다. 60대의 상대적으로 젊은 노인과 70대 이상의 노인들 간의 사회갈등이 발생하고 있다(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및 농촌복지 전문가).

2.2.3. 사회갈등 유발 및 사회통합 저해 요인

지역사회(해당 시·군)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동의한 응답('동의하는 편임' + '매우 동의함') 비율은 '빈부격차 심화'(57.5%), '장애인,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 문제'(48.3%), '이해 당사자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45.9%), '갈등 조정 기구 및 갈등 조정 제도의 미비'(44.4%), '개인·집단 간의 상호이해와 포용 부족'(43.7%), '시장·군수, 시·군 의원 선거후보의 정당 공천'(43.3%), '복지·의료서비스의 수급 불균형'(42.0%)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과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농촌 지역사회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은 ① 지자체 선거 문화, ② 경제적 모델에 초점을 둔 마을 만들기, ③ 관 주도로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④ 건전한 지역 언론 환경의 미비 등으로 나타났다.

- 지자체 선거문화가 지역사회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 요소라 생각한다. 지자체장이라든가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는 정말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선거가 한번 지나가서 지역사회가 갈라지고 나면, 양분되어 회복이 안 되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농촌복지 전문가). 옳고 그름의 문제로 호불호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게 된다. 아무리 누가 잘못했어도 이해관계가 같으면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치부하는데 선거 문화가 원래 그러한 듯하다. 이렇게 되는 요인은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고 이것이 특히 농촌 사회갈등의 가장 큰 요인이다(농민단체장).
- 경제적 모델에 초점을 둔 마을 만들기가 농촌의 사회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농촌복지 현장 실천가).
- 시·군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관 주도로 구성되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농촌복지 현장 실천가).
- 건전하게 비판할 수 있는 지역 언론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지역신문사 편집국장).

2.3. 문화 · 여가활동

2.3.1.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농촌주민들의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비율은 2007년 42.8%에서 2015년 53.0%로 증가하였고, 관람 횟수는 2007년 5.1회에서 2015년 7.2회로 증가하였다<표 3-5>. 그러나 도시와 비교하면, 농촌의 관람 비율 및 횟수가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3-5〉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단위: %, 회

지역	연도	관람함								관람하지 않음
		구 분		공연장 이용		전시장 이용		스포츠 관람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도시	2007	56.8	7.3	88.1	6.3	36.2	2.9	19.0	3.4	43.2
	2009	58.7	7.7	90.2	6.6	32.4	3.0	20.9	3.5	41.3
	2011	62.1	8.6	34.2	3.4	23.8	2.5	24.9	4.2	37.9
	2013	37.1	9.0	34.0	3.7	22.7	2.6	22.4	4.1	32.9
	2015	63.6	8.6	33.7	3.4	23.2	2.6	21.6	3.9	36.4
농촌	2007	42.8	5.1	79.0	4.8	38.8	2.4	15.0	3.0	57.2
	2009	38.4	6.0	84.3	5.4	33.2	2.6	17.8	3.3	61.6
	2011	42.7	7.0	30.3	3.2	21.8	2.4	20.4	4.1	57.3
	2013	45.9	7.7	30.7	3.7	22.3	2.6	19.5	3.9	54.1
	2015	53.0	7.2	30.2	3.1	21.0	2.5	18.1	4.1	4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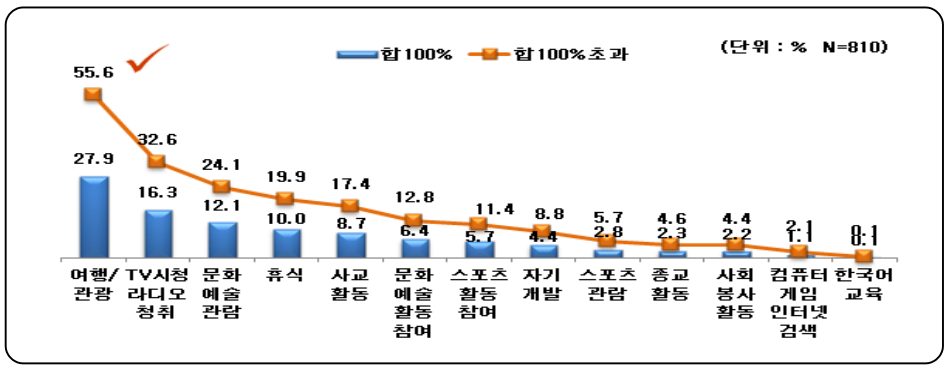
주: 2011년 이후, '음악·연주회', '연극·마당극·뮤지컬', '무용', '영화'를 '공연장'에 포함, '박물관', '미술관'을 '전시장'에 포함.
자료: 농촌진흥청(2017).

2.3.2. 참여 희망 문화·여가활동

앞으로 가장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을 조사한 결과, '여행·관광'이라는 응답이 2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복응답 기준으로도 '여행·관광'이 55.6%로 높았다. 그 다음으로, 'TV 시청 라디오 청취'가

16.3%, ‘문화 예술 관람’이 12.1%, ‘휴식’이 10.0%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3-10>.

〈그림 3-10〉 참여 희망 문화·여가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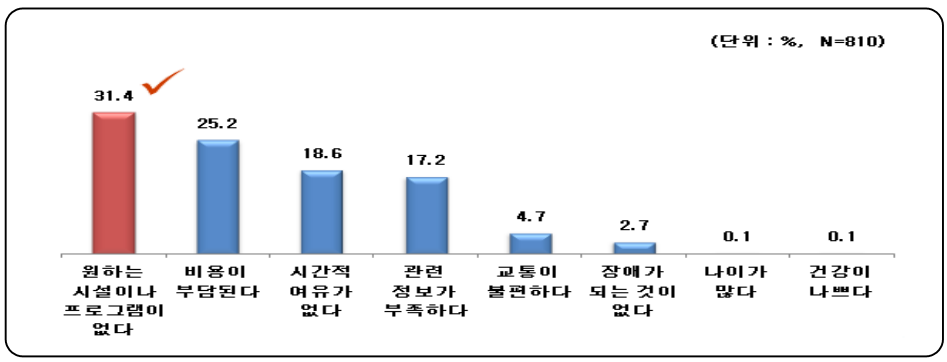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의 농촌주민(810명) 설문조사 결과.

2.3.3. 문화·여가활동 장애요인

농촌에서 문화·여가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요인을 조사한 결과, ‘원하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없다’라는 응답이 3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비용이 부담된다’가 25.2%, ‘시간적 여유가 없다’가 18.6%,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가 17.2%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3-11>.

〈그림 3-11〉 문화·여가활동 장애요인



자료: 본 연구의 농촌주민(810명) 설문조사 결과.

2.4. 사회복지

2.4.1. 국민건강보험 가입 현황

농촌주민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비율은 80.3%로 나타났다<표 3-6>. 가입률은 읍 지역은 89.9%인 데 비해서 면 지역은 73.5%에 불과하였다. 미가입 시 수급 종류는 주로 '자녀에게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음'이 70% 가량이었다.

〈표 3-6〉 국민건강보험 가입 현황

단위: %

구분(명)		가입	가입 종류		미가입	미가입 시 수급 종류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자녀에게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음
전체	3,950	80.3	57.9	42.1	19.7	17.9	11.8	70.4
읍	1,635	**89.9**	**65.3**	34.7	10.1	**23.9**	7.4	68.7
면	2,315	73.5	51.5	**48.5**	**26.5**	16.2	**13.0**	70.8

자료: 농촌진흥청(2017).

2.4.2. 질병 치료 시 어려움

질병 치료 시 어려움은 '치료비가 부담된다'(32.4%),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렵다'(16.5%), '의료기관까지 이동이 어렵다'(11.8%) 순으로 나타났다. 면 지역의 경우는 특히 '치료비가 부담된다'(39.4%)와 '의료기관까지 이동이 어렵다'(13.2%)가 읍 지역에 비해 두드러졌으며, 질병 치료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더 높았다<표 3-7>.

〈표 3-7〉 질병 치료 시 어려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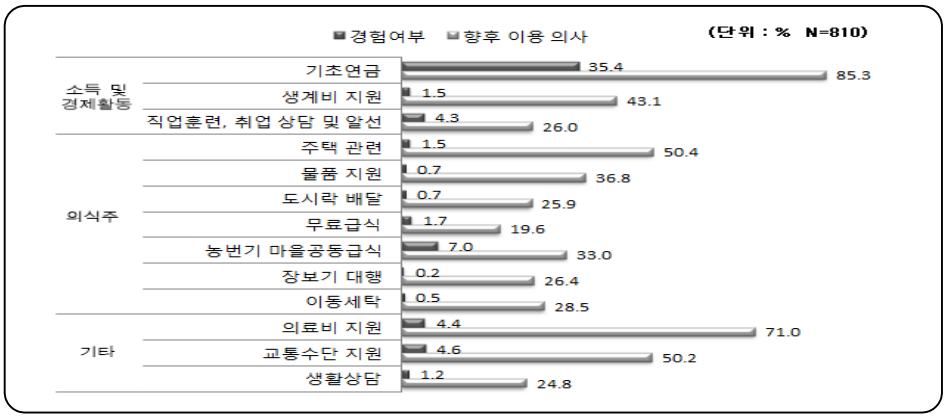
구분(명)		치료비가 부담된다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다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렵다	의료기관까지 이동이 어렵다	환자를 돌볼 사람이 없다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전체	3,952	32.4	8.8	16.5	11.8	5.9	24.6
읍	1,636	22.5	11.0	15.3	9.8	6.0	**35.5**
면	2,316	**39.4**	7.2	17.3	13.2	5.9	16.9

자료: 농촌진흥청(2017).

2.4.3.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및 이용 의사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초연금'이 35.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이 7.0%로 높았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향후 이용 의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초연금'이 85.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의료비 지원'이 71.0%, '주택 관련 서비스'가 50.4%, '교통수단 지원'이 50.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3-12>.

〈그림 3-12〉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및 이용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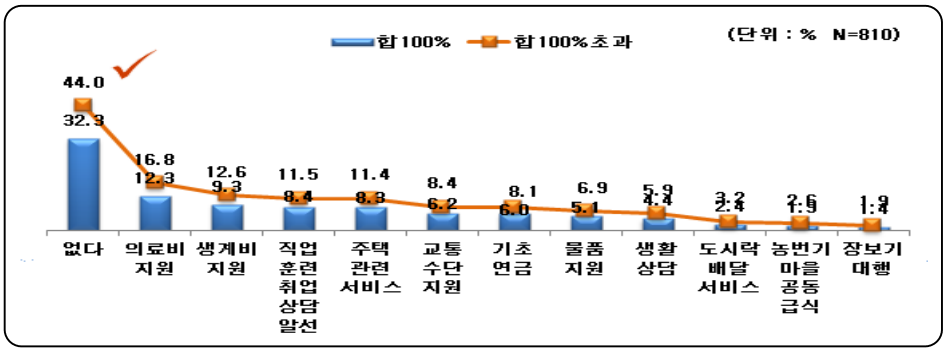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의 농촌주민(810명) 설문조사 결과.

8 만 65세 이상 응답자의 기초연금 이용 경험 비율은 76.4%로 나타났다.

2.4.4. 과거에 받고 싶었으나 받지 못한 서비스

과거에 받고 싶었으나 받지 못한 서비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료비 지원'이라는 응답이 12.3%, '생계비 지원'이라는 응답이 9.3%로 두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직업 훈련, 취업 상담알선'이 8.4%, '주택 관련 서비스'가 8.3%, '교통수단 지원'이 6.2%, '기초연금'이 6.0%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없다'라는 응답이 32.3%로 가장 높았다<그림 3-13>.

〈그림 3-13〉 과거에 받고 싶었으나 받지 못한 서비스



자료: 본 연구의 농촌주민(810명) 설문조사 결과.

2.5. 신뢰

2.5.1. 대인 신뢰의식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다'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농촌지역은 부정적 의견('약간 반대' + '매우 반대')이 14.9%로 도시지역의 17.1%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에 긍정적 응답('약간 동의' + '매우 동의')에서는 도시지역이 농촌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농촌지역의 부정적 의견은 17.2%인 데 반해, 도시는 7.7%에 불과

하여 농촌이 도시에 비해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10%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대개 이기적이다’라는 문항에 대한 부정적 응답을 살펴보면, 농촌이 8.3%로 도시의 7.7%에 비해 다소 높았다. 도시에 비해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타인을 이기적이지 않다고 더 많이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3-8>.

〈표 3-8〉 대인 신뢰의식

단위: %

대인 신뢰인식	농촌(읍·면부)					도시(동부)					전체				
	매우 동의	약간 동의	보통	약간 반대	매우 반대	매우 동의	약간 동의	보통	약간 반대	매우 반대	매우 동의	약간 동의	보통	약간 반대	매우 반대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다	10.1	44.1	30.9	14.0	0.9	11.1	47.6	24.3	15.2	1.9	10.9	47.0	25.4	15.0	1.7
다른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	7.9	36.7	38.2	15.4	1.8	10.1	41.6	32.9	13.8	1.7	9.7	40.8	33.8	14.0	1.8
사람들은 대개 이기적이다	13.8	46.2	31.7	7.7	0.6	14.6	51.4	26.4	7.4	0.3	14.4	50.6	27.3	7.4	0.3

자료: 김태완 외(2017).

2.5.2. 지역 신뢰도

‘지역에서 주민들이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이웃 간에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문항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응답(80.0%)이 부정적인 응답(4.0%)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의 이웃들은 믿을 만하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응답(78.3%)이 부정적인 응답(2.2%)보다 훨씬 많았다. 또한, ‘지역 공공기관은 믿을 만하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응답(74.3%)이 부정적인 응답(2.6%)보다 훨씬 많았다<표 3-9>. 전체적으로 볼 때 농촌주민의 지역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9〉 지역 신뢰도

단위: %(N=810)

지역 신뢰도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지역에서 주민들이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이웃 간에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	0.2	3.8	16.0	70.9	9.1	100.0
나의 이웃들은 믿을 만하다.	0.0	2.2	19.5	52.6	25.7	100.0
지역 공공기관은 믿을 만하다.	0.1	2.5	23.1	55.4	18.9	100.0

자료: 본 연구의 농촌주민(810명) 설문조사 결과.

2.6.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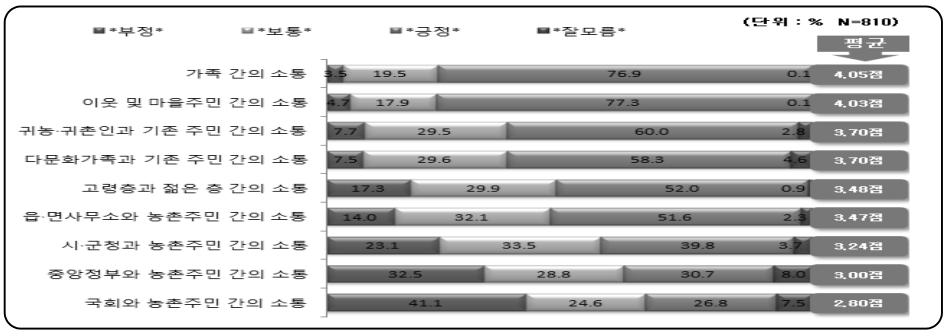
2.6.1. 집단 간 소통

집단 간 소통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약간 이루어지고 있다' +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은 '이웃 및 마을주민 간의 소통'(77.3%), '가족 간의 소통'(76.9%), '귀농·귀촌인과 기존 주민 간의 소통'(60.0%)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응답('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있다' +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은 '국회와 농촌주민 간의 소통'(41.1%), '중앙정부와 농촌주민 간의 소통'(32.5%), '시·군청과 농촌주민 간의 소통'(23.1%) 순으로 높았다. 국회, 중앙정부, 시·군청과 농촌주민 간의 소통이 특히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14>.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집단 간 소통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9개 집단 간 사회갈등 관련 문항을 더하여(45점 만점)[9] 평균 차 검증(t 또는 F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노인일수록(t=-2.17, P < .01), 농가일수록(t=1.92, P < .05) 집단 간 소통 인식 수준이 높았다.

9 척도의 신뢰도계수(α 값)는 0.86이다.

〈그림 3-14〉 집단 간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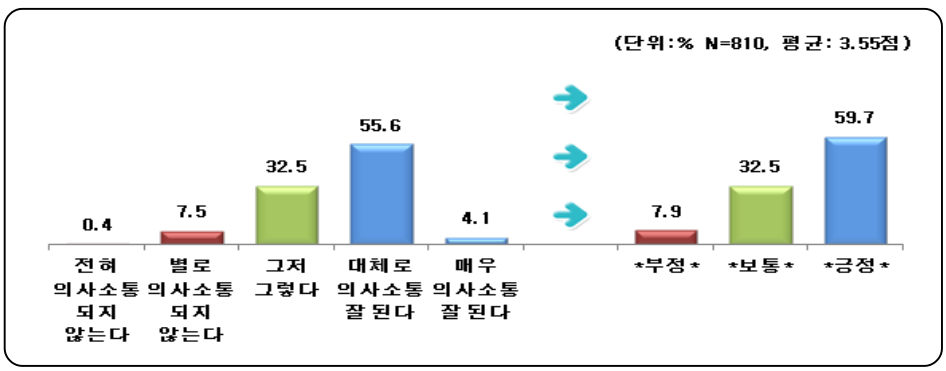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의 농촌주민(810명) 설문조사 결과.

2.6.2. 마을행사 추진 시 주민 간 의사소통

‘귀하가 거주하는 마을에서는 마을공동사업이나 마을행사를 추진할 때 마을주민들 간에 의사소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부정적 응답이 7.9%, 긍정적 응답이 59.7%로 나타나 마을행사 추진 시 주민 간 의사소통이 잘 된다는 의견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15>.

〈그림 3-15〉 마을행사 추진 시 주민 간 의사소통



자료: 본 연구의 농촌주민(810명) 설문조사 결과.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마을공동사업이나 마을행사 추진 시 주민 간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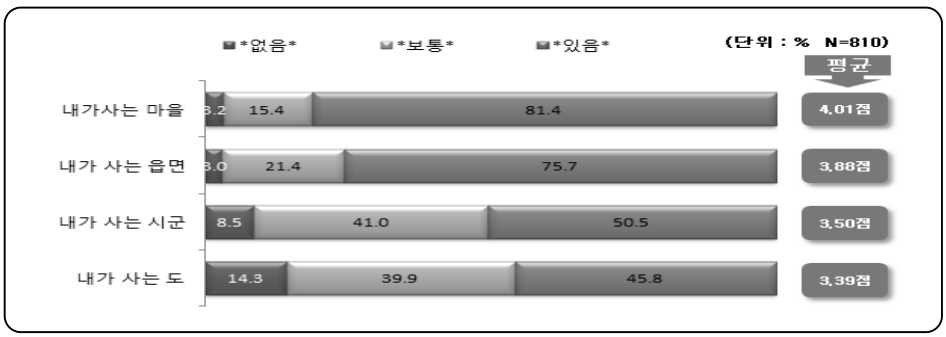
소통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교차표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χ^2=34.58, DF=2, P < .001), 농가일수록 (χ^2=8.03, DF=1, P < .05), 다문화가정이나 귀농·귀촌인보다 일반 농촌주민일수록(χ^2=14.04, DF=2, P < .01) 소통에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2.6.3. 지역사회 소속감

지역사회 소속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5점 만점에 평균 3점 이상으로 나타나 지역사회 소속감이 있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가 사는 마을'은 4.01점, '내가 사는 읍면'은 3.88점, '내가 사는 시군'은 3.50점, '내가 사는 도'는 3.39점으로 나타났다<그림 3-16>.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지역사회 소속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4개의 지역사회 소속감 관련 문항을 더하여(20점 만점)[10] 평균 차 검증(t 또는 F 검증)을 실시하였다. 면지역일수록(t=-4.11, P < .001), 남성일수록(t=2.27, P < .01), 노인일수록(t=-6.18, P < .001), 농가일수록(t=3.12, P

〈그림 3-16〉 지역사회 소속감



자료: 본 연구의 농촌주민(810명) 설문조사 결과.

< .001), 일반 농촌주민일수록(F=23.85, P < .001),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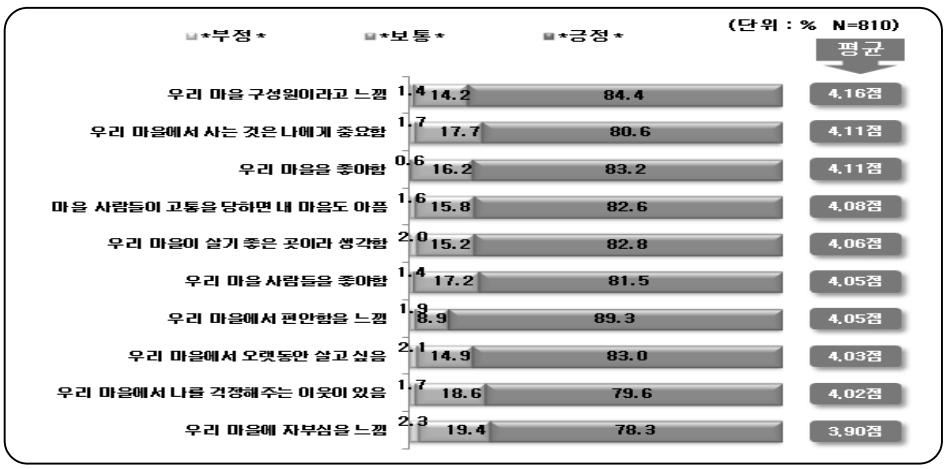
10 척도의 신뢰도계수(α 값)는 0.87이다.

(F=18.39, P < .001) 지역사회 소속감이 높았다.

2.6.4. 마을공동체의식

마을공동체의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5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 4점 이상으로 나타나 마을공동체 의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마을 구성원이라고 느낌'이 4.16점, '우리 마을에서 사는 것은 나에게 중요함'이 4.11점, '우리 마을을 좋아함'이 4.11점으로 다른 항목보다 긍정적인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그림 3-17>.

〈그림 3-17〉 마을공동체의식



자료: 본 연구의 농촌주민(810명) 설문조사 결과.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마을공동체의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10개의 마을공동체의식 관련 문항을 더하여(50점 만점)[11] 평균 차 검증(t 또는 F 검증)을 실시하였다. 면지역일수록(t=-2.65, P < .001), 남성일수록(t=1.68, P < .05), 노인일수록(t=-5.89, P < .001), 농가일수록(t=2.72, P <

11 척도의 신뢰도계수(α 값)는 0.89이다.

.01), 일반 농촌주민일수록(F= 15.80, P < .001),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F=16.58, P < .001) 마을공동체 의식이 높았다.

2.6.5. 사회적 네트워크

‘나의 고민이나 문제를 상담해 줄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라는 문항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응답(56.1%)이 부정적인 응답(8.1%)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히 돈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응답(47.5%)이 부정적 응답(23.1%)보다 상당히 높았다. ‘우리 지역은 주민 모임이나 조직이 활발하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응답(61.4%)이 부정적인 응답(7.7%)보다 훨씬 많았다<표 3-10>.

〈표 3-10〉 사회적 네트워크

단위: %(N=810)

사회적 네트워크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나의 고민이나 문제를 상담해 줄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0.6	7.5	35.8	44.0	12.1	100.0
급히 돈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5.1	18.0	29.4	37.5	10.0	100.0
우리 지역은 주민들 모임이나 조직이 활발하다.	0.4	7.3	30.9	50.0	11.4	100.0

자료: 본 연구의 농촌주민(810명)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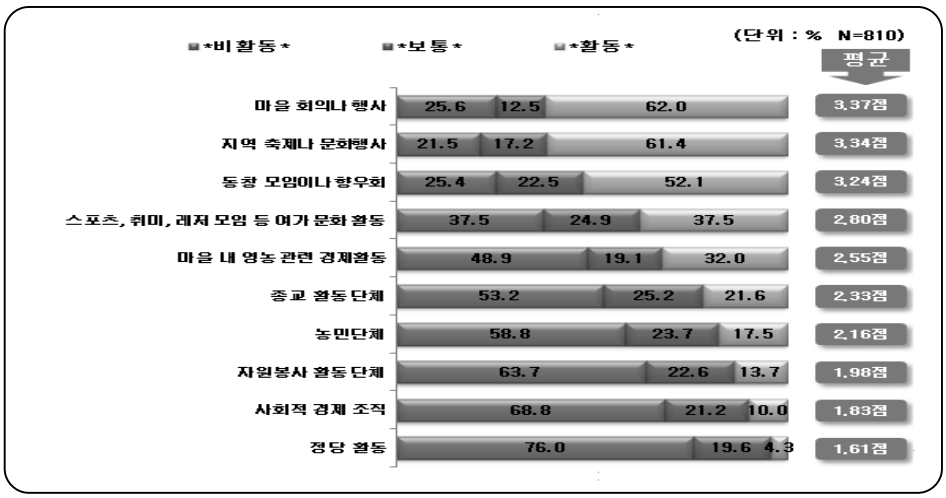
2.6.6. 사회참여

지역모임 및 단체 활동 참여에 얼마나 적극적인지를 조사한 결과, ‘마을회의나 행사’가 3.37점, ‘지역 축제나 문화행사’가 3.34점, ‘동창 모임이나 향우회’가 3.24점으로 다른 항목보다 활동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서 ‘자원봉사 활동 단체’는 1.98점, ‘사회적 경제조직’은 1.83점,

‘정당 활동’은 1.61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참여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3-18>.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지역사회 참여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교차표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마을 회의나 행사의 경우, 면 지역일수록(χ^2=11.18, DF=1, P < .001), 농가일수록(χ^2=44.67, DF=1, P < .001), 일반 농촌주민일수록(χ^2=18.51, DF=2, P < .001)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축제나 문화행사의 경우, 농가일수록(χ^2=4.25, DF=1, P < .05), 가구소득이 높을수록(χ^2=9.28, DF=2, P < .01)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취미, 레저 모임 등 여가 문화 활동의 경우, 노인이 아닐수록(χ^2=22.98, DF=1, P < .001), 가구소득이 높을수록(χ^2=35.50, DF=2, P < .001)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8〉 지역사회 참여



자료: 본 연구의 농촌주민(810명) 설문조사 결과.

2.7. 규범

2.7.1. 지역사회 규범 및 안전

‘우리 마을에는 자치규약이 있고, 주민들이 이를 잘 지킨다’라는 문항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응답(66.9%)이 부정적인 응답(5.5%)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지역의 이웃들은 공중질서나 법을 잘 지킨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응답(71.8%)이 부정적인 응답(2.4%)보다 훨씬 더 많았다. ‘우리 지역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4 이상(76.3%)이 동의하였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주민들 간의 갈등이나 싸움이 없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3/4가량(73.6%)이 동의하였다<표 3-11>.

〈표 3-11〉 지역사회 규범 및 안전

단위: %(N=810)

사회적 규범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우리 마을에는 자치규약이 있고, 주민들이 이를 잘 지킨다.	0.4	5.1	27.6	55.9	11.0	100.0
우리 지역의 이웃들은 공중질서나 법을 잘 지킨다.	0.4	2.0	25.8	55.9	15.9	100.0
우리 지역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0.2	2.3	21.2	62.0	14.3	100.0
우리 지역은 주민들 간의 갈등이나 싸움이 없다.	0.0	2.2	24.2	62.6	11.0	100.0

자료: 본 연구의 농촌주민(810명) 설문조사 결과.

2.7.2. 자원봉사 경험

농촌주민의 자원봉사 경험 비율은 2017년에 17.6%로 나타나 도시(17.9%) 와 비슷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12>. 농촌주민들의 자원봉사 영역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52.1%)과 ‘환경보전, 범죄예방’(27.7%)이 많았다<표 3-12>.

〈표 3-12〉 자원봉사 경험

단위: %

구 분	자원 봉사 경험 있음	자원봉사 영역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환경보전, 범죄예방	자녀교육 관련	국가 및 지역 행사	재해지역 주민돕기 및 시설복구	기타 (무료상담)
전체	17.8	54.5	18.5	9.1	8.8	3.9	20.9
도시(동부)	17.9	55.0	16.6	9.7	8.7	3.6	21.9
농촌(읍면부)	17.6	52.1	27.7	6.2	9.0	5.4	14.0

자료: 통계청(2017b. 11. 7.).

2.7.3. 기부 경험

농촌주민의 기부 경험 비율은 2017년에 21.0%로 나타나 도시(27.9%)에 비해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13>. 농촌주민들이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57.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기부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24.3%), '기부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7.8%) 순이었다<표 3-13>.

〈표 3-13〉 기부 경험

단위: %

구 분	기부 경험 있음	기부하지 않는 이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기부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기부방법을 몰라서	기부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	직접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서	기타
전체	26.7	57.3	23.2	4.1	8.9	6.3	0.1
도시(동부)	27.9	57.4	22.9	4.0	9.2	6.4	0.1
농촌(읍면부)	21.0	57.0	24.3	4.5	7.8	6.3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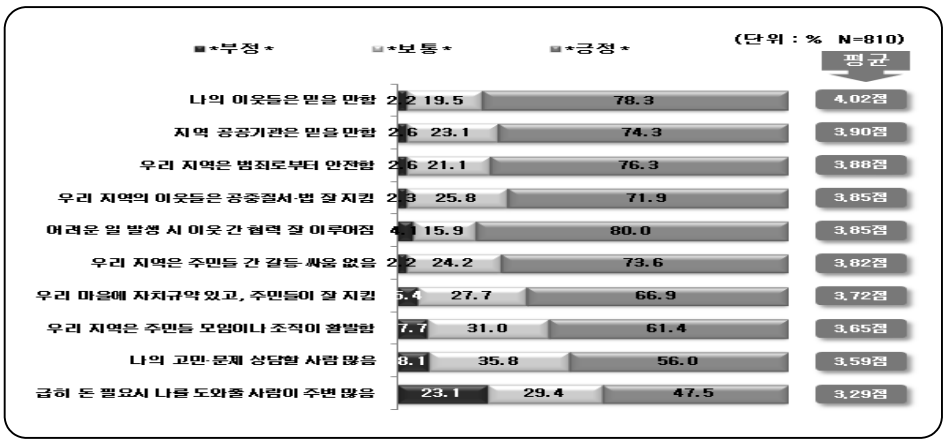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7b. 11. 7.).

2.8. 사회적 자본 종합 척도

사회적 자본에 대해 10개 문항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5점 만점에 평균 3점 이상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나의 이웃들은 믿을 만하다'가 4.02점, '지역 공공기관은 믿을 만하다'가 3.90점, '우리 지역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가 3.88점, '우리 지역의 이웃들은 공중질서·법을 잘 지킨다'가 3.85점, '우리 지역은 주민들 간 갈등·싸움이 없다'가 3.82점으로 다른 항목보다 긍정적인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급히 돈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많다'는 3.29점으로 다른 항목보다 부정적인 의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그림 3-19>.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사회적 자본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10개의 사회적 자본 관련 문항을 더하여(50점 만점)[12] 평균 차 검증(t 또는 F 검증)을 하였다. 면 지역일수록(t=-2.64, P < .01), 노인일수록(t=-2.65, P < .01), 농가일수록(t=4.12, P < .001), 일반 농촌주민일수록(F=3.62, P < .05), 가구소득이 높을수록(F=5.17, P < .01)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았다.

〈그림 3-19〉 사회적 자본



자료: 본 연구의 농촌주민(810명) 설문조사 결과.

12 척도의 신뢰도계수(α 값)는 0.82이다.

3. 정치적 측면의 사회통합 실태

3.1. 정치참여

3.1.1. 선거 투표율

농촌의 선거 투표율은 18대, 19대 대통령선거에서 각각 75.1%, 74.5%였고, 19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56.5%, 58.7%, 5회, 6회 지방선거에서는 63.9%, 63.8%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총선거가 지방선거나 대통령선거에 비해서 투표율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3-14>.

〈표 3-14〉 선거 투표율

단위: %

구 분	전국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읍	면	농촌 (읍+면)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76.8	77.8	77.1	77.3	74.0	75.0	74.5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58.0	59.8	56.8	57.9	56.3	60.7	58.7
2014년 6회 지방선거	57.2	58.6	54.6	54.6	60.5	66.8	63.8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75.6	74.5	76.8	75.8	74.9	75.2	75.1
2012년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54.4	55.2	53.6	53.3	53.5	58.7	56.5
2010년 5회 지방선거	54.9	53.8	50.2	54.2	60.5	66.5	63.9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각 연도). 투표율 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3.1.2. 정당 활동

정당 활동에 있어서는 농촌주민의 91.6%가 정당에 소속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소속되어 가끔 활동한다' + '소속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는 농촌(1.5%)이 도시(1.1%)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15>.

〈표 3-15〉 정당 활동 정도

단위: %

구 분	소속된 적이 없다	과거에 소속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아니다	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안 한다	소속되어 가끔 활동한다	소속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전국	92.6	3.9	2.4	0.9	0.3
도시(동부)	92.8	3.8	2.3	0.9	0.2
농촌(읍면부)	91.6	4.1	2.8	1.1	0.4

주: 설문 조사 항목은 "귀하는 다음 사회단체에 대하여 활동 정도가 어떻게 되십니까?"임.
자료: 한국행정연구원(2016)

3.1.3. 정치 현안 인지 정도

농촌주민 중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정치 현안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대체로 동의하는 편이다' + '매우 동의한다')은 29.0%이고 도시의 경우는 31.6%로 나타났다<표 3-16>.

〈표 3-16〉 우리나라 정치 현안에 대한 본인의 인지 정도

단위: %, 점

구 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평균(5점)
전국	4.1	22.4	42.3	26.6	4.5	3.1
도시(동부)	4.1	22.2	42.1	26.9	4.7	3.1
농촌(읍면부)	4.1	23.8	43.1	25.4	3.6	3.0

주: 설문 조사 항목은 "나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임.
자료: 한국행정연구원(2016).

3.1.4. 농업 및 농촌 현안 관련 정치 참여

농업 및 농촌 현안 관련 정치 참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치 현안에 대해 친구나 이웃 등과 이야기하기'의 활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지난 1년 동안 한 적이 있다' + '지난 1년은 아니지만 그보다 오래 전에 한 적이 있

다')가 2/3 이상(68.4%)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타 농업 및 농촌 현안 관련 정치 참여 경험은 아주 낮았다.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활동 경험 비율이 높은 것은 '서명운동 참여'(9.3%)와 '시장·군수와의 토론에 참여'(4.5%)로 나타났다<표 3-17>.

〈표 3-17〉 농업 및 농촌 현안 관련 정치 참여

단위: %

정치 현안	지난 1년 동안 한 적이 있다	지난 1년은 아니지만 그보다 오래 전에 한 적이 있다	활동한 적은 전혀 없지만 향후 해볼 의향이 있다	활동한 적이 없으며 향후에도 할 의향이 없다	합계
정치 현안에 대해 친구나 이웃 등과 이야기하기	61.4	7.0	4.3	27.3	100.0
블로그·온라인 게시판 등 온라인상에 의견 올리기	2.8	1.9	4.6	90.7	100.0
중앙정부나 시·군청, 언론(신문사, 방송국 등)에 의견 제시하기	1.6	1.6	6.0	90.8	100.0
서명운동 참여(온라인 서명 포함)	4.0	5.3	6.4	84.3	100.0
탄원서·진정서·청원서를 직접 제출하기	1.6	1.1	6.9	90.4	100.0
시위(데모), 집회 등에 참여하기	2.6	1.2	5.2	91.0	100.0
시장·군수와의 토론에 참여	2.2	2.3	8.9	86.6	100.0

자료: 본 연구의 농촌주민(810명) 설문조사 결과.

3.1.5. 정책 건의사항

농촌의 사회통합 증진과 관련하여 중앙정부나 시·군청 등에 건의할 사항은 '일자리 창출'(20명), '취약계층 지원 강화'(18명), '문화생활 기회 확대'(10명), '농업 진흥 및 농민 우대 정책 강화'(10명), '사회갈등 해소 및 사회통합 노력 강화'(10명), '교통 편의성 확보'(9명), '복지 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7명),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유통 지원 강화'(7명) 순으로 많았다.

3.2. 정부의 여건이나 노력

3.2.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군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2007년 16.6%에서 2010년 18.0%, 2017년 18.8%로 조금 증가하였다. 특·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2007년 73.9%에서 2017년 67.0%로 약간 감소하였다<표 3-18>. 그러나 군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특·광역시, 도, 시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8〉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단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국 평균 (순계규모)	53.6	53.9	53.6	52.2	51.9	52.3	51.1	50.3	50.6	52.5	53.7
특·광역시 (총계규모)	73.9	73.8	72.7	68.3	68.6	69.1	66.8	64.8	65.8	66.6	67.0
도(총계규모)	34.9	39.5	33.3	31.6	33.0	34.8	34.1	33.2	34.8	35.9	38.3
시(총계규모)	39.5	40.7	40.7	40.0	38.0	37.1	36.8	36.5	35.9	37.4	39.2
군(총계규모)	16.6	17.2	17.8	18.0	17.1	16.4	16.1	16.6	17.0	18.0	18.8
자치구(총계규모)	37.5	37.1	37.3	35.4	36.6	36	33.9	31.1	29.2	29.7	30.8

자료: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main.do: 2017. 10. 11.).

3.2.2.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 정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농촌주민들은 '노력하지 않는다'('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51.8%)이 '노력한다('약간 노력한다' + '매우 노력한다')는 응답(15.7%)보다 훨씬 많았다. 즉,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표 3-19>.

〈표 3-19〉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 정도에 대한 인식

단위: %

구 분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노력한다	매우 노력한다	평균(5점)
전국	20.5	29.2	32.6	16.5	1.3	2.5
도시(동부)	20.5	28.8	32.6	17.0	1.2	2.5
농촌(읍면부)	20.5	31.3	32.4	13.8	1.9	2.5

주: 설문 조사 항목은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를 위하여 다음 집단들이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임.
자료: 한국행정연구원(2016).

3.2.3. 농촌의 사회통합 촉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과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농촌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은 ① 지역공동체의식의 조성 및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② 지역 권력의 분산, ③ 핵심 역량의 강화, ④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제정, ⑤ 방과 후 교실, 지역아동센터 등의 역할 분담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조정, ⑥ 주민화합 프로그램, ⑦ 지역특화 복합기능 시설 조성 등이다.

- 과거와 같이 지역 내 사람들이 내 동료, 같은 공동체 일원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고 서로 도우면서 만들어가는 의식을 형성해야 한다. 그러려면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그리고 지역주민자치위원회가 제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농민단체장).
-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협동조합장 등의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지역사회 갈등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농민단체장).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통과되면 지자체가 더 이상 예산을 더 확보하지 않고도 여러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사회복지기관장).

- 방과 후 교실, 지역아동센터 등의 역할 분담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다(농촌복지 현장 실천가 및 농촌복지 전문가).
- 주민화합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군청 농업정책 담당 공무원).
- 각 시·군마다 힐링도시나 마을공동체 기업을 운영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지역적 특색을 살려 복합적 기능을 하는 곳을 만들었으면 한다(군청 농업정책 담당 공무원).

4. 종합적 측면의 사회통합 실태

4.1. 복지 및 삶의 질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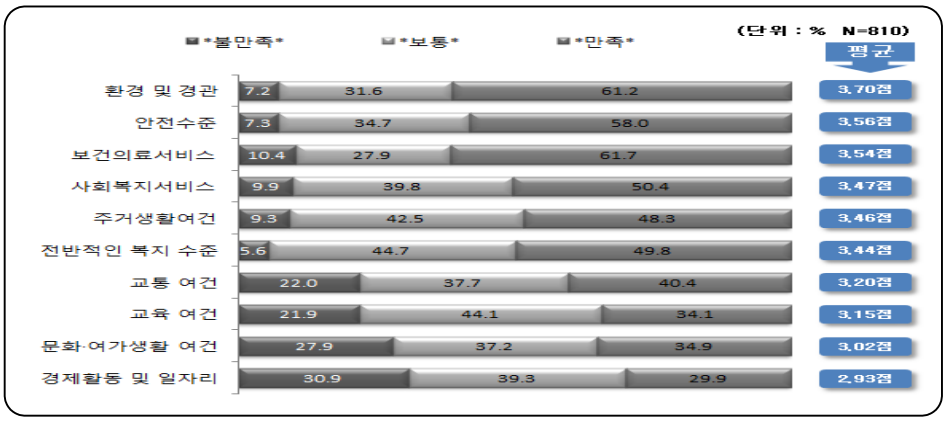
거주 지역의 복지 및 삶의 질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3점 이상으로 나타나 복지 및 삶의 질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환경 및 경관'이 3.70점, '안전 수준'이 3.56점, '보건의료서비스'가 3.54점으로 다른 항목보다 만족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제활동 및 일자리'가 2.93점으로 다른 항목보다 불만족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경제활동 및 일자리'(29.9%), '문화·여가생활 여건'(34.9%), '교육 여건'(34.1%) 순이었다 <그림 3-20>.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복지 및 삶의 질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10개의 복지 및 삶의 질 만족도 관련 문항을 더하여(50점 만점)[13] 평균 차 검증(t 또는 F 검증)을 실시하였다. 읍 지역일수록(t= 5.52, P < .001) 복지 및 삶의 질 만족도가 높았다. 이것은 읍 지역의 복지 및 삶의 질 관련 생활 여건이 면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13 척도의 신뢰도계수(α 값)는 0.84이다.

〈그림 3-20〉 복지 및 삶의 질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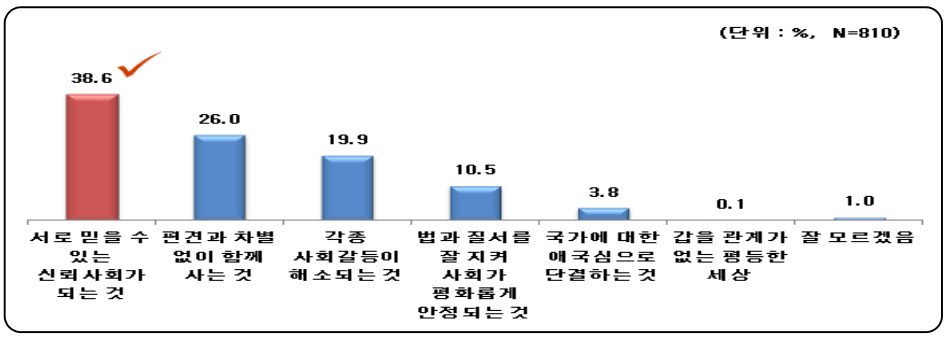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의 농촌주민(810명) 설문조사 결과.

4.2. 사회통합의 의미

사회통합의 의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사회가 되는 것'이라는 응답이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편견과 차별 없이 함께 사는 것'이 26.0%, '각종 사회갈등이 해소되는 것'이 19.9%, '법과 질서를 잘 지켜 사회가 평화롭게 안정되는 것'이 10.5%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3-21>.

〈그림 3-21〉 사회통합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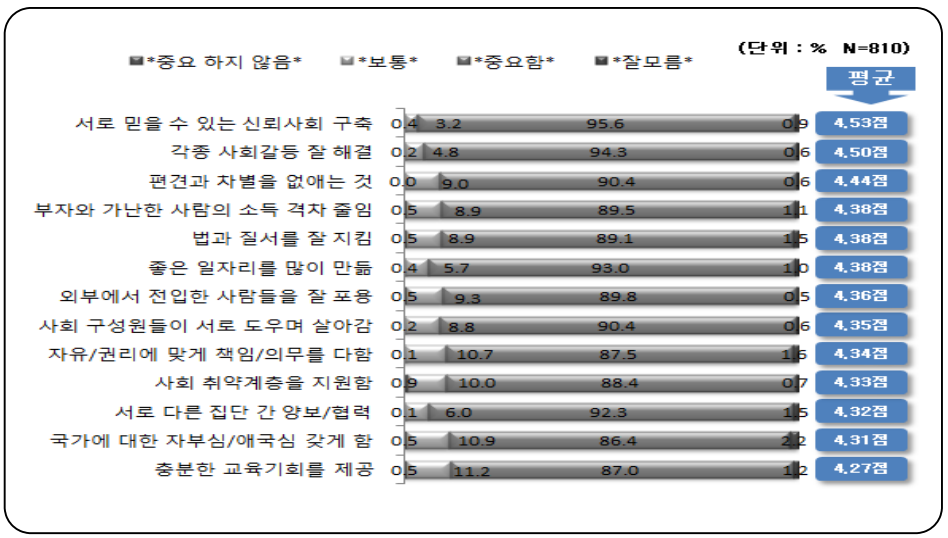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의 농촌주민(810명) 설문조사 결과.

4.3. 농촌 사회통합의 중요 요소

사회통합이 잘 되기 위한 중요 요소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5점 만점에 평균 4.2점 이상으로 나타나 사회통합의 13개 요소 모두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사회 구축'이 4.53점, '각종 사회갈등을 잘 해결하는 것'이 4.50점,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것'이 4.44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득 격차 줄임'이 4.38점, '법과 질서를 잘 지킴'이 4.38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듦'이 4.38점, '외부에서 전입한 사람들을 잘 포용'이 4.36점,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감'이 4.35점, '자유·권리에 맞게 책임·의무를 다함'이 4.34점,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함'이 4.33점, '서로 다른 집단 간 양보·협력'이 4.32점, '국가에 대한 자부심·애국심 갖게 함'이 4.31점,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이 4.27점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3-22>.

〈그림 3-22〉 농촌 사회통합의 중요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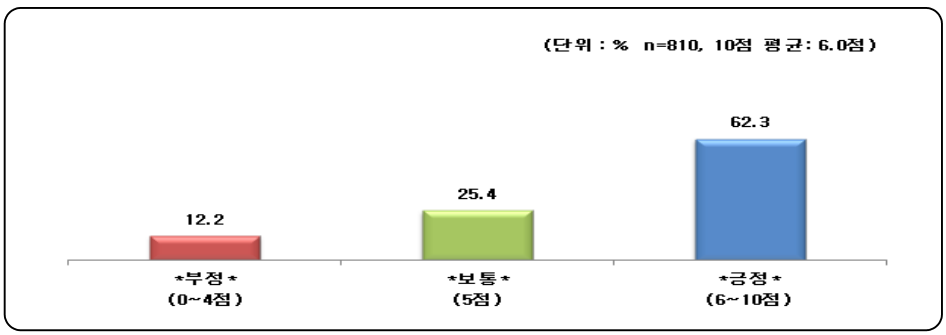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의 농촌주민(810명) 설문조사 결과.

4.4. 농촌의 사회통합 수준 평가

현재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정적 응답(0점~4점)은 12.2%, 긍정적 응답(6점~10점)은 62.3%로 나타나 농촌의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라는 응답(5점)은 25.4%였다. 농촌의 사회통합 수준 평가 점수는 10점 만점에 6.0점이었다<그림 3-23>.

농촌의 사회통합 수준 평가에 대한 집단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차 검증(t 검증)을 실시하였다. 일반 농촌주민보다 다문화가정 주민이 농촌의 사회통합을 낮게 평가하였다(t=-1.43, P < .10). 그리고 일반 농촌주민보다 귀농·귀촌인 농촌의 사회통합을 낮게 평가했다(t=-2.35, P < .01). 이것은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들이 농촌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3〉 농촌의 사회통합 수준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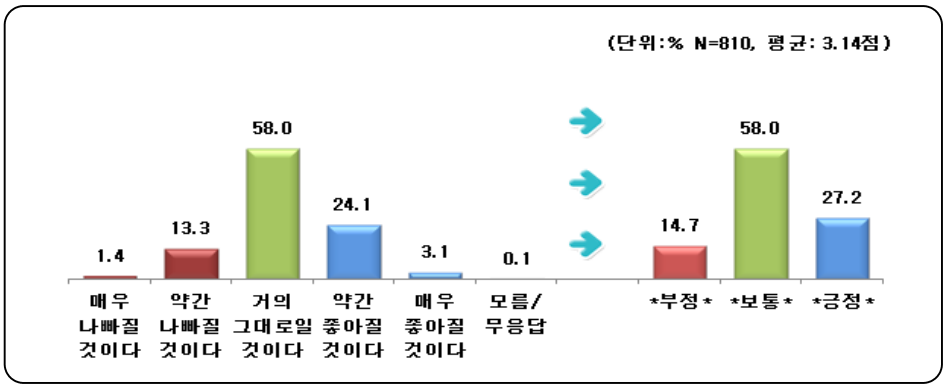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의 농촌주민(810명) 설문조사 결과.

4.5. 향후 농촌의 사회통합 전망

'귀하께서는 현재 대비 향후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에 대하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부정적 응답이 14.7%('매우 나빠질 것이

다' + '약간 나빠질 것이다')이고, 긍정적 응답이 27.2%('매우 좋아질 것이다' + '약간 좋아질 것이다')로 나타나 향후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 전망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응답자보다 다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24>.

〈그림 3-24〉 향후 농촌의 사회통합 전망



자료: 본 연구의 농촌주민(810명) 설문조사 결과.

5. 실태조사 결과의 요약

기존 통계자료 분석, 본 연구의 면접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는 사회통합의 영역이나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경제적 측면의 농촌 사회통합 실태를 살펴보면, 소득계층 인식 및 빈곤 영역에서 가구의 소득계층 인식의 경우 '중하층'(41.0%), '중간층'(38.4%), '하층'(16.8%)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가구의 소득계층 인식은 여자일수록, 노인일수록 하층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농촌의 빈곤율은 17.4%~32.6%이고 도시의 2배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

촌에서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소외되거나 배제된 계층은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중소농,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계층, 오·벽지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빈곤층 등으로 나타났다.

소득 양극화의 경우, 특히 농가의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사회가 소득계층으로 양극화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40.0%로 높게 나타났다. 농촌사회 소득계층 양극화의 주된 원인으로는 '일자리 및 돈벌이 기회의 부족'이라는 응답이 32.6%로 가장 많았다. 농촌사회 소득계층 양극화 완화에 필요한 정책으로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발굴 및 확대', '중소농 육성정책', '농촌형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 등이 강조되었다.

가구의 현재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불만족한다는 응답보다 약간 많았으며, 읍 지역에 거주할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박탈의 경우는 '생활하는 데 바빠서 취미생활을 잊고 지낸 지 오래되었다'는 사람이 전체의 1/4 정도나 되었다. 경제적 박탈 인식은 여성일수록, 노인일수록, 다문화가족일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높았다.

농촌주민의 공적 연금 가입 비율은 61.6%로 나타나 1/3 이상이 공적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적 측면의 농촌 사회통합 실태를 살펴보면, 개인의 포용 수준을 '외지 출신 구성원들을 자신의 이웃으로 포용할 수 있는지'로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3점 이상으로 나타나 사회적 포용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범죄 경력자'에 대한 포용 점수는 1.82점으로 나타나 다른 구성원들에 비하여 매우 낮았다. 지역의 포용 수준을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해당 구성원들에게도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지'로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3.5점 내외로 나타나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해당 구성원들의 거주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갈등의 경우, 집단 간의 사회갈등은 대체로 심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었으나 진보집단과 보수집단의 이념갈등(17.3%), 빈부갈등(16.9%), 고령층과 젊은 층 갈등(16.4%)은 심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농촌에서 사회갈등이 가장 심한 집단이나 영역은 귀농·귀촌인과 지역 원주민 간의 갈등, 지역개발과 환경보존 간의 갈등, 지자체 선거 영향으로 인한 갈등, 노인들 간의 갈등 등이었다. 사회갈등 유발 및 사회통합 저해 요인은 '빈부격차 심화'(57.5%), '소외계층 문제'(48.3%), '이해 당사자의 지나친 이익 추구'(45.9%) 등으로 조사되었다.

문화·여가활동의 경우,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비율 및 횟수에서 농촌이 도시보다 상당히 낮았다. 앞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은 '여행·관광'(27.9%)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농촌에서 문화·여가활동 장애요인으로는 '원하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없다'가 31.4%로 가장 많았다.

사회복지의 경우, 농촌주민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비율은 80.3%이고, 읍 지역의 가입률은 89.9%인 데 비해서 면 지역은 7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 치료 시 어려움은 '치료비가 부담된다'가 32.4%,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기 어렵다'가 16.5%, '의료기관까지 이동이 어렵다'가 11.8%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용 의사가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는 기초연금(85.3%), 의료비 지원(71.0%), 주택 관련 서비스(50.4%), 교통수단 지원(50.2%) 순이었다.

신뢰의 경우, 대인 신뢰의식의 경우 대체로 농촌이 도시보다 신뢰수준이 더 높았다. 그리고 농촌주민들의 지역 신뢰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의 경우, 집단 간 소통은 대체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회, 중앙정부, 시·군청과 농촌주민 간의 소통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행사 추진 시 주민 간 의사소통은 부정적 응답(7.9%)보다 긍정적 응답(59.6%)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소속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점 이상으로 높았다. 마을공동체 의식은 5점 만점에 평균 4점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사회참여의 경우, '마을 회의나 행사', '지역축제', '동창 모임이나 향우회'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다.

규범의 경우, 지역사회 규범 및 안전에 관한 문항들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2/3～3/4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주민들의 자원봉사

경험은 17.6%에 불과하고, 농촌주민의 기부 경험 비율(21.0%)은 도시(27.9%)에 비해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을 10개 문항을 사용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5점 만점 기준으로 3점 이상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사회적 자본 수준은 면 지역일수록, 노인일수록, 농가일수록, 일반 농촌주민일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았다.

정치적 측면의 농촌 사회통합 실태를 살펴보면, 정치 참여의 경우 선거투표율은 국회의원 총선거가 지방선거나 대통령선거에 비해 상당히 낮았다. 정당 활동에 있어서는 농촌주민의 91.6%가 정당에 소속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촌주민 중에서 우리나라의 정치 현안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9.0% 정도로 나타났다. 농업 및 농촌 현안 관련 정치 참여는 '정치 현안에 대해 친구나 이웃 등과 이야기하기'(68.4%) 외에는 참여도가 낮았다.

정부의 여건이나 노력 영역에서, 군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특·광역시, 도, 시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았다. 그리고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농촌주민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은 지역공동체의식의 조성 및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지역 권력의 분산, 핵심 역량의 강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제정, 방과 후 교실, 지역아동센터 등의 역할 분담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조정, 주민화합 프로그램, 지역특화 복합기능 시설 조성 등이었다.

종합적 측면의 농촌 사회통합 실태를 살펴보면, 농촌주민의 복지 및 삶의 질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5점 만점 평균 점수 기준으로 3점 이상으로 나타나 상당히 높았다. 읍 지역일수록 농촌주민의 복지 및 삶의 질 만족도가 높았다. 사회통합의 의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사회가 되는 것'이라는 응답이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편견과 차별 없이 함께 사는 것'이 26.0%, '각종 사회갈등이 해소되는 것'이 19.9% 순이었다.

사회통합이 잘 되기 위한 중요 요소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5

점 만점 평균 점수 기준으로 4.2점 이상으로 나타나 사회통합이 잘 되기 위한 13개 요소 모두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정적 응답(0점~4점)이 12.2%, 긍정적 응답(6점~10점)이 62.3%로 나타나 현재 농촌의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이나 귀농·귀촌인의 경우, 일반 농촌주민에 비해 농촌의 사회통합에 대한 평가가 낮았다.

향후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 전망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부정적 응답이 14.7%이고, 긍정적 응답이 27.2%로 나타났다.

농촌주민의 사회통합인식 영향요인 분석

제4장

1. 분석모형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두 단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1단계 분석모형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사회포용 및 사회적 자본 지표와의 관계를 회귀분석하였다. 사회포용과 사회적 자본 지표와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분석을 통해 일반적인 농촌주민의 특성과 사회통합의 세부지표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통제변인으로 적용된 변인은 성별, 연령, 교육 등으로 나타났다(김미곤 외 2014; 김문길 2017). 이 외에 가구소득을 경제상황에 대한 객관적 지표로 추가하고, 소득계층, 경제적 양극화 인식, 경제상태 만족도를 주관적 지표로 추가하였다. 또한 읍 지역과 면 지역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생활 여건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거주 지역이 농촌 사회통합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농가 여부와 주민 유형에 따라서 사회통합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변수로 추가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변인으로 성별, 연령, 교육 외에 가구소득, 소득계층, 경제적 양극화 인식, 경제상태 만족도, 읍·면 지역, 결혼상태, 농가 여부, 주민 유형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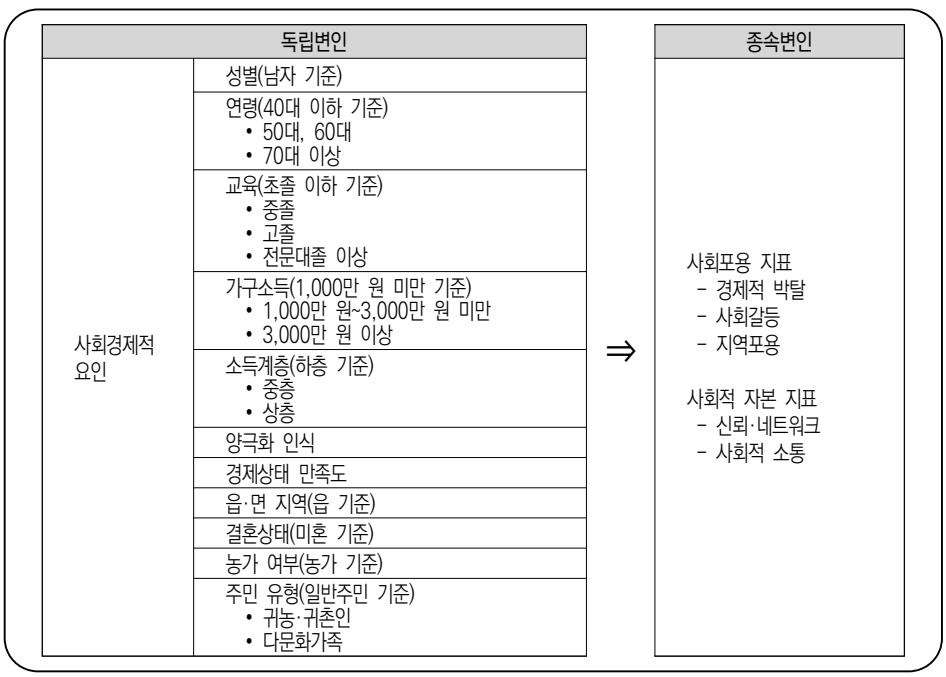
제2단계 분석모형은 통합적 모델로서 농촌주민의 사회통합인식 관련 설명요인에 사회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포용과 사회적 자본 지표를 포함하였다. 사회통합 지표의 영향력을 구분해서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

을 사용하였다.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선행연구들(김미곤 외 2014; 김문길 2017)에 따르면, 설명변인으로 갈등 인식(이념·빈부·세대갈등), 사회적 포용 정도, 사회적 자본, 세대 간 사회이동성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포용 영역을 대표하기 위해서 경제적 박탈, 사회갈등, 지역포용 지표를 사용하였고, 사회적 자본 영역을 대표하기 위해 신뢰·네트워크와 사회적 소통 지표를 사용하였다.

1.1. 제1단계 분석모형

<그림 4-1>은 제1단계 분석모형으로 사회경제적 요인과 사회포용 및 사회자본 지표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회귀분석 모형을 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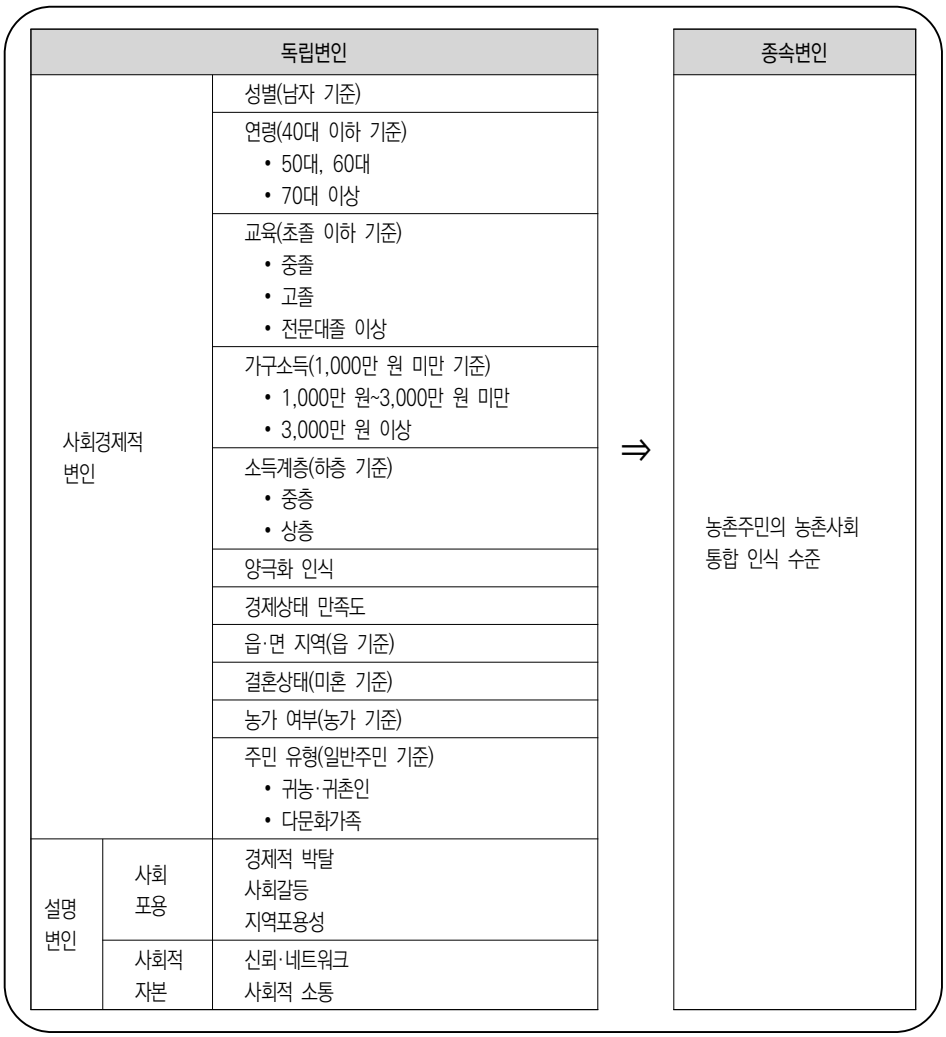
〈그림 4-1〉 사회경제적 요인과 사회포용,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



1.2. 제2단계 분석모형

<그림 4-2>에는 농촌주민의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요인과 사회포용, 사회적 자본 지표를 설명변인으로 한 통합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림 4-2〉 농촌주민의 사회통합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모형



2. 측정방법

2.1. 사회경제적 변인

사회경제적 변인으로 성별(남 = 0, 여 = 1), 연령(40대 이하 준거기준, 50대-60대, 70대 이상), 교육(초졸 이하 준거기준, 중졸, 고졸, 전문대졸 이상), 가구소득(1,000만 원 미만 준거기준, 1,000만 원~3,000만 원 미만, 3,000만 원 이상), 소득계층(하층 준거기준, 중층, 상층), 양극화 인식(5점 척도: 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 경제상태 만족도((5점 척도: 1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5 = 매우 만족한다), 읍면 지역(읍 준거기준), 결혼상태(0 =미혼·사별·이혼, 1 = 기혼), 농가 유형(0 = 농가, 1 = 비농가), 주민 유형(일반 주민 준거기준, 귀농·귀촌인, 다문화가족)을 포함하였다.

2.2. 설명변인 및 종속변인

사회포용 지표로는 경제적 박탈, 사회갈등, 지역포용을 사용하였다. 경제적박탈 정도는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사회, 문화, 취미 등의 활동을 하지 못한 정도를 묻는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5점 척도, 25점 만점, 척도 신뢰도 0.90). 사회갈등은 농촌의 다양한 계층과 지역, 집단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정도를 11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5점 척도, 55점 만점, 척도 신뢰도 0.87). 지역포용은 응답자의 거주지역이 외국인 이주자, 다문화가정 자녀, 귀농·귀촌인, 소외계층 등에 대해 어느 정도 포용적인지 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5점 척도, 20점 만점, 척도 신뢰도 0.82).

사회적 자본 지표로는 신뢰·네크워크와 사회적 소통을 사용하였다. 신뢰·네트워크 정도는 지역 주민 간 신뢰도와 응집도를 6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5점 척도, 30점 만점, 척도 신뢰도 0.71). 사회적 소통의 경우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기관의 소통 정도를 9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5점 척

도, 45점 만점, 척도 신뢰도는 0.86).

농촌주민의 사회통합인식 수준은 현재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10점 척도로 측정하였다(0～10점).

3. 농촌주민의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사회통합은 크게 사회포용 영역과 사회적 자본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포용 영역은 불균형과 배제를 극복하는 것이고 사회적 자본 영역은 사회적 관계와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포용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회갈등, 지역포용, 경제적 박탈을 이용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지역사회의 응집과 신뢰를 측정한 전형적인 사회자본 척도와 사회적 소통을 지표로 이용하였다. 사회경제적 요인이 사회포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경제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사용하고 사회포용 지표와 사회자본 지표를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분산팽창계수(VIF)가 최대 4.54(70대 이상)로 모든 변수의 분산팽창계수가 기준값인 10 이하로 나타나 문제가 없었다<표 4-1>.

〈표 4-1〉 다중공선성 점검 관련 통계

영역		독립변인	분산팽창계수(VIF)
사회경제적 변인		성별(남자 기준)	1.30
		연령(40대 이하 기준) • 50대, 60대 • 70대 이상	 2.87 4.54
		교육(초졸 이하 기준) • 중졸 • 고졸 • 전문대졸 이상	 1.67 3.13 2.70
		가구소득(1,000만 원 미만 기준) • 1,000만 원~3,000만 원 미만 • 3,000만 원 이상	 2.02 2.40
		소득계층(하층 기준) • 중층 • 상층	 1.49 1.26
		양극화 인식	1.14
		경제상태 만족도	1.47
		읍·면 지역(읍 기준)	1.13
		결혼상태(미혼 기준)	1.31
		농가 여부(농가 기준)	1.29
		주민 유형(일반주민 기준) • 귀농·귀촌인 • 다문화가족	 1.16 2.01
설명변인	사회포용	경제적 박탈	1.35
		사회갈등	1.71
		지역포용성	1.14
	사회적 자본	신뢰·네트워크	1.55
		사회적 소통	1.93

3.1. 사회포용과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관계

사회포용 지표인 경제적 박탈, 사회갈등, 지역포용을 종속변수로 세 개의 모델을 만들어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4-2>와 같다.

〈표 4-2〉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사회포용지표와 회귀분석 결과

	경제적 박탈		사회갈등		지역포용	
변수	Beta	P>t	Beta	P>t	Beta	P>t
성별(남자 기준)	0.06+	1.72	-0.04	-1.01	-0.01	-0.23
연령(40대 이하 기준)						
• 50대, 60대	-0.07	-1.36	-0.11+	-1.85	0.17**	2.95
• 70대 이상	-0.20**	-2.93	-0.16*	-2.07	0.32***	4.30
교육(초졸 이하 기준)						
• 중졸	-0.14***	-3.60	0.04	0.80	0.11*	2.48
• 고졸	-0.24***	-4.40	0.07	1.17	0.23***	3.91
• 전문대졸 이상	-0.09+	-1.71	0.11+	1.80	0.14*	2.49
가구소득(1,000만 원 미만 기준)						
• 1,000만~3,000만 원 미만	0.14**	3.35	0.06	1.12	-0.15**	-3.14
• 3,000만 원 이상	0.01	0.19	0.04	0.65	-0.13**	-2.59
소득계층(하층 기준)						
• 중층	-0.21***	-5.67	-0.11*	-2.48	0.06	1.43
• 상층	-0.03	-0.86	0.00	-0.11	0.03	0.76
양극화 인식	-0.01	-0.31	0.15***	3.90	0.01	0.24
경제상태 만족도	-0.26***	-7.32	-0.11**	-2.57	0.14***	3.41
읍·면 지역(읍 기준)	0.06+	1.73	-0.02	-0.64	-0.04	-1.03
결혼상태(미혼 기준)	-0.05	-1.34	0.04	0.90	-0.04	-0.95
농가 여부(농가 기준)	-0.06+	-1.73	0.07+	1.69	-0.01	-0.26
주민 유형(일반주민 기준)						
• 귀농·귀촌인	-0.08*	-2.52	-0.07+	-1.87	-0.02	-0.52
• 다문화가족	-0.01	-0.25	-0.03	-0.66	0.04	0.72
F	13.76***		4.58***		4.58***	
R^2	0.23		0.10		0.07	

주: +는 P<.1, *는 P<.05, **는 P<.01, ***는 P<.001임.

사회통합의 한 지표인 경제적 박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나이, 교육, 소득, 경제적 계층, 경제 만족도와 주민 유형으로 나타났다. 70대 이상이 젊은 층에 비해 경제적 박탈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졸과 고졸이 초졸 이하 집단에 비해 경제적 박탈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대졸 이상 집단도 유의도 0.1 수준에서 경제적 박탈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경제적 박탈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수준이 1,000만 원과 3,000만 원 사이에 있는 집단이 1,000만 원 이하 집단에 비해 경제적 박탈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자신의 경제적 계층을 중층으로 생각하는 집단이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 비해 경제적 박탈을 덜 느꼈다. 이와 비슷하게 경제상태에 만족할수록 경제적 박탈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주민 유형 중 귀농·귀촌인의 경우 일반 주민에 비해 경제적 박탈을 덜 느꼈는데 이는 귀촌인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경우가 많은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의도 0.1 수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경제적 박탈을 더 느꼈으며, 농가가 비농가에 비해 경제적 박탈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나이가 어릴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고 계층이 낮을수록, 경제적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귀농·귀촌 집단에 비해 일반 주민이 더 경제적 박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박탈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경제 만족도(β = -0.26)와 소득계층(중층, β = -0.21), 그리고 교육(고졸, β = -0.24)의 표준화계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요인과 교육이 다른 요인에 비해 경제적 박탈에 영향력이 큰 것을 의미한다.

사회갈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나이, 계층, 양극화 인식, 경제상태 만족도로 나타났다. 70대 이상 농촌노인 집단이 40대 이하 젊은 집단에 비해 갈등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도 0.1 수준에서 50대와 60대 집단 역시 40대 이하 집단에 비해 갈등을 덜 느꼈다. 나이가 들수록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왔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갈등 상황에서 떨어져 있거나, 익숙해져서 덜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계층이 중층이라고 답한 집단이 하층이라고 답한 집단에 비해 갈등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층이라고 답한 집단은 하층이라고 답한 집단과 사회 갈등을 느끼는 정도

에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경제적 양극화를 더 심하게 느낄수록 사회적 갈등이 심하다고 응답하였고, 경제상태에 만족할수록 갈등이 낮다고 응답하였다.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사회갈등도 크게 인식하고 있어서 경제적 상태가 사회포용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통계적 유의도 0.10 수준에서 전문대졸 이상 집단이 초졸 이하 집단에 비해 사회적 갈등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유의도 0.1 수준에서 농가에 비해 비농가가 사회적 갈등을 더 느꼈으며, 귀농·귀촌인은 일반 주민에 비해 사회적 갈등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젊고 경제적 수준이 낮으며 양극화를 더 심하게 인식할수록 사회갈등을 더 느꼈다. 사회갈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양극화에 대한 인식(β = 0.15)이 다른 요인에 비해 표준화계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농촌주민의 사회갈등 인식에 대한 양극화 인식의 영향력이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역포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나이, 교육, 소득과 경제 만족도로 나타났다. 50대 이상 집단이 40대 이하 집단에 비해 거주 지역이 더욱 포용적이라고 느꼈다. 중졸 이상 모든 집단이 초졸 이하 집단에 비해 지역포용 정도가 높다고 느꼈다. 경제 상태에 만족할수록 지역포용 정도가 높다고 응답하였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경제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역포용성을 높게 인식했다.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지역사회의 도움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더 포용적이라고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포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연령(70대 이상, β = 0.32)과 교육(고졸, β = 0.23)의 표준화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농촌주민의 지역포용 인식에 연령과 교육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포용 지표인 경제적 박탈(p<.001), 사회갈등(p<.001), 지역포용(p<.001)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분석 모델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경제적 박탈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설명력이 0.23으로 가장 높았다. 사회갈등에 대한 설명력은 0.10, 지역포용에 대한 설명력은 0.07이었다.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갈등과 지역포용 모델의 설명력은 사회경제적 요인 외에 다른 유력한 변수들이 있음을 의미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사회경

제적으로 다양한 농촌집단의 사회통합 실태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회포용 지표와 사회경제적 요인과 관계를 분석하였다.

3.2. 사회자본과 사회경제적 요인과 관계

사회자본 지표인 신뢰·네트워크와 소통을 종속변수로 한 두 개의 모델을 만들어 회귀분석을 하였다.

신뢰·네트워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소득, 계층, 경제상태 만족도와 농가 여부였다. 소득 1,000만~3,000만 원 집단은 소득 1,000만 원 미만 집단에 비해 신뢰·네트워크 수준이 낮았다. 하지만 경제상태가 중층 혹은 상층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하층이라고 응답한 집단에 비해 신뢰·네트워크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상태에 만족할수록 신뢰·네트워크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비농가에 비해 농가의 신뢰·네트워크가 높게 나타났다. 농가의 경우 영농 관련 활동 등에서 공동으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비농가보다 신뢰·네트워크가 높게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유의도 0.1 수준에서 70대 이상 노인 집단이 40대 이하 젊은 집단에 비해 신뢰·네트워크가 높게 나타났고, 면 지역 주민이 읍 지역 주민에 비해 신뢰·네트워크가 높게 나타났으며, 귀농·귀촌 집단보다는 일반 농촌주민의 신뢰·네트워크가 높게 나타났다. 노인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해오고 있어서 젊은 층보다는 높은 신뢰·네트워크 수준을 보인다. 또한 면 지역은 읍 지역보다 작은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을 이루기 때문에 보다 친밀한 사회관계를 토대로 높은 신뢰·네트워크 수준을 보인다.[14] 일반 농촌주민은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귀농·귀촌인보다는 신뢰·네트워크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신뢰·네트워크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소득

14 친밀한 관계는 사회적 자본의 한 요소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면이 더 언급되고 있지만, 강한 유대는 외부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기회에서 제외시키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Portes 1998).

계층(중층, β = 0.18)과 경제만족도(β = 0.16)의 표준화계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농촌주민의 신뢰·네트워크에 소득계층과 경제만족도의 상대적 영향력이 큼을 보여준다.

사회적 소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나이, 계층, 양극화 인식, 경제상태 만족도, 농가 형태로 나타났다. 70대 이상 노인 집단이 40대 이하 집단에 비해 사회적 소통 수준이 잘 이루어진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경제 상태가 중층 혹은 상층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하층이라고 응답한 집단에 비해 사회적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였다.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농촌지역에서 다양한 대화 통로로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소통 수준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농촌지역이 경제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다고 생각할수록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농가보다는 비농가가 사회적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사회적 소통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양극화(β = -0.19)와 경제만족도(β = 0.15), 소득계층(중층, β = 0.15)의 표준화계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농촌주민의 사회적 소통에 경제적 요소와 양극화에 대한 인식의 상대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자본 지표인 신뢰·네트워크(p<.001), 사회적 소통(p<.00)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분석 모델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신뢰·네트워크 모델에서 사회경제적 요인의 설명력은 0.13, 사회적 소통 모델에서의 설명력은 0.14였다. 이는 신뢰·네트워크와 사회적 소통에 사회경제적 요인이 중요한 요인이지만, 다른 설명력이 높은 변수가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집단의 사회통합 실태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표 4-3〉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신뢰·네트워크		사회적 소통	
	Beta	t	Beta	t
성별(남자 기준)	0.06	0.12	0.06	1.39
나이(40대 이하 기준)				
• 50대, 60대	0.06	0.31	0.08	1.31
• 70대 이상	0.13+	0.06	0.15*	2.12
교육(초졸 이하 기준)				
• 중졸	-0.06	0.15	-0.05	-1.00
• 고졸	-0.01	0.80	0.04	0.73
전문대졸 이상	-0.01	0.89	-0.01	-0.12
가구소득(1,000만 원 미만 기준)				
• 1,000만~3,000만 원 미만	-0.11*	0.02	-0.09+	-1.81
• 3,000만 원 이상	0.01	0.85	-0.01	-0.21
소득계층(하층 기준)				
• 중층	0.18**	0.00	0.15***	3.58
• 상층	0.07*	0.05	0.09*	2.18
양극화 인식	-0.02	0.52	-0.19***	-5.18
경제상태 만족도	0.16***	0.00	0.15***	3.73
읍면 지역(읍 기준)	0.06+	0.07	0.05	1.39
결혼상태(미혼 기준)	-0.04	0.32	-0.06	-1.52
농가 여부(농가 기준)	-0.12***	0.00	-0.06*	-1.70
주민 유형(일반주민 기준)				
• 귀농·귀촌인	-0.06+	0.10	-0.01	-0.17
• 다문화가족	0.04	0.38	0.03	0.63
F	6.71***		6.71***	
R^2	0.13		0.14	

주: +는 P<.10, *는 P<.05, **는 P<.01, ***는 P<.001임.

3.3.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농촌주민의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Model 1>은 사회경제적 요인과 사회통합인식과의 회귀분석을 사용하였고, <Model 2>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함께 사회포용 지표(경제적 박탈, 사회갈등, 지역포용성)와 사회적 자본 지표(신뢰·네트워크, 사회적 소통)를 독립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4>.

<Model 1>의 회귀분석 결과, 사회경제적 요인 중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별, 교육(중졸), 소득계층, 양극화 인식, 경제상태 만족도, 농가 여부와 주민 유형으로 나타났다.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사회경제적 요인 중 대부분은 사회통합 지표인 경제적 박탈, 사회갈등, 지역포용성, 신뢰·네트워크, 사회적 소통이 포함된 <Model 2>에서 그 영향력이 사라졌다.

<Model 2>에서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은 성별, 경제상태 만족도와 주민유형이었으며, 사회포용 지표인 경제적 박탈, 사회갈등, 지역포용성과 사회자본지표인 신뢰·네트워크와 사회적 소통이 영향을 미쳤다.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농촌의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경제상태 만족도가 높을수록 농촌의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귀농·귀촌인 집단이 일반 농촌주민 집단보다 농촌의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역시 일반 농촌주민 집단보다 농촌의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였다(유의도 0.1 수준). 사회통합 지표인 경제적 박탈이 낮을수록, 사회적 갈등이 낮을수록, 지역포용성이 높을수록 농촌의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사회적 자본 지표인 신뢰·네트워크가 높을수록, 사회적 소통이 높을수록 농촌의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농촌주민의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지역포용성(β = 0.16)과 신뢰·네트워크(β = 0.15), 사회갈등(β = -0.14)의 표준화계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통합 이론과 일치하는 부분으로 농촌주민의

사회통합인식에 사회포용과 사회적 자본이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사회통합인식(p<.001)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분석 모델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사회경제적 요인만 포함한 <Model 1>의 설명력(R^2)은 0.14, 사회포용 및 사회적 자본 지표를 포함한 <Model 2>의 설명력(R^2)은 0.28로 나타나 사회통합 지표가 사회통합인식을 14% 정도 더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회포용과 사회적 자본을 설명변수로 한 농촌주민의 사회통합인식 모델이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4〉 농촌주민의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인	Model 1		Model 2	
	Beta	t	Beta	t
성별(남자 기준)	0.10*	2.56	0.09*	2.39
나이(40대 이하 기준)				
• 50대, 60대	-0.01	-0.15	-0.03	-0.57
• 70대 이상	0.05	0.69	0.00	-0.04
교육(초졸 이하 기준)				
• 중졸	-0.09*	-2.21	-0.06	-1.49
• 고졸	0.03	0.56	0.00	-0.06
• 전문대졸 이상	-0.01	-0.17	-0.01	-0.14
소득(1,000만 원 미만 기준)				
• 1,000만~3,000만 원 미만	-0.02	-0.50	0.04	0.82
• 3,000만 원 이상	-0.08	-1.57	-0.02	-0.33
소득계층(하층 기준)				
• 중층	0.11**	2.88	0.04	0.92
• 상층	0.06	1.53	0.05	1.31
양극화 인식	-0.13***	-3.86	-0.07	-1.90
경제상태 만족도	0.22***	5.93	0.09*	2.24
읍면 지역(읍 기준)	-0.03	-0.96	-0.05	-1.50
결혼 상태(미혼 기준)	0.02	0.60	0.04	1.12
농가 여부(농가 기준)	-0.07*	-0.21	-0.06	-1.53
주민 유형(일반 주민 기준)				
• 귀농·귀촌인	-0.07+	-1.92	-0.08*	-2.31
• 다문화가족	-0.08+	-1.68	-0.08+	-1.78
경제적 박탈			-0.11**	-2.85
사회갈등			-0.14***	-3.20
지역포용성			0.16***	4.41
신뢰·네트워크			0.15***	3.53
사회적 소통			0.10*	2.06
F	7.44***		11.30***	
R^2	0.14		0.28	

주: +는 P<.1, *는 P<.05, **는 P<.01, ***는 P<.001임.

4. 소결

사회포용 지표인 경제적 박탈과 사회갈등, 지역포용성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은 연령과 교육, 소득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고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포용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 지표인 신뢰·네트워크와 사회적 소통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은 연령, 소득계층, 경제상태 만족도, 농가 여부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계층을 중층이나, 상층으로 인식할수록, 경제상태 만족도가 높을수록, 농가일수록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사회포용 지표인 경제적 박탈, 사회갈등, 지역포용성과 사회적 자본 지표인 신뢰·네트워크와 사회적 소통이 농촌주민의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회귀분석 결과는 사회통합 이론과 일치하는 부분으로 농촌사회의 사회통합에도 사회포용과 사회적 자본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시켜 준다. 이와 함께, 귀농·귀촌인 집단과 다문화가족 집단의 농촌 사회통합인식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나 이 집단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농촌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과 국내외 모범사례 제5장

1.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1. 사회통합 관련 정책과 제도

1.1.1. 사회통합 관련 정부 위원회의 추진 경과

사회통합 관련 정부 위원회는 2000년대부터 조직되어 운영되었다. 그 예로는 노무현 정부의 국민대통합연석회의, 이명박 정부의 사회통합위원회, 박근혜 정부의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있다.

노무현 정부의 국민대통합연석회의는 각계의 대표들이 참여한 총리실 소속의 국정협의기구로 양극화 해소, 노사문제, 국민연금 개혁 등을 다루었다(여유진 외 2014; 한국정책학회 2016).

이명박 정부의 사회통합위원회는 사회 각계각층의 화합과 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총 25개 분야의 국정과제를 설정하였다(여유진 외 2014; 한국정책학회 2016).

박근혜 정부의 국민대통합위원회(2013년~2017년 6월)는 '국민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527호)'에 근거하여 설치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였다.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는 제1차 국민대통합 종합계획(2014년)~제4차 국민대통합 종합계획(2017년)을 수립하였다(국민대통합위원회 2017).

1.1.2. 새 정부의 사회통합 관련 주요 정책

새 정부(문재인 정부)의 사회통합 관련 주요 정책으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의 '포용적 복지국가',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17)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과 '일자리정책'을 들 수 있다. 여기서 '포용적 복지국가'는 "어느 계층도 소외됨이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果實)과 복지서비스를 모두가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존중받는 국가"(보건복지부 2017a: 2)를 지칭한다. 보건복지부(2017b)에서는 '포용적 복지 연구 협의회'를 구성하여 포용적 복지의 모델 정립, 경제적 효과 분석, 실천전략 등을 협의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6대 국정과제(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②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③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 관리 지원, ④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⑤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⑥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를 제시하였다. 보건복지부(2017d: 3)는 "복지－고용－성장으로 이어지는 소득주도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새 정부가 제시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17a. 10. 18.) 또한 사회통합 관련 주요 정책이다. 사회적 경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여 양극화 완화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사회적 경제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신속하게 확산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진출 분야를 확대하고자 10개 분야 88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경제 성장 단계별 특성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금융 접근성 제고, 판로확대 지원, 인력 양성,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사회적 경제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사회적 경제의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진출 분야로는 소셜벤처, 주거환경, 사회서비스, 문화예술, 프랜차이즈, 지역 기반 연계 분야 등이 있다(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17a. 10. 18.).

일자리정책(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17b. 10. 18.)으로는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5대 분야 10대 과제는 ① 일자리 인프라 구축(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 자원 개발), ② 공공일자리 창출(공공일자리 81만 개 확충), ③ 민간일자리 창출(혁신형 창업 촉진,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④ 일자리 질 개선(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근로여건 개선), ⑤ 맞춤형 일자리 지원(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다(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17b. 10. 18.).

1.1.3. 농촌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과 제도

□ 농촌 기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농촌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제도로 농촌 특화형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17a. 10. 18.) 정책을 들 수 있다. 이는 농업활동을 토대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가칭) '사회적 농업법'을 제정하여 사업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농협을 통한 자금 지원 강화 및 판로 확대(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17a. 10. 18.) 또한 농촌 기반 사회통합 관련 제도라 볼 수 있다. 지자체와 농협이 중심이 되어 '농촌 사회적 경제 기금'을 조성하는데, 크라우드 펀딩 등을 활용하여 자금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다. 공영 홈쇼핑 방영 지원(수수료율 인하), 농협 판매장 내 입점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판로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협동조합, 농촌공동체회사,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하여 돌봄, 교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도 발표된 바 있다(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2017. 8. 30.).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복지여성과에는 사회적 경제 추진팀이 설치되었으며, 앞으로 농촌에 사회적 경제의 기반을 조성하고 농촌형 사회적 경제 모델을 정립할 계획이다(농림축산식품부 2017. 9. 11.).

□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농림축산식품부 2017) 사업은 '농촌공동체 활성화 및 농촌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지원 내용은 ① 농촌현장포럼 및 활성화지원센터 운영, ② 농촌 재능 나눔 활동 지원(재능 나눔 공모사업, 농촌 집 고쳐주기 등), ③ 농촌사회 복지증진 사업(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농번기 주말 돌봄방, 농촌 보육 여건 개선사업,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 등), ④ 농촌지역 활성화 지원(농촌지역종합개발 지원, 농촌 활력 정착 지원 등) 등이다.

□ 농촌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다(여성가족부·관계부처합동 2012). 이 계획의 목표는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을 강화하며,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총 86개의 정책과제가 ①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7개), ②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15개), ③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16개), ④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16개), ⑤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21개), ⑥ 정책 추진체계 정비(11개) 등의 부문별로 제시되어 있다.

결혼이민자 영농교육·훈련(농림축산식품부 2016) 사업은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기초농업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한국어 등 기초적응훈련을 마친 농촌지역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기초 수준의 농업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농촌 사회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주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1:1 맞춤 농업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실제 영농 활동에 종사하는 농촌지역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귀농·귀촌인 관련 정책

귀농·귀촌인 관련 정책은 ① 청년층 농업창업 중점 지원, ② 일자리·주거 등 안정적 정착 지원 강화, ③ 지역주민과의 융화지원 강화 및 지원체계 개편 등이 있다(김귀영 2017).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정착 맞춤형 지원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며(1,500명, 월 100만 원, 2018년부터), 6차 산업 창업 지원 제도 또한 마련되어 있다.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주거 등을 지원하는 정책도 있다. 그 예로 지역일자리 연계 지원, 귀촌인 농업분야 취·창업 지원, 귀농 초기 현장실습 확대, 귀농인의 집 조성 확대, 주택 신축·구입자금 한도 확대 등의 사업이 있다(김귀영 2017).

지역주민과의 융화를 돕고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정책도 있다. 귀농·귀촌인 및 지역주민 대상 융화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 내 학습조직 및 동아리 모임을 활성화하는 것이 그 예이다. 또한 민관 참여 '중앙귀농귀촌인협회'를 구성·운영한다거나 지자체 현장 중간지원조직을 육성(귀농귀촌지원센터 확대)하는 정책도 있다(김귀영 2017).

□ 농촌 노인 및 사회복지 관련 정책

농촌 노인 관련 정책으로는 취약농가 인력 지원과 농촌사회 복지증진 사업이 있다.

취약농가 인력 지원으로는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사업이 있다. 영농도우미 사업은 사고·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행복나눔이 사업은 농촌지역 고령·취약가구 및 경로당에 행복나눔이를 보내어 기초적인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농림축산식품부 2017).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사업,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 사업은 농촌 사회복지 증진사업의 일환이다. 교통 여건이 취약한 농촌지역에서 대체교통사업을 추진할 때 비용을 지원하는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사업의 경우, 2017년에는 18개소 내외에 총 900백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사업의 수혜자는 주로 의료·문화 서비스 측면에서 낙후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소외계층이다. 이들은 행복버스를 통해 의료 지원, 장수 사진, 방문콘서트 등을 제공받는다. 마지막으로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 사업의 경우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면 단위 내에서 15명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다. 2017년의 지원 규모는 160여 개소로 계획되었으며 개소당 5백~25백만 원을 지원한다(농림축산식품부 2017).

1.2. 문제점

농촌의 사회통합 관점에서 바라본 우리나라 사회통합 관련 정책과 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사회통합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업과 농촌의 특성을 별로 반영하지 못했다. 국민대통합 종합계획(국민대통합위원회 2014a: 317)은 “4대 목표(① 국민통합 기반 구축, ② 사회갈등의 실효적 예방과 조정, ③ 통합가치 정립 및 상생 추구, ④ 소통 공감을 통한 신뢰 구축)”를 설정하고, 141개 세부추진과제(국민대통합위원회 2014b)를 추진했으나 농업 및 농촌의 특성을 반영한 과제는 7개 정도에 불과했다. 이 계획은 4차까지 수립되었지만 계획의 부분적인 수정만 이루어졌을 뿐, 농업 및 농촌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과제는 여전히 극소수에 불과하다. 더구나 국민대통합위원회가 2017년 6월 30일에 운영을 종료함에 따라 사회통합 과제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체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은 중대농 중심이어서 소농들은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규모화·전업화 방향에 따라 2000년 즈음부터 대농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였다(한국농정 2011. 5. 30.). 농림축산식품부도 과거의 소득정책이 ‘규모화·전업농’에 초점이 있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3: 16).

농식품부는 이에 대한 반성으로, 중소농 대상으로는 들녘경영체, 6차 산업 정책을 활용하고, 영세·고령농 대상으로는 공동체 경영, 사회안전망 정책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당초 의도에 부합하게 추진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먼저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의 경우, 개별 농가를 조직화·규모화하여 경영비를 낮추는 등의 효과를 노린 것이지만 실제 정책은 몇몇 대농 위주로 진행되고 정작 소농은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한국농정 2015. 12. 7.). 중요 농정 수단인 직불제 또한 '소득 재분배의 역진성'에 대한 지적을 받아 왔다(김병률 외 2017: 6).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 경작면적에 비례하여 지급되어 농가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유찬희 외 2016: 7에서 재인용), 기본적으로 '대농을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었다(이태호 2013).

또한 2017년 농업정책을 보더라도, 농업의 규모화를 목적으로 농지규모화 사업, 과원규모화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농지매입·비축사업, 경영이양직접지불제 등과 같이 사업 대상 또는 가점 부여 대상자로 전업농육성 대상자가 포함된 경우도 많다. 반면 영세 소농 대상으로는 농업정책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소농의 조직화를 도모하는 사업[15]이나 취약농가인력지원과 같이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하는 정도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영세·고령농 정책의 경우 농업정책보다는 맞춤형 복지정책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 2017. 1. 6.). 게다가 소농의 조직화 사업은 앞서 언급된 들녘경영체 육성사업과 유사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실제 소농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적 경제 활성화 관련 문제점으로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제정이 지체되고 있어서 사회적 경제의 통합적 추진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농업 정책의 대상과 범위, 실천의 주체 등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부족하다.

넷째,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15 들녘경영체육성사업,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등이다.

정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사회통합의 추진이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많다. 다시 말해, 가족 통합이나 가족 구성원의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이다.

더구나 다문화가족 관련 서비스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위치하는 시·군청 소재지 또는 읍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넓은 지역에 산재되어 거주하는 농촌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소수의 전담인력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반 면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은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자가용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관련 복지기관을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결혼이민자의 한국 적응단계 또는 품목별로 참여 의지나 교육수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행 결혼이민자 대상 농업교육은 기초농업교육과 1대 1 맞춤형 농업교육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도 한계이다. 이뿐만 아니라 중도입국 자녀의 증가, 이혼 또는 사별 다문화가정의 증가,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 등으로 인해서 새로운 정책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다섯째, 귀농·귀촌 관련 정책에 있어서는 귀농인, 귀촌인, 지역 원주민 간의 화합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여전히 부족하다. 최근 농촌지역에서 귀농·귀촌인이 겪는 사회갈등이 다양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귀농·귀촌인과 지역 원주민 간의 갈등은 마을 공동시설이나 재산의 이용, 마을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해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 등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귀촌인들은 지역 원주민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따로 노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귀농인과 귀촌인 간에도 생계유지, 경제수준, 생활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농민신문 2017. 8. 21). 따라서 귀농인, 귀촌인, 지역 원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농촌 노인 및 사회복지 관련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그동안 소득보장의 외형적인 틀은 선진국 수준으로 갖추었으나 농업이나 농촌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농촌 주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농촌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농촌의 사회통합 관련 국내외 모범사례

2.1. 유형별 농촌의 사회통합 모범사례

농촌의 사회통합 관련 국내외 모범사례의 유형은 ① 민·관 협력 활성화, ②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③ 서비스 접근성의 개선, ④ 공유시설을 활용한 취약계층의 포용, ⑤ 지역 간 갈등 해결 및 주민화합, ⑥ 사회적 경제와 일자리 창출, ⑦ 포용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2.1.1. 민·관 협력 활성화

□ 창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창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 2017c).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강화의 일환으로 ① 기능 강화 및 확대, ②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위원회 TF팀 구성, ③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심의를 실시한다. 또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추진한다. 공공복지 한계 극복을 위한 지역자원 활용 극대화의 일환으로 ① 지역자원 보석캐기 '스마일쿠폰 나눔 사업', ② 지역사회 자원연대 '행복드림후원회', ③ 창녕군 장학재단을 통한 저소득 청소년 인재육성을 실시하고 있다.

창녕군 희망울타리 복지안전 네트워크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c). 희망울타리 구축 사업(희망나누미, 희망이장), 자원연대 사업(행복드림후원회), 희망 나눔 공동체 사업(읍면협의체 및 창녕군 지역사회보

장협의체), 지역보호 어깨동무사업(집배원, 검침원 등을 활용한 방문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창녕군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다양한 계층의 대표자를 선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17년에는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사업'에 선정되었다(경남일보 2017. 8. 10.).

□ 해남군 현산면의 민·관 협력 복지사업[16]

매년 초에 현산면과 관내 자원봉사단체가 협의하여 월별 단체별 역할 분담 계획을 수립하여 복지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 간담회 및 식사(효자손봉사대), 장애인과 지역의용소방대원들과 나들이 행사, 어린이 문화체험(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과 현산면 체육회를 연계), 어르신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나들이(저소득 노인들과 주부대학이 함께 참여), 독거노인 합동 생신잔치(면 여성단체 합동), 고독사 지킴이(효자손봉사대) 등을 실시하였다.

2.1.2.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

일본의 경우 다문화공생정책의 태동 및 형성에 있어서 시민단체와 지방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2005년에 '다문화공생 추진에 관한 연구회'가 설치되었다. 일본에서 "다문화공생이란 '국적이나 민족 등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쌓아가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박영준 2013: 258)을 의미한다.

고치현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문화공생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

---

16 2017년 6월 7일에 해남군 현산면사무소에서 실시한 초점집단면법(FGI) 및 기타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서 수집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다.[17] 무료로 일본어교실을 열고, 일본어 자원봉사 강사를 양성하였으며 생활정보를 다언어화하였다. 뉴스레터 'TosaWave'(An Information Magazine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Kochi)를 영어와 중국어 버전으로 발행하였다. 방재대책으로 ① 고치현 거주 외국인을 위한 지진 대비 안내 팸플릿을 6개 국어(영어, 중국어, 한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로 발행하였고, ② 6개 국어 휴대용 지진대비 안내 책자(6개 국가 이외의 외국인을 위해서는 쉬운 일본어 버전의 지진대비 안내 책자를 보급)를 발행하였다(박대식 2017). 또한 재해 발생 시 어학 서포터를 양성하여, 2016년 구마모토 지진 발생 당시, 고치현의 어학서포터 인력을 파견하였다. 이 외에도 응급처치 안내를 6개 국어로 발행하였고, 쓰나미 대비 장애물 지도를 3개 국어(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발행하였다(박대식 2017).

□ 독일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독일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큰 틀은 '지원'과 '요구'이다. 이는 사회통합을 적극 '지원'하는 측면과 이민자들이 사회통합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개념이다. "고숙련 노동자 유입을 위한 법제를 정비하고 독일사회에 통합되지 않은 외국인 주민과 이들의 가족을 통합하는 것"을 사회통합정책의 목적으로 한다(이성순 2011: 191).

또한 2016년에는 망명 신청자들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는 새로운 '난민 통합법'이 통과되었다.[18] 난민들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독일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에 초점이 있으며 정부가 통합 과정에 적극적 참여자로 포함되도록 하였다. 법에 포함된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 교육 과정, 언어 교육 과정, 근로 프로그램, 노동법, 영주권 등이 있다.

---

17 연구책임자가 2017년 8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일본 고치현 지역에서 실시한 출장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박대식 2017).

18 Gatestone Institute. <https://www.gatestoneinstitute.org/8145/germany-integration-law>. 검색일: 2017. 6. 20.

2.1.3. 서비스 접근성의 개선

□ 진주시의 무장애시설(Barrier Free: BF) 인증제도

무장애시설(BF) 인증제도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사회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건물, 도로, 공원 등 개별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 조성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이다(진주시 2017: 1). 무장애시설(BF) 인증제도는 국가지정 인증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 LH,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시행하고 있다. 진주시는 2012년 7월에 전국 최초로 무장애도시를 선포하고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5년에는 진주시 무장애시설(BF) 인증 기준을 만들었다. 그동안 진주시는 도로, 공원, 공공시설물, 교통 분야에서 1,000여 곳에 2,000여 건의 무장애시설물을 설치하였다(경남도민일보 2017. 5. 12.; 진화경·고성룡 2016). <그림 5-1>에는 진주시의 무장애시설(BF) 인증 도안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5-1〉 진주시 BF 인증 도안(Symbol)

○ 재 질: 스테인리스(부식형)
○ 인증 시설물에 무료 부착
○ 의 미
- 「무장애 도시 진주」의 “무(無)”를 장애인과 일반인, 임산부 등이 함께 어울리는 형태로 표현하고 촉석루의 누각을 형상화
- 받침은 영문 진주로 표기하고, 테두리 원형은 서로 어울린다는 의미로 표현

자료: 진주시(2017: 1).

□ 경남의 찾아가는 산부인과

경상남도의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4개 군(의령군, 고성군, 산청군, 함양군)의 임산부와 일반 여성들을 위해 의료진과 의료장비를 특수 개조한 대형 차량에 실어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서비스이다<그림 5-2>. 특장차에는 유방암 촬영장치, 디지털 초음파 영상진단기, 심전도검사 장비, 골밀도측정기 등이 탑재되어 있고,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행정요원, 운전원이 탑승한다(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관 2015. 10. 28.).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2008년에 경상남도에서 처음으로 자체사업으로 시작하였고, 2009년에는 보건복지부의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으로 채택되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송미령 외 2013; 보건복지부 2015). 경상남도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을 위해서 2016년에 국비 2억 원을 포함해 총 5억 3,100만 원을 투입하였다. 2016년의 이용자 수는 2,182명이었다(한겨레신문 2017. 5. 15.).

〈그림 5-2〉 경상남도 찾아가는 산부인과

자료: 경상남도 페이스북 페이지(https://www.facebook.com/bravogsnd/photos/pcb.1046033758798031/1046032652131475/?type=3&theate: 2017. 11. 20.).

□ 해남교육복지네트워크의 청소년 휴카페[19]

청소년 휴카페 사업의 목적은 길거리 청소년들에게 소통과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스스로 문화를 만들어가며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지하는 것이다. 2015년에 사업을 시작했으며, 삼성꿈장학재단과 해남군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았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공원 등에 휴카페 이동차량(개조한 45인승 버스)을 주차하고 멘토 2명이 청소년과 소통하며 다양한 청소년 참여활동과 상담 및 자원연계활동을 수행한다. 참여 대상은 해남지역의 12세 이상 20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2015년에는 47회, 2016년에는 70회 운영하였다.

2016년의 경우 총 2,259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청소년 휴카페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해남교육복지네트워크 2017). 청소년 휴카페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과 만나기(휴카페의 홍보와 오리엔테이션, 청소년 인권과 노동, 프로그램 안내 등), 보드게임으로 친해지기, 꼼지락꼼지락(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공예품을 완성하기), 만화로 만나는 세상, 청소년 성교육, 초간편 요리대회, 식품안전 3분 팀, 음악을 통한 관계 맺기, 청소년 인문학 등이 있다.

〈그림 5-3〉 해남교육복지네트워크 청소년 휴카페 활동 모습

자료: 해남교육복지네트워크(2017: 8.).

---

19 2017년 6월 7일에 해남군 현산면사무소에서 실시한 초점집단면법(FGI) 및 기타 관계자 면담, 해남교육복지네트워크의 자료집 등을 통해서 수집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 영양군종합자원봉사센터의 '짜장면 시키신 마을' 사업

'짜장면 시키신 마을' 사업은 2008년부터 매년 월 1회 영양군 내에서 짜장면이 배달되지 않는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그림 5-4>. 이 사업의 목적은 신체적 정신적인 기능 저하로 인하여 가족 및 사회에서 소외되고 고립되어 가는 노인들에게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영양군종합자원봉사센터 2017). 이 사업은 매년 10개 내외의 마을에서 지난 10년 간 총 100여 차례 실시하였다. 짜장면 중식 제공 외에 이·미용, 장수사진 촬영, 우체통 제작, 주거개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영양군 종합자원봉사센터 회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이루어진다. 2017년부터 시작한 '낭만검객의 칼갈이'는 주민들을 위해 부엌칼, 농사용 칼, 농기구 등을 손봐주는 사업이다. '짜장면 시키신 마을'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후원금으로 주로 충당하고 있다(경북일보 2017. 3. 15.; 영양군종합자원봉사센터 2017).

〈그림 5-4〉 마을노인들이 짜장면을 먹고 있는 모습

자료: 영양군종합자원봉사센터(2017: 8).

2.1.4. 공유시설을 활용한 취약계층의 포용

□ 경기도농업기술원의 농촌마을 공동농장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운영하는 농촌마을 공동농장은 마을의 공동부지 등에 농장을 조성하여 농촌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목적은 ① 농촌 노인들에게 공동생산 및 협업관계를 제공함으로써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삶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② 농촌 노인과 젊은 층의 상호 협력을 통한 유대강화로 지역사회를 활력화하는 것이다(경기도농업기술원 2017). 2016년에는 2개 지역(여주시 산북면 용담리, 양평군 양동면 단석1리)에서, 2017년에는 5개 지역(평택, 양주, 가평, 양평, 안성)에서 사업을 실시하였다(경기도농업기술원 2017; 농촌여성신문 2017. 2. 4).

농촌마을 공동농장의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① 농업생산기반 조성, ② 공동생활 여건 조성, ③ 농장운영체계 및 제반 관리운영 지원 등을 들 수 있다(경기도농업기술원 2017). 농촌마을 공동농장은 힘든 농사일에서 손을 뗀 농촌 노인들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공동식사와 건강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작년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여주시 산북면 용담리의 마을공동농장에서는 고구마와 딸기를 재배하였고, 양평군 양동면 단석1리의 경우에는 부추를 재배하였다(농촌여성신문 2017. 2. 4.).

〈그림 5-5〉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마을 공동농장 활동

[여주 농촌마을 공동농장에서 딸기모 정식하는 모습]

[양평 농촌마을 공동농장 체조교실]

자료: 경기일보(2017. 3. 29.,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32729: 2017. 11. 20.).

□ 일본 고치현의 앗타카후레아이센터[20]

‘앗타카후레아이’란 ‘따스한 만남과 교류’를 의미한다.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복지욕구에 대응하는 소규모 다기능 복지 거점의 역할을 한다. 2009년에 설치되어 2017년 현재 고치현 내의 29개 시·정·촌에서 총 43개소의 앗타카후레아이센터를 운영 중이다(박대식 2017).

이 센터는 고치현의 중산간지역에 설치되어 있는데, 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원격지 마을에는 인공위성이라는 의미의 새틀라이트(satellite)가 설치되어 있다. 2017년 현재 기준으로 고치현 내에는 총 210개의 새틀라이트(satellite)가 운영 중이다. 새틀라이트는 공민관, 집회소 등과 같은 기존의 시설을 활용한다.

앗타카후레아이센터의 필수적 기능은 ① 모임 및 만남의 장소 제공, ② 방문·상담·연계, ③ 생활지원이다. 부가적 기능으로는 ① 탁아소, 탁노소, ② 송영서비스, ③ 취로 지원, ④ 학습(치매교육, 쓰나미체험교육, 구강 케어, 육아교육 등), ⑤ 지역사회 교류 등이 있다. 확충기능으로는 ① 이동수단 확보, ② 배식서비스, ③ 긴급 시 일시적 숙박, ④ 개호예방, ⑤ 치매카페 운영 등을 들 수 있다(박대식 2017).

앗타카후레아이센터의 운영은 고치현과 시·정·촌에서 각각 절반씩 지원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기본형 인원배치는 총 3명(직원 2명, 지역복지 코디네이터 1명)이며, 송영서비스를 하게 되면 인원이 증가한다. 운영협의회는 15~20명 규모로 구성되고 있다. 그리고 시·정·촌에서 사회복지법인, NPO법인, 민간기업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60%가량을 운영하고 있다(박대식 2017).

---

20 연구책임자가 2017년 8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일본 고치현 지역에서 실시한 출장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박대식 2017).

〈그림 5-6〉 고치현 쓰노정 앗타카후레아이센터 활동

자료: 고치현 쓰노정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http://www.tsuno-shakyo.or.jp/wdoc/?q=grp101: 2017. 11. 20.).

2.1.5. 지역 간 갈등 해결 및 주민화합

□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영호남 갈등 치유

고령군에서는 2005년부터 영호남이 가야문화라는 한 뿌리에서 비롯되었음을 알려서 지역갈등을 치유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를 운영하였다. 공통의 역사, 문화, 뿌리를 이루는 가야문화를 발굴하고 가야문화권을 개발하면 영호남의 갈등을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국민대통합위원회 2016b).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국민대통합위원회 2016b; 경북매일 2017. 8. 30.)에는 영호남의 경계 지역에 위치한 20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 유산 공동 등재 등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 2013년부터 화합을 위한 '가야문화권 시·군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2015년 '가야 유물·유적으로 보는 가야의 예술혼'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다.

□ 논산시의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사례[21]

논산시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을 둘러싼 갈등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2013년 7월에 논산시에서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입지를 두고 논산시 연산면과 노성면 간 갈등이 시작되었다. 기본계획에서는 노성면에 충청유교문화원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후 연산면에서는, 충청 유학은 연산면의 돈암서원을 요람으로 하여 김장생, 김집, 송시열 등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에 충청유교문화원은 연산면에 건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노성면에서는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기본계획'의 원안대로 2018년까지 노성면에 건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노성면과 연산면의 갈등은 논산시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 면을 대표하는 종중 간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져 갈등이 전개되는 양상을 띠었다. 이러한 입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은 청와대 비서실 및 감사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대외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렇듯 갈등이 확산되자 문화체육관광부와 충청남도 등 관계기관에서는 논산시의 '사업 추진 의지 부족과 주민 갈등에 대한 대안 부재'를 이유로 유교문화원 건립 국·도비 지원액을 삭감하였다. 이에 논산시에서는 '유교문화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입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양 지역의 추진위원회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지역의 유치 논리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양 지역의 주민 대표와 문중 대표를 만나서 부지 결정방법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였다. 입지 선정에서 탈락된 면에 대해서는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과 연계하여 대안 사업을 추진하기로 설득하였다. 결국 노성면에는 원래의 계획대로 유교문화원을 건립하여 연구와 교육 지원을 약속하고, 연산면에는 문화와 휴양의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것을 약속함으로써 양 지역 간의 갈등을 해결하였다.

---

21 국민대통합위원회(2016b)의 관련 사례를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2.1.6. 사회적 경제와 일자리 창출

□ 사회복지법인 구리노미엔 복지농장(일본 나가노현 오부세정)[22]

장애인들이 지역에서 일하고, 지역주민들과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체제를 농업 부문에서 만들기 위해서 1997년에 '쿠리노미엔'을 설립하였다. 이 농장은 장애인이 생활력을 갖추기 위한 복지와 농업을 융합시킨 6차 산업화를 추진한다. 사회복지법인 쿠리노미엔은 농업과 농산물 가공품의 제조·판매를 통해서 지적·정신·신체에 장애를 가진 사람을 지원하는 취업 지원 시설이다. 약 8ha의 농지, 3,800수를 사육하는 양계장이 있고, 가공공장에는 약 50명의 장애인이 일하거나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방목한 닭이 낳은 자연 유정란은 유명한 지역 브랜드 중의 하나로 꼽힌다(박대식 외 2017).

주력 상품인 자연 유정란을 통한 6차 산업화를 시도하였으며, 자연 유정란을 사용한 가공품은 계란 기름을 비롯하여 카스텔라, 케이크, 쿠키, 푸딩 등 30종 이상에 이른다(박대식 외 2017).

이 농장의 주요 성공요인은 지역주민들과의 신뢰관계 구축에 있다. 농장은 지역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농작물과 가공품을 생산하였다. 지역주민들과의 신뢰관계 구축은 농지의 확대에도 연결되었는데 처음에는 농지확보가 어려웠지만 점차 지역의 고령농가들로부터 농지를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박대식 외 2017).

□ 서귀포귀농귀촌협동조합[23]

서귀포귀농귀촌협동조합은 2013년에 조직되었다. 창립 당시에는 조합원이 16명이었으나 현재는 35명으로 늘어났다. 이 중에서 25명이 귀농·귀촌인이고, 10명이 현지 원주민이다. 서귀포귀농귀촌협동조합은 이윤배당을 하지 않고 있으며, 생활공동체를 지향한다. 마을기업 인증을 받았고 다중

22 박대식 외(2017)의 자활기업 부문 성공사례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23 박대식 외(2017)의 협동조합 부문 성공사례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이해관계자 협동조합 형태이다. 서귀포귀농귀촌협동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클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박대식 외 2017).

‘우리 마을 꾸러미 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먹거리인 고사리, 흑돼지, 옥돔, 갈치 등을 지역주민의 생산력과 귀농·귀촌인의 인적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꾸러미로 만들어 전국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그림 그리는 해녀 사업’은 제주형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농어촌지역의 문화예술 창작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해녀들에게는 미술수업을 통해서 문화예술의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미술수업을 통해서 마음치료를 하고, 다큐멘터리 영화 ‘그림 그리는 해녀’를 통하여 아름다운 ‘제주 해녀’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다(박대식 외 2017).

〈그림 5-7〉 서귀포귀농귀촌협동조합 활동

[다큐멘터리 ‘그림 그리는 해녀’ 포스터]

[고사리·옥돔·흑돼지 등을 직거래하는 ‘우리마을 꾸러미사업’]

자료: 연합뉴스(2015. 5. 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06/0200000000AKR20150506099200056.HTML: 2017. 11. 20.);
한국농어민신문(2016. 1. 12),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496: 2017. 11. 20.).

□ 새벽 영농조합법인

‘새벽 영농조합법인’은 ‘남원지역자활센터’의 자회사격인 사회적 기업으로서 2007년에 만들어졌다(박진도 2011). 새벽 영농조합법인은 음식물 쓰

레기를 수거하여 돼지를 사육하고 퇴비를 만들어 유기농 채소를 생산한다. 생산된 농축산물은 직영하는 식당에서 판매하거나 '사회적 유통'을 통해서 지역의 공공기관에 납품한다. 즉, 새벽 영농조합법인은 유기농, 로컬푸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을 실천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다. 새벽 영농조합법인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음식물 쓰레기를 농축산물을 재배(사육)하는 데 활용하여 자원을 순환시켜 환경도 살리고 사회적 일자리도 창출하는 것이다. 새벽 영농조합법인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여 신뢰를 형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다. 그리고 판매되지 않고 처치하기 어려운 B급 이하의 유기농산물을 전북광역자활센터와 연계하여 복지관이나 단체급식소 등에 공급하는 '사회적 유통'을 추진하고 있다(송미령·민자혜 2013; 파이낸셜투데이 2013. 4. 8.).

2.1.7. 포용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

□ 중국의 도농 일체화 정책[24]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하는 경제적 부를 달성하였지만 그 부작용으로 도농 간·지역 간·계층 간의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어 사회적 모순과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공산당과 중국 정부는 2011년부터 시작되는 12차 5개년규획(2011-2015) 기간의 경제정책 목표를 성장에서 분배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핵심사상으로 채택하였다.

13차 5개년규획 요강(2016-2020) 역시 성장보다 분배를 강조하며 "전면적 샤오캉사회[25] 건설 완성"에 초점을 맞췄고,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5가지 발전 이념으로 혁신(創新) 발전, 균형(協調) 발전, 녹색 발

24 위탁연구 김태완 외(2017)『사회통합 실태의 도·농간 비교 분석』제7장의 관련 내용을 요약하였다.

25 샤오캉사회는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는 물질적으로 안락한 사회, 비교적 잘 사는 중산층 사회를 의미한다.

전, 개방 발전, 공동향유(共享) 발전 등이 제시되었다. 그중 균형 발전에서는 신형도시화 지역발전이 주요 이슈이며, 지역 간 협조, 도농 간 협조 그리고 더 나아가 도농 일체화 추진이 주요 정책이다. 특히, 13차 5개년규획 요강부터 도농 일체화 추진이 주요 정책이 되었다.

도시·농촌 이원체제의 해체와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국가전략인 도농 일체화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도시·농촌 발전 일체화'라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였고, '삼농문제'는 중국공산당 핵심 추진 사업이 되었으며, 도시·농촌 발전 일체화는 '삼농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경로라고 제시하였다.

도농 일체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시·농촌 발전의 일체화 체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도시·농촌 이원구조체제의 장애물을 신속히 제거하고 도시·농촌 생산요소의 평등한 교환과 공공자원의 균등한 배치를 추진함으로써 대다수 농민이 평등하게 현대화 과정에 참여하여 공평하게 현대화의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농업 현대화 과정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중국 특색의 신형 농업 현대화의 길을 견지하고, 농업의 발전 방식을 신속하게 전환하며, 농업의 종합적 생산 능력, 위험방지 능력, 시장 경쟁 능력, 지속가능한 발전 능력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사회주의 신 농촌을 건설하는 것이다. 자연 규율과 도시·농촌 공간 차별화의 발전원칙을 준수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농촌 행정체계를 계획하며, 농촌 기초시설 건설과 사회사업 발전을 통합적으로 계획하며, 농민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농촌 마을을 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캐나다의 건강한 농촌사회를 위한 통합적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계획[26]

건강한 농촌사회를 위한 '통합적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계획'(Integrated

---

26 Caldwell et al.(2015) 및 City of Kawartha Lakes(2014)을 참조하여 요약·정리하였다.

Community Sustainability Plan: ICSP)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카와타 레이크 시(City of Kawartha Lakes)[27]에서 실시 중이다(Caldwell et al. 2015: 53). 통합적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계획(ICSP)은 2005년에 시작한 지역사업으로 지역사회가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고 보다 건강하고 비용이 덜 드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통합적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계획(ICSP)은 ① 물, ② 농업, ③ 자연환경, ④ 자원소비, ⑤ 건강, 교육과 사회적 웰빙, ⑥ 혁신, ⑦ 문화와 유산, ⑧ 활동적인 지역사회, ⑨ 접근성(accessibility)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 중에서 '건강, 교육과 사회적 웰빙' 및 '접근성'은 사회통합의 좋은 예이다(City of Kawartha Lakes 2014: 13).

건강, 교육과 사회적 웰빙 계획은 사회적으로 통합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과 웰빙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를 다루면서, 지역주민들이 안전하며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한다. 주요 활동은 ① 건강 관련 요인들에 중점을 둔 지역사회 건강 계획을 수립하고, ② 지역주민이 충분히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안전하며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도록 하며, ③ 다양한 교육 수준과 연령의 평생교육과 세대 간 학습을 지원 및 촉진하는 것이다(City of Kawartha Lakes 2014: 56-63).

접근성 관련 계획의 경우 사회·경제·환경적으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추구하는 것이다. 통합적인 지역사회 증진을 위해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제품, 서비스, 실내외 장소, 고용, 정보, 소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시민과 방문객 모두 편안하고, 안전하며 편리하고, 품위 있게 이동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공 교통수단, 교통시설 간 연결(인도와 자전거 길), 장애물 없는 이동보조수단 기반시설을 제공한다. 시 건물을 업그레이드하고 방문객에게 편의시설,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접근성 높은 시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 다양한 경제수준이나 장애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부

27 인구 7만 5천명의 도·농복합시이다.

담이 되지 않으며 접근성이 높은 형태의 주택을 개발하고자 하였다(City of Kawartha Lakes 2014: 88-95).

□ 제주특별자치도의 친서민 농정시책

제주특별자치도의 친서민 농정시책은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되는 소규모 영농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도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①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인 대응이 어려운 소농(경지면적 0.5ha 이하), 고령농(만 65세 이상), 여성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단독농가주), 귀농인, 친환경 인증 농가, 다문화 농가 등의 영세농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들의 경영비 절감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② 정부의 규모화, 조직화 등 선택과 집중의 지원정책 기조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지원을 받는 영세농을 대상으로 도 차원의 배려농정을 추진하는 것이다(제주특별자치도 2017).

지원사업으로는 ① 농경지 암반제거 지원사업, ②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③ 소규모 육모장 지원사업, ④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⑤ 소규모 채소·화훼하우스시설 지원사업, ⑥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 지원사업이 있다(제주특별자치도 2017).

2.2. 국내외 모범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농촌의 사회통합 관련 국내외 모범사례의 유형을 7가지로 정리하였다. 각 유형별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관 협력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군 및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관 주도가 아니라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주도로 구성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창녕군의 경우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면 지역사회 유관기관들의 네트워크와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해남군 현산면의 사례와 같이 관과 민이 협력하되 관은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민간단체의 역할 분담을 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둘째, 지역별로 특화된 다문화 및 이민자 정책이 필요하다. 일본은 다문화정책을 시민단체와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일본 고치현의 경우, 지진이나 응급상황 발생과 관련하여 각종 대비 안내 팸플릿을 6개 국어로 발행하고 있으며, 쓰나미 대비 지도도 3개 국어로 발행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협력하여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진주시의 경우 무장애시설(BF)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시민들에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경남의 '찾아가는 산부인과', 해남교육복지네트워크의 '청소년 휴카페', 영양군종합자원봉사센터의 '짜장면 시키신 마을' 사업은 찾아가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접근성을 개선한 사례로 참고할 수 있다.

넷째,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해서 마을의 공유시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마을공동농장, 마을회관, 폐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의 농촌마을 공동농장은 마을의 공동부지 등에 농장을 조성하여 농촌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일본 고치현의 앗타카후레아이센터는 폐교, 공민관, 집회소 등을 다목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

다섯째, 소통을 통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통해서 지역 간 갈등을 해결하고 주민화합을 이끌 수 있다. 고령군의 경우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영호남의 갈등을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논산시의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사례는 관계의 조정을 통해서 지역 간의 갈등을 해결한 사례이다.

여섯째, 사회적 경제 활동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를 개선할 수 있다. 일본의 사회복지법인 구리노미엔은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와 농업을 융합시켰다. 서귀포귀농귀촌협동조합은 '우리 마을 꾸러미 사업', '그림 그리는 해녀 사업' 등을 통해서 농촌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새벽 영농조합법인은 유기농, 로컬 푸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을 실천하고 있다.

일곱째, 포용성장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 중국의 도농 일체화 정책은 개혁개방 과정에서 발생한 빈부격차와 계층 및 지역 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불안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포용성장'에 기반을 두고 있다. 캐나다의 '통합적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계획(ICSP)은 사회적으로 통합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목적으로 한다.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제품, 서비스, 실내외 장소, 고용, 정보, 소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친서민 농정시책은 그 동안 정부의 지원이 미흡했던 영세농들에 대하여 도 차원에서 '배려농정'을 실천하고 있는 사례이다.

3. 소결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사회통합 관련 정책과 제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사회통합 관련 정부 위원회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새 정부의 사회통합 관련 주요 정책(포용적 복지국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일자리 정책 등)을 정리하였다. 농촌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과 제도로는 농촌 기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 농촌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 귀농·귀촌인 관련 정책, 농촌 노인 및 사회복지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과 제도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①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사회통합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업과 농촌의 특성을 별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 ② 우리나라 농업정책에서 소농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고, ③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 농업 관련 논의와 합의가 부족하다는 점, ④ 다문화가족 정책의 경우 가족 통합이나 가족 구성원의 사회 적응 지원 부족, ⑤ 귀농·귀촌 관련 정책의 경우 주민들 간의 화합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부족, ⑥ 농촌 노인 및 사회복지 관련 정책에서는 농촌주민의 노후생활 보장에

한계가 많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농촌의 사회통합 관련 국내외 모범사례는 일곱 가지 유형(① 민·관 협력 활성화, ②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③ 서비스 접근성의 개선, ④ 공유시설을 활용한 취약계층의 포용, ⑤ 지역 간 갈등 해결 및 주민화합, ⑥ 사회적 경제와 일자리 창출, ⑦ 포용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민·관 협력 활성화 사례로는 창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해남군 현산면의 민·관 협력 복지사업 사례를 살펴보았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관련 사례로는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 독일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을 검토하였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 사례로는 진주시 무장애시설 인증제도와 경남의 찾아가는 산부인과, 해남교육복지네트워크의 청소년 휴카페, 영양군종합자원봉사센터의 '짜장면 시키신 마을' 사업을 살펴보았다. 공유시설을 활용한 취약계층 포용의 사례로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의 농촌마을 공동농장과 일본 고치현의 앗타카후레아이센터 사례를 살펴보았다. 지역 간 갈등 해결 및 주민화합의 사례로는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영호남 갈등 치유, 논산시의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사례를 살펴보았다. 사회적 경제와 일자리 창출 관련 사례로는 사회복지법인 구리노미엔 복지농장, 서귀포귀농귀촌협동조합, 새벽 영농조합법인을 살펴보았다. 포용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사례로는 중국의 도농 일체화 정책, 캐나다의 건강한 농촌사회를 위한 통합적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계획, 제주특별자치도의 친서민 농정시책을 검토하였다.

농촌의 사회통합 관련 국내외 모범사례의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① 민·관 협력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 ② 지역별로 특화된 다문화 및 이민자 정책이 필요, ③ 사회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 필요, ④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해서 마을의 공유시설을 잘 활용할 필요, ⑤ 소통을 통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통해서 지역 간 갈등을 해결하고 주민화합을 촉진, ⑥ 사회적 경제 활동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를 개선, ⑦ 포용성장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해야 함을 들 수 있다.

농촌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제6장

1. 농촌의 사회통합 증진의 기본방향

1.1. 포용적 농촌복지정책의 확대

‘포용’은 사회통합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이다. 새 정부의 사회통합 정책 추진에 있어서 ‘포용’이 강조되고 있다(김연명 2017). 그리고 포용성장에서는 소득분배의 개선과 복지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은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면접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박탈(배제)의 측면에서는 ‘생활하는 데 바빠서 취미생활을 잊고 지낸 지 오래되었다’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1/4 정도나 되었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원하는 최소한의 문화생활도 즐길 수 없다’는 사람도 11.6%나 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포용 지표인 경제적 박탈, 사회갈등, 지역포용성은 농촌주민의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현재 우리나라는 농촌사회의 소득계층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농촌의 사회통합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포용적 농촌복지정책을 확대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농촌 취약계층의 경제·사회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모든 계층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 문화·여가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접근성도 개선해야 한다.

1.2. 농촌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강화

선행연구, 본 연구의 농촌주민 대상 면접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FGI), 농촌주민의 사회통합 인식 영향요인 분석 등에서 사회적 자본은 농촌의 사회통합 증진에 아주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의 농촌주민 대상 면접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집단 간 소통은 대체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회, 중앙정부, 시·군청과 농촌주민 간의 소통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회, 중앙 및 지방정부와 농촌주민 간의 소통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다양한 외부 유입 집단과 내부 집단 간의 소통을 통해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 지표인 신뢰·네트워크와 사회적 소통이 농촌주민의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1.3.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차별화된 사회통합정책 추진

기존 통계자료 분석, 본 연구의 농촌주민 대상 면접설문조사 결과, 초점집단면접(FGI) 등에 따르면, 농촌주민은 사회경제적 특성(읍·면 지역, 성별, 노인 여부, 농가 여부, 가구소득, 주민 유형)에 따라서 사회통합인식 및 관련 욕구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본 연구의 농촌주민 대상 면접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박탈 인식은 여성일수록, 노인일수록, 다문화가족일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사회갈등 인식은 노인이 아닐수록, 비농가일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인식 수준이 높았다. 사회통합의 중요 구성요소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도 일반 주민과 다문화가족(여성 결혼이민자)은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사회 구축'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은 데 비해서 귀농·귀촌인은 '가족 및 사회갈등을 잘 해결'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았다. 따라서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차별화된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6-1>에는 농촌 사회통합 증진의 기본방향과 정책 개선방안이 요약되어 있다.

〈표 6-1〉 농촌 사회통합 증진의 기본방향과 주요 정책 개선방안

기본방향	포용적 농촌복지정책의 확대	
	농촌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강화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차별화된 사회통합정책 추진	
주요 정책 개선방안	경제적 측면의 정책 개선방안	중소농 맞춤형 영농 지원
		사회적 농업의 활성화 기반 구축
		농촌형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농촌 사각지대 축소
	사회문화적 측면의 정책 개선방안	농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개선
		농촌형 무장애시설(Barrier Free) 인증제도의 단계적 추진
		농촌주민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면 지역 청소년·다문화가족 관련 서비스의 접근성 개선
		귀농·귀촌인과 지역 원주민의 융화 프로그램 확대
	정치적 측면의 정책 개선방안	사회갈등 조정 및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구축
		기초 자치단체의 정당공천제도 개선

2. 주요 정책 개선방안

농촌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은 본 연구의 사회통합 영역 구분 방법에 따라서 경제·사회문화·정치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2.1. 경제적 측면의 정책 개선방안

2.1.1. 중·소농 맞춤형 영농 지원

중·소농에 적합한 맞춤형 영농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제주특별자치도(2017)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서민 농정시책을 벤치마킹하여 ① 소형 농기계 지원, ② 소규모 육묘장 지원, ③ 소규모 저온저장

고 지원, ④ 소규모 채소·화훼하우스시설 지원, ⑤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 지원사업 등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중·소농을 농촌사회에 통합하려면 마을영농을 활성화해야 한다. 마을영농은 중·소농, 대농, 고령농, 귀농인 등이 공생할 수 있는 실천방안이다. 일본의 '집락영농'을 참고하여 마을영농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상북도의 사례가 향후 마을영농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때 좋은 모범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경상북도(2016)에서는 2013년부터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북형 마을영농'이란 "농업 경영시스템을 기존의 개별 단위에서 마을 단위로 전환하여 마을구성원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공동체 기능 회복 등으로 지속적인 농업·농촌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북 농업·농촌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경상북도 2016: 4)을 지칭한다.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사업'에서는 영농 형태가 마을주도형, 농협참여형, 기업주도형, 혼합형 등으로 다양하다. 사업량은 매년 5개소 내외이며, 마을 당 3억 원 내외를 마중물 개념으로 지원한다. 지원비는 농기계 창고, 저장시설과 같은 마을공동시설, 농기계 구입비, 기반 정비, 교육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경상북도 2016).

이와 관련하여 유정규(2017)는 집락(마을)영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휴화되는 농업자원을 흡수할 수 있는 고용처가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최근 일본의 집락영농이 "주체의 역량수준, 조직화의 내용, 지역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해 나가고"(유정규 2017: 112) 있다고 설명하였다.

앞으로 중·소농 맞춤형 영농 지원의 일환으로 마을영농 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상북도의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을영농과 관련성이 높은 '들녘별 쌀경영체' 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에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일본의 '집락영농'에 대해서도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2.1.2. 사회적 농업의 활성화 기반 구축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농업에 대한 개념 정의와 실천적 범위에 대한 논의와 합의과정이 필요하다. 현재 사회적 농업에 대한 개념 정의는 국가와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하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의 경우 사회적 농업을 돌봄농업(care farming)으로 간주한다(이윤정 2016). 이탈리아의 경우는 사회적 농업을 “노동통합, 고용, 치유, 재활, 교육을 목적으로 개인, 단체, 사회적 협동조합이 수행하는 농업활동”(김정섭 외 2017: 19)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임송수 외(2016: 10)는 사회적 농업을 “① 건강, ② 교육과 훈련, ③ 사회통합과 포용, ④ 지역개발 등의 이익을 창출할 목적 아래 취약계층을 서비스 대상으로 영농 및 기타 농업활동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서비스”라고 개념 정의하였다. 김정섭 외(2017: 45)는 사회적 농업을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을 통합하는 데 기여하는 농업실천”이라고 개념 정의를 하였으며, 사회적 농업의 특징으로 사회통합, 사회혁신, 사회적 경제를 강조하였다(김정섭 외 2017). 따라서 한국 농촌에 적합하게 사회적 농업을 정의하려면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사회적 농업의 핵심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며, 사회적 농업 관련 지원 정책의 대상을 어떻게 한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좀 더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향후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사회적 농업법’도 ‘사회적 경제 관련법’과 연계하여 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농업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이미 관련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벨기에, 이탈리아 등의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우리나라 농촌 실정에 맞는 법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적 농업법’의 제정 시, 농촌 취약계층의 사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농업을 사회보험과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농업을 현실적으로 지원하려면 농·수협을 통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2.1.3. 농촌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추진

본 연구의 농촌주민 대상 면접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사회의 소득계층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발굴 및 확대'라는 응답이 37.5%로 가장 많았다.

전국적인 기준에서 볼 때 지난 10여 년 동안 노인일자리 사업은 상당한 성과를 나타냈다. 이석원 외(2016)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① 실제적인 노인 문제 및 노인의 욕구 충족 수단으로 기능하고, ② 큰 폭으로 사업이 확대되어 보다 많은 노인들이 참여하게 되었으며, ③ 취약계층에게 사업의 효과가 전달되고, ④ 사업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지원 예산과 인력이 증강하며, ⑤ 효율적인 사업평가 체계를 갖추는 등의 성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박대식 외(2013)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농업 및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일자리 개발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 노인일자리 관련 자원이 부족하고 노인들의 접근성도 취약하다. 그리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거주 지역에 따라서 크게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농촌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뿐만 아니라 사업 담당 인력 등의 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의 기간도 농번기와 농한기를 감안하여 탄력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농번기의 경우에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를 일정 기간 동안 선택적으로 유예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 취업 적합 직종의 경우는 농업과 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다양한 직종을 많이 개발해야 한다. 새로운 농촌형 노인일자리 개발 시 농협, 농업기술센터 등의 농업 관련 공공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잘 구축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의 농촌마을 공동농장 사업은 마을의 공동부지 등에 농장을 조성하여 노인일자리를 제공하는 좋은 사례이다. 그리고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과 연계한 노인일자리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박대식 외 2013).

2.1.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농촌 사각지대 축소

농촌빈곤과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농촌 사각지대를 축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소득인정액 산정 시 농촌 특성의 반영을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면, ① 지출 비용으로 인정하는 직접지불금의 범위 확대, ② 농업 대출금 상환액 중 이자비용 차감 확대를 들 수 있다. 또한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으로는 ① 기본재산액 공제액 상향 조정(대도시는 2000년 3,300만 원에서 2009년 5,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데 비해서 농촌은 2000년부터 2,900만 원으로 고정됨), ② 농지의 소득환산 시 적용되는 환산율(현행 4.17%) 인하[28]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역 부양의무자의 소득 산정 시 농업 관련 부채 원금상환액은 공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이후에 기준 폐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2. 사회문화적 측면의 정책 개선방안

2.2.1. 농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개선

농촌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농촌주민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군 및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을 개선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FGI),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등에 따르면, 시·군 및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여전히 관(시·군청) 주도로 구성되어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관 주도로 구성된 시·군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

28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에 의하면 부양의무자 가구에 적용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월 2.08%로 완화될 예정이다.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 주도로 재구성하도록 유도 및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지역의 각 계층과 집단을 제대로 대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등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편향적으로 위원을 구성할 수 없도록 하는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공정한 공모 과정을 통해서 선발되어야 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다양한 계층의 대표자를 선임하기 위하여 노력한 창녕군의 사례는 타 지역에서 본받을 만하다.

이중섭(2017)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이 주로 일반 지역주민, 자영업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복지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 운영되려면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들을 대상으로 농촌복지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과 실천에 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교육은 일반 지역주민, 사회단체,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2.2.2. 농촌형 무장애시설(Barrier Free) 인증제도의 단계적 추진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 국내외 사례조사 등에 따르면, 무장애시설(Barrier Free)은 농촌의 사회통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진주시에서 무장애시설(BF)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등 7대 광역시에서도 무장애시설(BF)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농촌지역은 광역시나 진주시와 생활여건이 크게 다르다. 그러므로 농촌 현실에 적합한 농촌형 무장애시설(BF) 인증제도를 만들어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북 진안군에서는 '베리어프리(Barrier-free) 진안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진안군에서 내걸고 있는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는 "턱없어 살기 좋고 턱없어 놀기 좋은 진안으로 GO!"이다.

농촌형 무장애시설(BF) 인증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몇 개의 시범 농촌지역을 선정하여 무장애시설과 관련한 기초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는 연구용역 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촌주민들의 불편사항,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도로, 공원, 공공건축물, 일반건축물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2.2.3. 농촌주민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본 연구의 농촌주민 대상 설문조사, 통계청(2017b)의 관련 조사 등에 따르면, 농촌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이나 기부 경험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통계청(2017b) 조사에 의하면, 농촌주민의 자원봉사 경험 비율은 17.6%, 기부 경험 비율은 2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살펴본 '해남군 현산면의 민·관 협력 복지사업'과 영양군종합자원봉사센터의 '짜장면 시키신 마을 사업'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각종 자원봉사단체는 농촌의 사회통합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봉사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농촌주민은 상당히 한정적이다. 따라서 농촌의 많은 주민들이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의 종류, 방법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농촌주민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 및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배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기를 꺼려하는 농촌주민들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실비를 보상해 자원봉사의 참여 동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2017b) 조사에 의하면, 농촌주민들이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기부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기부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전적인 기부가 아닌 '재능기부'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최근 농촌에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귀농·귀촌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의 재능을 발굴·관리하여 자원

봉사활동과 재능기부에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귀농·귀촌인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주요 재능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29] 사업이 농촌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조정되어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7d). 그리고 지역 및 마을별 재능수요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2.2.4. 면 지역 청소년·다문화가족 관련 서비스의 접근성 개선

면 지역 청소년의 문화·여가 관련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가령 면 단위 복지회관, 지역아동센터, 폐교, 종교시설 등을 활용하여 면 지역의 청소년이 방과 후나 주말에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본 연구의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면 지역의 청소년들은 방과 후에 갈 곳이나 함께 모여서 즐길 것이 별로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인근 도시의 문화·여가시설까지의 주말 교통편을 지원하여 면 지역 청소년의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면 지역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여가 서비스도 강화해야 한다. 해남교육복지네트워크의 청소년 휴카페와 같은 사업이 면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면 지역 다문화가족의 서비스 접근성 또한 개선해야 한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시·군청 소재지나 읍 지역에 주로 설치되어 있어서 면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면 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취약 다문화가족에게 교통편 또는 교통요금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

29 사회공헌활동 시간을 점수화하여 마일리지로 축적해 관리하고 이를 통해서 본인, 가족, 제3자가 돌봄 서비스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계시키는 제도로 2016년에 본 사업(17개 시·군·구)이 시작되었다.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 관련 이동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남의 '이동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농협의 '행복버스'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지역농협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면 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농협의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본(예를 들면, 고치현)에서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재난 또는 응급상황 대비 관련 안내서를 다양한 언어로 알기 쉽게 작성하여 면 지역 다문화가족에게 제공하는 것도 다문화가족 서비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하다.

2.2.5. 귀농·귀촌인과 지역 원주민의 융화 프로그램 확대

본 연구의 각종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귀농·귀촌인은 지역 원주민들과 여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사회갈등은 귀농인보다 귀촌인이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갈등은 기존 지역 주민들과 귀농·귀촌인의 생활양식과 문화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농촌 지역사회의 사회문화, 생활양식, 관습, 역사 등에 대한 인문학적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귀농·귀촌인과 지역 원주민 간에 사회갈등을 자주 유발시키는 마을 길, 마을공유재산, 마을기금, 담장, 마을공동작업 등에 대하여 귀농·귀촌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교육과정에서 관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원주민 대상으로는 '귀농·귀촌정책 바로 알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지역 원주민을 대상으로 중앙정부 및 시·군의 '귀농·귀촌정책 바로 알기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정책에 대한 오해나 편견을 불식할 필요가 있다. 이때, 농업기술센터 등의 영농교육이나 시·군청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일부 지역 원주민들은 귀농·귀촌인만 관련 정책의 혜택을 많이 받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사회갈등의 발단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귀농·귀촌인과 지역 원주민의 어울림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이것은 귀농·귀촌인과 지역 원주민의 대화 기회를 마련한다는 의의가 있다. 함께 즐기는 놀이 또는 공연을 바탕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면, 홍성군 홍동면에서는 홍성군귀농귀촌지원센터, 홍성군귀농지원연구회, 홍성군농업기술센터 등이 주도하여 '지역민과 함께 하는 귀농귀촌 어울림 한마당'을 기획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상당수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귀농인 집들이 지원'도 귀농·귀촌인과 지역 원주민의 융화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특히 귀촌인이 농촌마을에서 외톨이가 되지 않도록 동호회 활동이나 사회봉사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으며, 귀농·귀촌인과 지역 원주민의 지역공동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2.3. 정치적 측면의 정책 개선방안

2.3.1. 사회갈등 조정 및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농촌의 집단 간 갈등이 상대적으로 심한 것이 '진보집단과 보수집단의 갈등', '빈곤층과 부유층 간의 갈등', '고령층과 젊은층 간 갈등'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과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농촌에서 사회갈등이 가장 심한 집단이나 영역'이 ① 귀농·귀촌인과 지역 원주민 간의 갈등, ② 지역개발과 환경보존 간의 갈등, ③ 지자체 선거 영향으로 인한 갈등, ④ 노인들 간의 갈등 등이었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농촌 사회갈등을 조정하고 지역의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련 조직을 개선하여 잘 활용하거나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개선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기존의 관련 조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심익섭·문황진(2015)의 연구에 의하면,

현행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의 구성이 자영업자나 지역 유지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대표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 지역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을 제대로 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를 실질적인 주민대표기구로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구성할 예정)를 제대로 구성하고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여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김연명 2017).

지방자치단체의 사회통합 관련 조직을 새롭게 구성할 때에는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로 구성해야 한다. 즉, 지자체의 사회통합 관련 조직을 새롭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조직위원회를 만들어 지역에 거주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 횡성군에서는 '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전문성, 경력, 지역사회 봉사실적 등을 감안하여 선발하였다. '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의 운영 목적은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하여 횡성 발전의 새로운 가치를 정립하는 것이다. 위원의 구성은 100명(위촉직 90명, 당연직 10명)이며 임기는 2년이다. 이 위원회의 활동실적은 2015년에 99회, 2016년에는 81회로 나타났다(횡성군 2017).

2.3.2. 기초 자치단체의 정당공천제도 개선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 전문가 자문회의 등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자체의 선거문화가 농촌사회의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이 공천헌금 등 금품수수의 근거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천권자가 부당하게 지방의정 및 지방행정에 관여하는 원인이 되고"(김순은 2014: 24) 있어서 폐해로 지적된다. 이러한 정당공천의 부작용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방정부의 77%가 '정당표시 금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정당표시 금지제도는 투표용지에 정당의

명칭 표시를 금지하여 정당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축소시키는 제도이다(김순은 2014). 그런데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의 농촌주민들의 경우에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초의원 선거에만 정당공천을 금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김순은 2014)을 계기로 하여 기초의원선거에도 정당공천제가 도입되었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비슷하게 기초자치단체 선거에서는 '정당표시 금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요약 및 결론

제7장

1. 요약

본 연구는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농촌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통합 관련 선행연구 및 이론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입장을 정립하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영역별로 지표를 설정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주민의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농촌 사회통합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농촌 사회통합 관련 국내외 모범사례를 수집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농촌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통합 관련 선행연구를 사회통합 측정 및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사회통합 지표체계 구축 및 지수화에 관한 연구, 사회통합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 농촌의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농촌의 사회갈등에 관한 연구 등으로 분류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사회통합의 핵심 요소를 사회포용과 사회적 자본으로 보았다. 다시 말해 이 연구의 이론적 입장은 사회적 포용(배제) 이론과 사회적 자본 이론의 결합을 바탕으로 하며, 사회적 배제 완화와 사회적 자본 강화가 사회통합 증진에 기여한다는 관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사회포용은 경제·사회문화·정치적 포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사

회적 자본은 신뢰, 네트워크, 규범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는 경제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정치적 측면, 종합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 파악에는 통계자료 분석,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 전문가 자문회의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 나타난 특징은 농촌주민들이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원인을 주로 일자리 및 돈벌이 기회 부족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농촌에서 소외된 계층은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중·소농,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계층, 오·벽지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빈곤계층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노인, 다문화가족, 가구소득이 낮은 응답자의 경우 경제적 박탈 수준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사회문화적 측면을 보면, 범죄 경력자에 대한 포용 수준이 낮고, 지역 포용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으며, 진보집단과 보수집단의 이념 갈등, 빈부 갈등, 고령층과 젊은 층 갈등, 귀농·귀촌인과 지역 원주민 갈등, 지역개발과 환경보존의 갈등, 지자체 선거 갈등을 상대적으로 심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농촌의 경우 도시에 비해 문화·여가활동 빈도가 현저히 낮았다. 원하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이 문화·여가활동의 장애요인이었으며, 국민건강보험 가입률이나 의료시설 이용 등에 문제가 있음이 나타났다. 농촌에서는 기초연금, 의료비 지원, 주택 관련 서비스, 교통수단 지원 등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 기대가 높았다. 신뢰,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 부문에서는 인식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국회, 중앙정부, 시·군청과 농촌주민 간 소통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일부 선거의 투표율이나 정치 참여도, 그리고 군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 측면에서 응답자의 과반수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통합 촉진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노력으로는 지역공동체의식 조성, 지역 권력 분산, 핵심 역량 강화 등이 꼽혔다. 농촌주민의 복지 및 삶의 질 만족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 응답자들은 사회통합의 의미 가운데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사회가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현재 농촌 사회통합의 수준이나 향후 사회통합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

적 반응보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으나, 다문화가정이나 귀농·귀촌인의 경우 일반 농촌주민에 비해 농촌 사회통합 수준을 낮게 평가하였다.

농촌주민의 사회통합인식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적 박탈, 사회갈등, 지역포용성, 신뢰·네트워크, 사회적 소통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포용과 사회적 자본이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려준다. 사회포용 지표(경제적 박탈, 갈등, 지역포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연령, 교육, 가구소득이 있었고, 이들 요인은 사회포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사회적 자본 지표(신뢰·네트워크, 사회적 소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은 연령, 계층, 경제상태 만족도, 농가 여부였으며, 이들은 사회적 자본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귀농·귀촌인과 다문화 집단은 사회통합 수준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어,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통합 관련 몇몇 정책이 실시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사회통합 관련 정책과 제도, 농촌 사회적 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 정책, 농촌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 귀농·귀촌인 관련 정책, 농촌 노인 및 사회복지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다. 우선,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의 경우 농업·농촌의 특성이 잘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점이었다. 또한 우리나라 농업정책에서 소농이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는 점도 문제로 분석되었다. 이외에도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 농업 관련 논의·합의가 부족하다는 점, 다문화가족 정책의 경우 가족 통합이나 가족 구성원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측면에 부족함이 있다는 점, 귀농·귀촌 정책에 실질적 화합 증진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 농촌 노인 및 사회복지 관련 정책에서 농촌 노인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농촌 사회통합 관련 모범사례는 일곱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민·관 협력 활성화 사례로는 창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해남군 현산면의 민·관 협력 복지사업 사례를 살펴보았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관련 사례로는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 독일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을 검토하였다. 진주시 무장애시설 인증제도와 경남의 찾아가는 산부인과, 해남교육복지네트워크의 청소년 휴카페, 영양군종합자원봉사센터의 '짜장면 시키신 마을' 사업 등은 서비스 접근성 개선 사례이다. 공유시설을 활용한 취약계층의 포용 측면에서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의 농촌마을 공동농장과 일본 고치현의 앗타카후레아이센터 사례를 살펴보았다.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한 영호남 갈등 치유, 논산시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사례는 지역 간 갈등을 해결하고 주민화합을 이끌어낸 사례이다. 사회복지법인 구리노미엔 복지농장, 서귀포귀농귀촌협동조합, 새벽 영농조합법인은 사회적 경제와 일자리 창출 관련 사례로 제시하였다. 또한 중국의 도농 일체화 정책, 캐나다의 건강한 농촌사회를 위한 통합적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계획, 제주특별자치도의 친서민 농정시책은 포용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사례로 검토하였다.

농촌 사회통합 관련 국내외 모범사례 검토를 통해서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은 민·관 협력체계의 실효성 제고, 지역별로 특화된 다문화·이민자 정책 수립,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 개선 방식의 다양화, 취약계층 포용 목적의 마을 공유시설 활용 확대, 소통과 이해관계 조정을 통한 갈등 해결과 주민화합 방식 고민, 사회적 경제 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 개선, 포용성장 및 지속가능한 발전 지향 등 일곱 가지이다.

마지막으로 농촌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포용적 농촌복지정책의 확대, 농촌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강화,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차별화된 사회통합 정책 추진으로 설정하였다. 사회적 포용은 사회통합에 중요한 요소로 농촌 사회통합을 증진하려면 포용적 농촌복지정책 확대가 필요하다. 사회적 자본 또한 사회통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소통이 부족한 집단 간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농촌주민의 거주지역이나 성별, 주민 유형 등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사회통합인식 등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이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2. 결론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농촌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정책 개선방안으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① 중·소농 맞춤형 영농 지원, ② 사회적 농업의 활성화 기반 구축, ③ 농촌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추진,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농촌 사각지대 축소를 제시하였다. 사회문화적 측면의 정책 개선방안으로는 ① 농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개선, ② 농촌형 무장애시설(Barrier Free) 인증제도의 단계적 추진, ③ 농촌주민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④ 면 지역 청소년·다문화가족 관련 서비스의 접근성 개선, ⑤ 귀농·귀촌인과 지역 원주민의 융화 프로그램 확대를 제시하였다. 정치적 측면의 정책 개선방안으로는 ① 사회갈등 조정 및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 ② 기초 자치단체의 정당공천제도 개선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로는 첫째, 면접 설문조사의 응답자가 전국 10개 시·군의 20개 읍·면에 거주하는 810명이어서 조사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전국 농촌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집을 해서 좀 더 대규모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함께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면접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FGI), 전문가 자문회의, 출장조사, 협동연구, 문헌조사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였다. 그러나 연구보고서의 분량 제한 때문에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에 관한 다양한 조사 자료를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보고서에 충분히 담지 못한 여러 가지 조사 자료와 위탁연구 결과는 두 권의 <일반과제 부속자료집>으로 출간한다.

셋째, 이 연구는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1/2차년도 연구이기 때문에 농촌의 일반적인 사회통합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리하여 최근 농촌의 사회적 변화에

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의 경우 일반 농촌주민과 비교를 위한 준거집단 정도로 활용하였다.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에 관한 심층연구는 2018년(2/2차년도)에 추진한다. 따라서 2018년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에 특화된 사회통합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부 록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의 발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국무총리실 산하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연구의 일환으로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농촌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예를 들면, 소득 양극화 완화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는 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 결과는 통계법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자료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동법 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하여 조사 종료 후에 파기되오니 안심하시고 원활한 연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대행하고 있으므로 조사와 관련하여 연락을 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 8~9월

문의사항				
	설문 문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부	박대식 선임연구위원 임지은 전문연구원	(061-820-2345) (061-820-2133)
	조사 문의	(주)리서치앤리서치(R&R)	조선미 부장	(02-3484-3053)

SQ1	귀하께서는 어느 지역에 거주하십니까?	1) 경기 양평군 양평읍 2) 경기 양평군 강상면 3) 강원 정선군 신동읍 4) 강원 정선군 북평면 5) 충북 진천군 진천읍 6) 충북 진천군 백곡면 7) 충남 논산시 강경읍 8) 충남 논산시 부적면 9) 전북 완주군 봉동읍 10) 전북 완주군 운주면 11) 전남 곡성군 곡성읍 12) 전남 곡성군 석곡면 13) 전남 해남군 해남읍 14) 전남 해남군 북평면 15) 경북 영천시 화산면 16) 경북 영천시 북안면 17) 경북 예천군 효자면 18) 경북 예천군 감천면 19) 경남 의령군 의령읍 20) 경남 의령군 궁류면
SQ2	귀하께서는 최근 10년 내 귀농 또는 귀촌하셨습니까?	1) 예 (귀농·귀촌한지 년) 2) 아니오
SQ3	귀댁에는 결혼 이민자가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Part A. 경제활동 및 소득

Q01-1. 귀하께서 현재 주로 종사하는 직업은 무엇입니까?

1) 농림어업
2) 자영업(무엇:)
3) 사무·관리직(무엇:)
4) 생산·기능직(현장노동 등)
5) 가정주부
6) 무직·퇴직
7) 기타(무엇:)

Q01-2. 귀하는 현재의 직업 이외에 부업으로 하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1) 없음
2) 있음(무엇:)

Q01-3. 귀댁의 가구 유형은 무엇입니까?

1) 전업농가
2) 겸업농가
3) 비농가

Q01-4. 귀댁 가구원 전체의 2016년도 총 가구소득은 대략 얼마 정도였습니까?

1) 500만 원 미만
2) 500만 원~1,000만 원 미만
3) 1,000만 원~1,500만 원 미만
4) 1,500만 원~2,000만 원 미만
5) 2,000만 원~3,000만 원 미만
6) 3,000만 원~4,000만 원 미만
7) 4,000만 원~5,000만 원 미만
8) 5,000만 원~6,000만 원 미만
9) 6,000만 원~7,000만 원 미만
10) 7,000만 원~8,000만 원 미만
11) 8,000만 원~1억 원 미만
12) 1억 원 이상

Q01-5. 귀하는 현재 귀댁의 경제 상태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3) 그저 그렇다
4) 대체로 만족한다
5) 대단히 만족한다

Q01-6.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전체 기준에서 볼 때, 현재 귀댁은 다음 중 어느 소득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하층
2) 중하층
3) 중간층
4) 중상층
5) 상층

Q01-7. 귀하께서 우리나라 전체 기준에서 볼 때, 성장할 당시(15세 무렵)에 귀댁은 다음 중 어느 소득 계층에 속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 하층
2) 중하층
3) 중간층
4) 중상층
5) 상층

Q01-8. 귀하는 현재 귀댁의 경제 상태가 5년 전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나빠졌다
2) 약간 나빠졌다
3) 거의 그대로이다
4) 약간 좋아졌다
5) 매우 좋아졌다

Q01-9. 귀하는 현재 귀댁의 경제 상태와 비교하여 5년 후에는 귀댁의 경제 상태가 어떻게 변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나빠질 것이다
2) 약간 나빠질 것이다
3) 거의 그대로일 것이다
4) 약간 좋아질 것이다
5) 매우 좋아질 것이다

Q01-10. 현재 귀하께서는 다음 사항에 얼마나 해당되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생활비가 부족하여 외출이나 모임에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한다	1	2	3	4	5
(2) 생활비가 부족하여 원하는 최소한의 문화생활도 즐길 수가 없다	1	2	3	4	5
(3) 생활하는 데 바빠서 취미생활을 잊고 지낸 지 오래되었다	1	2	3	4	5
(4) 형편이 어려워 필요한 옷을 사지 못한다	1	2	3	4	5
(5) 우리 지역에서 나보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다른 사람들을 보고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거나 박탈감을 느낀다	1	2	3	4	5

Q01-11.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농촌사회가 아주 부유한 소득계층과 아주 가난한 소득계층으로 양극화 되어(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 이하 Q02번으로
2) 대체로 그렇지 않다 ☞ 이하 Q02번으로
3) 보통이다 ☞ 이하 Q01-11-1번으로
4) 대체로 그렇다 ☞ 이하 Q01-11-1번으로
5) 매우 그렇다 ☞ 이하 Q01-11-1번으로

Q01-11-1. <문항 Q1-11에서 ③, ④, ⑤에 응답한 경우만>,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농촌사회 소득 양극화의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일자리 및 돈벌이 기회의 부족
2) 대농 위주의 농업정책
3) 농산물 시장 개방의 확대
4) 사각지대가 많은 사회보장제도
5) 학력 및 교육 수준의 차이
6) 건강문제로 인한 경제활동의 차이
7) 귀농귀촌인의 증가
8) 기타(무엇:)

Q01-11-2.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농촌사회 소득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발굴 및 확대
2) 기초연금의 확대
3) 중·소농 육성정책
4) 각종 직접지불제도의 확충
5) 농촌형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농업 및 농촌 실정에 맞게 개선
7) 기타(무엇:)

Part B. 사회적 소통

Q02-1. 귀하는 우리나라 농촌사회에서 다음 집단 간에 소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통이다	약간 이루어지고 있다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잘 모르겠다
(1) 고령층과 젊은 층 간의 소통	1	2	3	4	5	9
(2) 가족 간의 소통	1	2	3	4	5	9
(3) 이웃 및 마을주민 간의 소통	1	2	3	4	5	9
(4) 다문화가족과 기존 주민 간의 소통	1	2	3	4	5	9
(5) 귀농·귀촌인과 기존 주민 간의 소통	1	2	3	4	5	9
(6) 중앙정부와 농촌주민 간의 소통	1	2	3	4	5	9
(7) 국회와 농촌주민 간의 소통	1	2	3	4	5	9
(8) 시·군청과 농촌주민 간의 소통	1	2	3	4	5	9
(9) 읍·면사무소와 농촌주민 간의 소통	1	2	3	4	5	9

Q02-2. 귀하가 거주하는 마을에서는 마을공동사업이나 마을행사를 추진할 때 마을주민들 간에 의사소통이 얼마나 잘 이루지고 있습니까?

1)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2) 별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3) 그저 그렇다
4) 대체로 의사소통이 잘 된다
5) 매우 의사소통이 잘 된다

Part C. 사회갈등

Q03-1.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농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사회갈등이 어느 정도로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갈등 유형	매우 심하다	대체로 심하다	보통이다	별로 심하지 않다	전혀 심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1) 빈곤층과 부유층 간의 갈등	1	2	3	4	5	9
(2) 고령층과 젊은 층 간의 갈등	1	2	3	4	5	9
(3) 진보집단과 보수집단 간의 갈등	1	2	3	4	5	9
(4) 인접 지역들 간의 이해갈등	1	2	3	4	5	9
(5) 지역개발과 환경보존 간의 갈등	1	2	3	4	5	9
(6) 남성과 여성 간의 성별 갈등	1	2	3	4	5	9
(7) 다문화가족과 기존 주민 간의 갈등	1	2	3	4	5	9
(8) 귀농·귀촌인과 기존 주민 간의 갈등	1	2	3	4	5	9
(9) 노인들 간의 갈등	1	2	3	4	5	9
(10) 관광객과 지역주민 간의 갈등	1	2	3	4	5	9
(11) 시·군청 행정 담당자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	1	2	3	4	5	9

Q03-2. 귀하께서는 다음 사항이 지역사회(해당 시·군)에서 사회갈등을 일으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	보통	동의하는 편	매우 동의함
(1) 빈부격차 심화(소득 양극화)	1	2	3	4	5
(2) 장애인,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 문제	1	2	3	4	5
(3) 복지·의료서비스의 수급 불균형 문제	1	2	3	4	5
(4) 대중교통 부족과 이동 불편 문제	1	2	3	4	5
(5) 개인·집단 간의 상호이해와 포용 부족	1	2	3	4	5
(6) 이념이나 가치관의 충돌	1	2	3	4	5
(7) 이해 당사자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	1	2	3	4	5
(8) 갈등 조정 기구 및 갈등 조정 제도의 미비	1	2	3	4	5
(9) 읍지역과 면지역 간의 자원 차이	1	2	3	4	5
(10) 정치 성향(지지하는 정당)의 차이	1	2	3	4	5
(11) 시장·군수, 시·군 의원 선거후보의 정당공천	1	2	3	4	5

Part D. 사회적 자본과 사회참여

Q04-1. 귀하께서는 다음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지역에서 주민들이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이웃 간에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	1	2	3	4	5
(2)	나의 이웃들은 믿을 만하다	1	2	3	4	5
(3)	지역 공공기관(읍·면사무소, 시·군청, 보건소, 경찰서 등)은 믿을 만하다	1	2	3	4	5
(4)	나의 고민이나 문제를 상담해 줄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1	2	3	4	5
(5)	급히 돈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1	2	3	4	5
(6)	우리 지역은 주민들 모임이나 조직이 활발하다	1	2	3	4	5
(7)	우리 마을에는 자치규약이 있고, 주민들이 이를 잘 지킨다	1	2	3	4	5
(8)	우리 지역의 이웃들은 공중질서나 법을 잘 지킨다	1	2	3	4	5
(9)	우리 지역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1	2	3	4	5
(10)	우리 지역은 주민들 간의 갈등이나 싸움이 없다	1	2	3	4	5

Q04-2. 귀하께서는 다음 지역 단위에 대하여 얼마나 소속감을 느끼십니까?

지역 단위		소속감이 전혀 없다	소속감이 별로 없다	보통이다	소속감이 있는 편이다	소속감이 강하다
(1)	내가 사는 마을(행정리)	1	2	3	4	5
(2)	내가 사는 읍·면	1	2	3	4	5
(3)	내가 사는 시·군	1	2	3	4	5
(4)	내가 사는 도	1	2	3	4	5

Q04-3. 다음은 귀하의 마을공동체의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에 대하며 귀하께서 얼마나 동의하는지(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해 주십시오.

마을공동체의식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 마을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1	2	3	4	5

마을공동체의식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2)	나는 우리 마을의 구성원이라고 느낀다	1	2	3	4	5
(3)	우리 마을에서 사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	1	2	3	4	5
(4)	우리 마을에는 나를 걱정해 주는 이웃들이 있다	1	2	3	4	5
(5)	나는 우리 마을 사람들을 좋아한다	1	2	3	4	5
(6)	우리 마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 내 마음도 아프다	1	2	3	4	5
(7)	나는 우리 마을을 좋아한다	1	2	3	4	5
(8)	나는 우리 마을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9)	나는 우리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고 싶다	1	2	3	4	5
(10)	나는 우리 마을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낀다	1	2	3	4	5

Q04-4.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지역 모임이나 단체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십니까?

지역 모임·단체 활동		과거에도 현재도 활동한 적이 없다	과거에는 활동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하지 않는다	거의 활동하지 않는다	가끔 활동한다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1)	스포츠, 취미, 레저 모임 등 여가 문화 활동	1	2	3	4	5
(2)	지역 축제나 문화행사	1	2	3	4	5
(3)	동창 모임이나 향우회	1	2	3	4	5
(4)	종교 활동 단체	1	2	3	4	5
(5)	자원봉사 활동 단체	1	2	3	4	5
(6)	정당 활동	1	2	3	4	5
(7)	사회적 경제 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1	2	3	4	5
(8)	마을 회의나 행사(대동계, 반상회 등)	1	2	3	4	5
(9)	마을 내 영농 관련 경제활동(영농조합, 작목반 등)	1	2	3	4	5
(10)	농민단체(농민회, 한농연 등)	1	2	3	4	5
(11)	기타(무엇:)	1	2	3	4	5

Part E. 사회적 포용

Q05-1. 귀하께서는 외지 출신의 다음 구성원들을 자신의 이웃으로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구 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대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받아들일 수 있다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다
(1) 지체 장애인	1	2	3	4	5
(2) 정신 장애인	1	2	3	4	5
(3) 북한이탈주민	1	2	3	4	5
(4) 범죄 경력자	1	2	3	4	5
(5) 외국인 결혼 이민자	1	2	3	4	5
(6) 외국인 근로자	1	2	3	4	5
(7) 귀농·귀촌인	1	2	3	4	5

Q05-2.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시·군)은 외국인 이주자(외국인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대체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Q05-3.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시·군)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대체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Q05-4.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시·군)은 귀농·귀촌인에게도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대체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Q05-5. 귀하께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시·군)은 소외계층(빈곤층, 장애인 등)에게도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대체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Q05-6. 귀하가 거주하는 마을에서는 사회적 배경(나이, 성별, 종교, 다문화, 귀농귀촌인 등)에 상관없이 주민들이 잘 어울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대체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Part F.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및 향후 이용 의사

Q06-1. 다음과 같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귀하의 이용 경험 및 향후 이용 의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있다'와 '없다'로 표시된 응답 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사회복지서비스 내용			경험 여부		향후 이용 의사	
			없다	있다	없다	있다
Ⅰ. 소득 및 경제활동 관련 서비스	(1)	기초연금	1	2	1	2
	(2)	생계비 지원	1	2	1	2
	(3)	직업훈련, 취업 상담 및 알선	1	2	1	2
Ⅱ. 의식주 관련 서비스	(4)	주택 관련 서비스 (집수리, 도배 등)	1	2	1	2

(계속)

사회복지서비스 내용			경험 여부		향후 이용 의사	
			없다	있다	없다	있다
Ⅱ. 의식주 관련 서비스	(5)	물품 지원 (식료품, 의류, 가구 등)	1	2	1	2
	(6)	도시락(또는 반찬) 배달 서비스	1	2	1	2
	(7)	무료급식	1	2	1	2
	(8)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1	2	1	2
	(9)	장보기 대행	1	2	1	2
	(10)	이동세탁서비스	1	2	1	2
Ⅲ. 기타 서비스	(11)	의료비 지원	1	2	1	2
	(12)	교통수단 지원 (셔틀버스, 택시 등)	1	2	1	2
	(13)	생활상담 (고민, 갈등, 정신건강, 알코올 중독, 학대, 가정폭력 등 관련)	1	2	1	2
	(14)	기타(무엇:)	1	2	1	2
	(15)	기타(무엇:)	1	2	1	2

Q06-2. 다음과 같은 사회복지서비스 중에서 과거에 귀하가 서비스를 받고 싶었으나 받지 못한 서비스가 있으면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1) 기초연금
2) 생계비 지원
3) 직업훈련, 취업 상담·알선
4) 주택 관련 서비스
5) 물품 지원
6) 도시락 배달 서비스
7) 무료급식
8)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9) 장보기 대행
10) 이동세탁서비스
11) 의료비 지원
12) 교통수단 지원
13) 생활상담
14) 기타(무엇:)

Part G. 문화·여가

Q07-1. 지난 1년 동안 귀하께서 평일에 가장 많이 참여한 문화·여가활동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참여한 2개를 선택해주십시오. (,)

1) 문화예술 관람
2) 문화예술 활동 참여
3) 스포츠 관람
4) 스포츠 활동 참여
5) 여행·관광
6)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7) TV 시청, 라디오 청취
8) 종교 활동
9) 휴식
10) 사교활동
11) 사회봉사활동
12) 자기 개발
13) 기타(무엇:)

Q07-2. 지난 1년 동안 귀하께서 주말이나 휴일에 가장 많이 참여한 문화·여가활동 유형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참여한 2개를 선택해주십시오.

(,)

1) 문화예술 관람
2) 문화예술 활동 참여
3) 스포츠 관람
4) 스포츠 활동 참여
5) 여행·관광
6)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7) TV 시청, 라디오 청취
8) 종교 활동
9) 휴식
10) 사교활동
11) 사회봉사활동
12) 자기 개발
13) 기타(무엇:)

Q07-3. 귀댁에서 문화·여가생활 비용으로 매월 얼마의 비용을 지출합니까? 약 | | | | 만 원 정도

Q07-4. 귀하는 농촌에서 문화·여가생활을 자신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1) 전혀 못하고 있다
2) 대체로 못하고 있다
3) 그저 그렇다
4) 대체로 충분히 하고 있다
5) 매우 충분히 하고 있다

Q07-5. 귀하께서 앞으로 가장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은 무엇입니까? 가장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2개를 선택해주십시오.

(,)

1) 문화예술 관람
2) 문화예술 활동 참여
3) 스포츠 관람
4) 스포츠 활동 참여
5) 여행·관광
6)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7) TV 시청, 라디오 청취
8) 종교 활동
9) 휴식
10) 사교활동
11) 사회봉사활동
12) 자기 개발
13) 기타(무엇:)

Q07-6. 귀하께서 현재 농촌에서 문화·여가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1) 시간적 여유가 없다
2) 원하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없다
3) 비용이 부담된다
4) 교통이 불편하다
5)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6) 장애가 되는 것이 없다
7) 기타(무엇:)

Q07-7. 귀하께서는 자신의 전반적인 문화·여가생활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3) 그저 그렇다
4) 대체로 만족한다
5) 대단히 만족한다

Part H. 정치 참여

Q08-1. 귀하께서는 농업 및 농촌 관련 정치 현안에 관한 다음 활동들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농업 및 농촌 관련 정치 현안	지난 1년 동안 한 적이 있다	지난 1년은 아니지만 그보다 오래 전에 한 적이 있다	활동한 적은 전혀 없지만 향후 해볼 의향이 있다	활동한 적이 없으며 향후에도 할 의향이 없다
(1) 정치 현안에 대해 친구나 이웃 등과 이야기하기	1	2	3	4
(2) 블로그/온라인게시판 등 온라인상에 의견 올리기	1	2	3	4
(3) 중앙정부나 시·군청, 언론(신문사, 방송국 등)에 의견 제시하기	1	2	3	4
(4) 서명운동 참여(온라인 서명 포함)	1	2	3	4
(5) 탄원서/진정서/청원서를 직접 제출하기	1	2	3	4
(6) 시위(데모), 집회 등에 참여하기	1	2	3	4
(7) 시장·군수와의 토론에 참여	1	2	3	4
(8) 기타(무엇:)	1	2	3	4

Q08-2.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선거 때 투표하셨습니까?

선거 종류	투표했다	투표권이 있었지만 투표하지 않았다	모르겠다	투표권이 없었다
(1) 2014년 6월 시장, 군수, 도지사 등을 뽑는 지방선거	1	2	3	4
(2) 2016년 4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	1	2	3	4
(3) 2017년 5월 대통령선거	1	2	3	4

Q08-3. 귀하의 정치적(이념적) 성향은 어떠하십니까?

1) 매우 보수적이다
2) 대체로 보수적이다
3) 중도적이다
4) 대체로 진보적이다
5) 매우 진보적이다
6) 잘 모르겠다

Part I. 복지 및 삶의 질 만족도

Q09-1. 귀하가 사시는 지역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부문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께서 얼마나 만족하는지(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대체로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대체로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1)	보건의료서비스	1	2	3	4	5
(2)	사회복지서비스	1	2	3	4	5
(3)	교육 여건 (초·중학교, 사교육, 평생교육 여건)	1	2	3	4	5
(4)	주거생활 여건 (주택,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등)	1	2	3	4	5
(5)	교통 여건	1	2	3	4	5
(6)	경제활동 및 일자리	1	2	3	4	5
(7)	환경 및 경관	1	2	3	4	5
(8)	문화·여가생활 여건	1	2	3	4	5
(9)	안전 수준 (방범, 소방, 자연재해 대비 등)	1	2	3	4	5
(10)	전반적인 복지 및 삶의 질 수준	1	2	3	4	5

Q09-2. 귀하께서는 현재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행복하지 않다
2) 대체로 행복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행복하다
5) 매우 행복하다

Part J. 사회통합 인식 및 정부 건의사항

Q10-1. 귀하께서는 '사회통합'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다음 중 어떤 의미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만 선택해주십시오.

1)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사회가 되는 것
2) 각종 사회갈등이 해소되는 것
3) 편견과 차별 없이 함께 사는 것
4) 국가에 대한 애국심으로 단결하는 것
5) 법과 질서를 잘 지켜 사회가 평화롭게 안정되는 것
6) 잘 모르겠음
7) 기타(무엇:)

Q10-2. 귀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10만점에서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점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보통이다					매우 잘 이뤄지고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Q10-3.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이 잘 되기 위해서 다음 각각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잘 모르겠다
(1)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사회를 구축하는 것	1	2	3	4	5	9
(2) 각종 사회갈등을 잘 해결하는 것	1	2	3	4	5	9
(3)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것	1	2	3	4	5	9
(4)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을 갖게 하는 것	1	2	3	4	5	9
(5)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것	1	2	3	4	5	9

(계속)

항 목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잘 모르겠다
(6) 자유와 권리에 맞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1	2	3	4	5	9
(7) 외부에서 전입한 사람들을 잘 포용하는 것	1	2	3	4	5	9
(8)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	1	2	3	4	5	9
(9)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	1	2	3	4	5	9
(10)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	1	2	3	4	5	9
(11)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	1	2	3	4	5	9
(12)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	1	2	3	4	5	9
(13) 서로 다른 집단 간에 양보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	1	2	3	4	5	9
(14) 기타(무엇:)	1	2	3	4	5	9

Q10-4. 귀하께서는 현재 대비 향후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에 대하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 매우 나빠질 것이다
2) 약간 나빠질 것이다
3) 거의 그대로일 것이다
4) 약간 좋아질 것이다
5) 매우 좋아질 것이다

Q10-5. 귀하께서 농촌의 사회통합 증진과 관련하여 중앙정부나 시·군청 등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십시오.

Part K. 통계 처리를 위한 문항

※ 이제 끝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

DQ1. 현재 귀댁에서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수는 몇 명입니까? (본인 포함)
( )명

DQ2. 귀댁의 가구 형태는 무엇입니까?

1) 독신(1인)가구
2) 1세대 가구(부부)
3) 2세대 가구(부부+자녀)
4) 편부모+자녀
5) 3세대 가구(조부모+부부+자녀)
6) 조부모+손자녀
7) 기타(무엇:)

DQ3.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자
2) 여자

DQ4. 귀하의 연세는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 )세

DQ5.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중퇴 포함)

1) 무학(한글 모름)
2) 무학(한글 해독)
3) 초등(소·국민)학교 졸업
4) 중학교 졸업
5) 고등학교 졸업
6) 전문대학 졸업(중퇴 포함)
7) 4년제 대학 졸업(중퇴 포함) 이상

DQ6. 귀하의 결혼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1) 미혼
2) 기혼
3) 사별
4) 이혼
5) 별거
6) 기타(무엇:)

DQ7. (귀농·귀촌 가구만) 귀하의 귀농·귀촌 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농촌 출생 → 도시 취업 → 고향 귀농·귀촌
2) 농촌 출생 → 도시 취업 → 타 지역 귀농·귀촌
3) 도시 출생 → 도시 취업 → 귀농·귀촌
4) 기타(무엇:)

DQ8. (다문화 가구만) 귀하의 결혼 전 국적은 어느 나라입니까?

( )

DQ9. (다문화 가구만) 귀하께서 한국에서 사신 기간은 모두 몇 년 되었습니까?

총 ( )년

♣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참고문헌

강신욱·김안나·박능후·김은희·유진영. 2005.『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신욱·이현주·김석호·박수진·박은경. 2012.『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 사회통합위원회.

경기도농업기술원. 2017.『2017년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농촌자원분야)』.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관. 2015. 10. 28. 도정 브리핑 자료.

경상북도. 2016.『2016년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사업 추진계획』.

국민대통합위원회. 2014a.『국민대통합 종합 계획』.

_____. 2014b.『국민대통합 종합 계획 세부추진과제』.

_____. 2016a.『2016년도 국민통합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_____. 2016b.『2016 갈등해결 사례집』.

_____. 2017.『2013~2017년 국민대통합위원회 백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권중섭·장우환. 2011. "농촌관광마을 갈등구조에 관한 이론적 탐색."『동북아관광연구』7(1): 197-216.

김귀영. 2017. "2017년 귀농귀촌정책 추진 실태와 향후 계획."『2017년도 농어촌복지포럼 하계 학술세미나 발표 자료집』. pp. 5-14.

김문길. 2017. "사회갈등 및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과 시사점."『보건복지포럼』245: 37-49.

김미곤·여유진·김태완·정해식·우선희·김성아. 2014.『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 사회통합과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김상욱·강신욱·정영호·김안나·조명래·이주연·하태정. 2012.『사회통합 중장기 전략 개발 연구』. 사회통합위원회.

김병률·이용선·박준기. 2017. "2017년 10대 농정이슈."『농정포커스』제142호(2017. 1. 3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수석·마상진. 2010.『농업·농촌부문 공공갈등사례와 갈등관리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수석·허정회·한혜성. 2015.『농업·농촌 분야 사회갈등 관리 실태와 개선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순은. 2014.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의 폐해와 대안.”『공공정책연구』13(1): 1-32.

김안나·노대명·김미숙·신호성·김태완·강민희·이소정·홍민옥·원일·윤필경·유정예. 2008.『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계층 지원방안 연구: 사회적 배제의 역동성 및 다차원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연명. 2017. “문재인정부 사회정책 비전과 정책.”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발전 방향 심포지엄 자료집. pp. 1-19.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김정섭·이정해·김경인. 2017. “사회적 농업의 의의와 정책 방향.” 사회적 농업 토론회 자료집. pp. 1-5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완·정태식·김성아·이주미·김병철. 2017.『사회통합 실태의 도·농간 비교 분석』. (출간 예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심재만. 2004.『농업부문 사회갈등의 실태와 관리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노대명·이현주·강신욱·강은정·전지현·이은혜. 2009.『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및 추진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2013.『2013-2017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_____. 2016.『제4차(2016~2020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안)』.

_____. 2017.『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_____. 2017. 1. 6. “’17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농식품산업 육성방안 발표.” 보도자료.

_____. 2017. 9. 11. “농식품부 국정과제 및 현안대응을 위한 조직 운영 방식 개선.”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2017. 8. 30.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핵심정책토의 개최.” 보도자료.

농촌진흥청. 2017.『농어업인 복지실태 조사보고서 2016』.

박대식·마상진·심재만. 2006.『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대식·마상진. 2007. “사회적 배제론 관점에서의 농촌사회 양극화 분석.”『농촌경제』30(3): 1-26.

_____. 2012a.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시사점.”『농정포커스』제20호(2012. 5. 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_____. 2012b.『농촌사회의 공생발전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생발전 협동연구총서 12-01-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대식·조미형·한태녕. 2013.『농촌 노인일자리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대식. 2017.『일본 농촌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 및 지역 우수사례 출장조사 결과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대식·마상진·채상헌·최용재·최윤지·윤순덕·김경인. 2017.『사회적 경제 부문에 있어서 국내외의 귀농·귀촌 성공사례 조사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영준. 2013.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과 그 사례 연구.”『문화콘텐츠연구』14: 247-273.

박인권. 2015. “포용도시: 개념과 한국의 경험.”『공간과 사회』25(1): 95-139.

박진도. 2010. “한국농촌사회의 장기비전과 발전전략: 내발적 발전전략과 농촌사회의 통합적 발전.”『농촌사회』20(1): 163-194.

_____. 2011.『순환과 공생의 지역 만들기』. 교우사.

보건복지부. 2015.『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

_____. 2017a. 8. 28.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첫걸음.” 보도자료.

_____. 2017b. 9. 8. “‘포용적 복지국가’의 설계도 만든다!” 보도자료.

_____. 2017c.『2016년도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사례집』.

_____. 2017d.『2017 주요 업무 참고자료』.

성경륭·김재훈·김현철·박승후·박영범·송재호·윤황·장준호·정동일·정성훈·최상한·한동환.『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 모드를 위한 국가, 약자를 살리는 세상을 위하여』. 21세기북스.

소진광. 2004. “사회적 자본 측정지표에 관한 연구.”『한국지역개발학회지』16(1): 89-118.

송미령·박대식·김광선·성주인·조미형·심재헌·윤병석·정규형·류경선. 2013.『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1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사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민자혜. 2013.『농촌의 일자리 창출 사례 78선』. 연구자료 D34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조미형·심재헌·유은영·김나리. 2016.『농촌 취약계층 생활실태 조사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인하. 2016. “농촌성에 따른 귀농인과 원주민 간 갈등 내용과 갈등 해결 방식에 대한 연구.”『지역사회학』 17(3): 33-65.

심익섭·문황진. 2015. “IAD분석을 통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발전방안 연구: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지방정부연구』 19(1): 147-172.

여유진·김미곤·김태완·김문길·정해식·우선희·김성아·강규형·김병철·은재호·전홍규·정재훈. 2014.『국민대통합 종합 계획』. 국민대통합위원회.

여유진·정해식·김미곤·김문길·강지원·우선희·김성아. 2015.『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Ⅱ): 사회통합과 사회이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성가족부·관계부처합동. 2012.『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영양군종합자원봉사센터. 2017.『짜장면 시키신 마을 사업 계획서』. 내부자료.

유정규. 2017. “일본의 ‘집락영농’ 추진현황과 시사점.”『협동조합경영연구』 46: 81-115.

유찬희·박준기·김종인·박지연. 2016.『직접지불제 효과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1/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윤성이·장우영·민희·임유진. 2016.『일상생활 갈등의 유형화와 실천적 대응방안 연구』. 국민대통합위원회.

윤성주. 2014. “포용적 성장을 통한 경제성장: 소득불평등을 중심으로.”『재정포럼』: 22-34.

은재호·채종헌·윤종설·김성근·이광석·임인선·박재근. 2013.『선진국의 사회통합정책』. 한국행정연구원.

이석원·변재관·이인재·이문국·이은영·허수정·정솔·박혜경. 2016.『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성과평가 연구』. 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성순. 2011. “한국과 독일의 사회통합정책 연구: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중심으로.”『한국지역사회복지학』 38: 179-208.

이윤정. 2016. “네덜란드의 사회적 농업: 치유농업(care farming)을 중심으로.”『세계농업』 195: 31-47.

이재열·조병희·장덕진·유명순·우명숙·서형준. 2014. “사회통합: 개념과 측정, 국제비교.”『한국사회정책』 21(2): 113-149.

이정우. 2016. “성장지상주의를 넘어 포용의 경제로.”『황해문화』 겨울: 8-26.

이중섭. 2017.『전라북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정책세미나 자료.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전북연구원.

이태진·홍경준·김사현·유진영·손기철·박형존. 2010.『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호. 2013. “쌀직불제의 중장기 정책 방향.” 농경나눔터 농정시선. 2013년 2월호.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17a. 10. 18.『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_____. 2017b. 10. 18.『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_____. 2017. 10.『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임상규. 2012.『사회갈등, 사회통합에 대한 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임송수·김승애. 2016. “유럽의 사회적 농업 개관과 이탈리아의 사례.” 『세계농업』 195: 9-30.

장용석·조문석·정장훈·정명은. 2012. “사회통합의 다원적 가치와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가주의,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세계시민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6(5): 289-322.

전태국. 2014. “한국과 독일의 사회통합 비교: 불평등과 다문화주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53(2): 307-368.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정명희. 2017. “농촌노인의 자살시도경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정주진. 2015.『갈등 후 지역공동체 회복 방안 연구』. 연구기관 한국갈등학회. 국민대통합위원회.

정해식·김미곤·여유진·김문길·우선희·김성아. 2016.『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Ⅲ): 사회통합 국민 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2017.『2017 제주특별자치도 친 서민 농정시책 지원지침』.

조병구·이용수·이경영·이승주·어수하·박명호·오완근·장용석·박찬열·김신주·김미현. 2015.『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 15-02-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2010. 6. 2. 시행)』.

_____. 2012.『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2012. 12. 19. 시행)』

_____. 2012.『제19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2012. 4. 11. 시행)』.

_____. 2014.『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2014. 6. 4. 시행)』.

_____. 2016.『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_____. 2017.『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2017. 5. 9. 시행)』.

지은구·김민주. 2014.『복지국가와 사회통합』. 서울: 청목출판사.

진화경·고성룡. 2016. “진주시 무장애시설 인증기준을 적용한 공공시설 분석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8(5): 65-76.

진주시. 2017.『진주시 BF 인증제도』.

차미숙·임은선·김혜승·윤윤정·이현주·강신욱·전지현·박수진·김용웅·한승준·남윤우. 2011.『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적 대응과제: 지역사회통합지수개발 및 활용방안(총괄보고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07-01. 국토연구원.

최종혁·안태숙·이은희. 2010. “지역사회 사회자본 척도 개발을 위한 질적 연구: 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를 중심으로.”『한국사회복지학』 62(4): 297-324.

통계청. 2013.『자살인구추계』.

_____. 2017a. 8. 31.『2016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

_____. 2017b. 11. 7.『2017년 사회조사 결과』.

한국정책학회. 2016.『정부의 국민통합기능 강화방안』.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국행정연구원. 2016.『2016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한상미. 2007. “사회복지복지사들의 사회자본 측정도구 개발.”『사회복지연구』 33: 237-272.

한상진. 2013. “21세기 한국사회 변동전망과 사회통합의 방향.”『저스티스』 134(2): 43-60.

황선아·김종구·손지현. 2016. “포용도시를 위한 사회적·물리적 지표의 구축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대한토목학회논문집』 36(4): 735-745.

해남교육복지네트워크. 2017.『청소년, 벽을 넘어 세상과 소통하다! 2016년 청소년 활동 결과자료집』.

홍영란·김태준·현영섭·소진광·이승희. 2007.『사회적 자본 지표 개발 및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횡성군. 2017.『2017년도 새해 주요업무보고』.

Almedom, A. M.. 2005. “Social capital and mental health: An interdisciplinary review of primary evidence.” *Social Science & Medicine* 61(5): 943-964.

Berger-Schmitt, R.. 2000. *Social Cohesion as an Aspect of the Quality of Societies: Concept and Measurement*. Mannheim: Social Indicators Department.

Berghman, J.. 1998. *Social Protection and Social Quality in Europe*. The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_____. P.. 1999. *Social Cohesion: A Dialectical Critique of a Quasi-concept*. CPRN

Discussion Paper No. F-09. Ottawa: Canadian Policy Research Network.

Bjornstrom, E. S., Ralston, M., and Kuhl, D.. 2013. “Social cohesion and self-rated health: The moderating effect of neighborhood physical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52(3-4): 302-312.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and Education*. JG Richardson: Greenwood, New York.

Chan, J., To, H. P., and Chan, E.. 2006. “Reconsidering social cohesion: Developing a definition and analytical framework for empirical resear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75(2): 273-302.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European Committee for Social Cohesion. 2004. *A New Strategy for Social Cohesion: Revised Strategy for Social Cohesion*.

Ferlander, S.. 2007. “The importance of different forms of social capital for health.” *Acta Sociologica* 50(2): 115-128.

Harpham, T., Grant, E., and Thomas, E.. 2002. “Measuring social capital within health surveys: Key issues.” *Health Policy and Planning* 17(1): 106-111.

Hills, J., Le Grand, J., and Piachaud, D.. 2002. *Understanding Social Exclus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Jenson, J.. 1998. *Mapping Social Cohesion: The State of Canadian Research*. CPRN Study No. F/03. Ottawa: Canadian Policy Research Network.

Kawachi, I., Kennedy, B. P., Lochner, K., and Prothrow-Stith, D.. 1997. “Social capital, income inequality, and mortalit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7(9): 1491-1498.

Kim, D. and Kawachi, I.. 2006. “A multi-level analysis of key forms of community-and individual-level social capital as predictors of self-rated health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Urban Health* 83(5): 813-826.

Nyqvist, F., Gustavsson, J., and Gustafson, Y.. 2006. “Social capital and health in the oldest old.” *International Journal of Ageing Later Life* 1(1): 91-114.

OECD. 2013. *Strengthening Social Cohesion in Korea.*

_____. 2014. *Society at a Glance 2014.*

Paldam, M.. 2000. “Social capital: One or many? daefin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Economic Surveys 14(5): 629-653.

Portes, A..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1): 1-24.

Putnam, R..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35): 35-42.

Rajulton. F., Ravanera, Z. R., and Beaujot, R.. 2007. ‘Measuring social cohesion: An experiment using the Canadian national survey of giving, volunteering, and participat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80(3): 461-492.

Sen, A.. 1998. “Mortality as an indicator of economic success and failure.” *The Economic Journal* 108(446): 1-25.

Whitley, R. and McKenzie, K.. 2005. “Social capital and psychiatry: Review of the literature.” *Harvard Review of Psychiatry* 13(2): 71-84.

World Economic Forum. 2017. *The Inclusive Growth and Development Report 2017.* Insight Report.

<인터넷 자료>

경기일보. 2017. 3. 29. “경기도 농업기술원, 농촌마을 공동농장 조성지원.”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32729>. 검색일: 2017. 11. 20.

경남일보. 2017. 8. 10. “창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모에 선정.”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361>. 검색일: 2017. 10. 14.

경남도민일보. 2017. 5. 12. “진주시 무장애 도시 만들기 5년 ‘성과’.”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37593>. 검색일: 2017. 10. 14.

경북매일. 2017. 8. 30.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현 정부 국정과제 선정 지속가능 발전전략으로 전 국민 관심 일으킬 것.”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749>. 검색일: 2017. 10. 14.

경북일보. 2017. 3. 15. “영양군종합자원봉사센터, 오지마을 짜자면 배달.” <http://www.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87748>. 검색일: 2017. 10. 14.

경상남도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bravogsnd/photos/pcb.1046033758798031/1046032652131475/?type=3&theater>. 검색일: 2017. 11. 20.

고치현 쓰노정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tsuno-shakyo.or.jp/wdoc/?q=g

rp101>. 검색일: 2017. 11. 20.

농민신문. 2017. 8. 21. “귀농·귀촌인, 농촌서 다양한 갈등 겪어, 상황에 맞는 맞춤형 해법 필요.” <https://www.nongmin.com/news/NEWS/FLD/CNT/281517/view>. 검색일: 2017. 8. 21.

농촌여성신문. 2017. 2. 4. “일하고 싶은 어르신들 모여라: 농촌 마을공동농장.” <http://www.r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683>. 검색일: 2017. 10. 14.

연합뉴스. 2015. 5. 6. “다큐 ‘그림 그리는 해녀’ 휴스턴영화제 금상 수상.”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06/0200000000AKR20150506099200056.HTML>. 검색일: 2017. 11. 20.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 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 검색일: 2017a. 9. 26.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main.do>. 검색일: 2017b. 10. 1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http://kosis.kr/index/index.jsp>. 검색일: 2017. 10. 25.

파이낸셜투데이. 2013. 4. 8. “주문자와 생산자가 함께 먹는 ‘사회적 유통’ ...남원 새벽영농조합법인” <http://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92>. 검색일: 2017. 11. 10.

한겨레신문. 2017. 5. 15. “‘임산부·어르신들 거기 계세요’ 마을 찾아가는 주치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94714.html>. 검색일: 2017. 10. 14.

한국농어민신문. 2016. 1. 12. “2016 농업농촌, 희망엔진을 찾아라 <3> 협동으로 살아나는 마을공동체.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496>. 검색일: 2017. 11. 20.

한국농정. 2011. 5. 30. “이제는 ‘소농’이 중심이다”.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4100>. 검색일: 2017. 10. 25.

한국농정. 2015. 12. 7. “쌀 정책도 양극화... 대농은 정책 혜택·소농은 ‘소외’”.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4686>. 2017. 10. 25.

Caldwell, Wayne J., Kraehling, Paul, Kaptur, Suzanna and Huff, Jennifer. 2015. Healthy Rural Communities Tool Kit - A Guide for Rural Municipalities. University of Guelph, Guelph, Ontario. <https://www.publichealthontario.ca/en/ServicesAndTools/Documents/LDCP/HealthyRuralCommunitiesToolKit%20compressed.pdf>. 검색일: 2017. 10. 15.

City of Kawartha Lakes. 2014. Our Kawartha Lakes: Integrated Community

Sustainability Plan.
<https://www.kawarthalakes.ca/en/business-growth/resources/2014.04.12.__-_
_ICSP_AND_LAP_FINAL-2.pdf>. 검색일: 2017. 10. 15.

Gatestone Institute. <https://www.gatestoneinstitute.org/8145/germany-integration-law>.
검색일: 2017. 6. 20.